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CONTENTS

## 1

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제1장 위원회 구성 .....   | 6  |
| 제2장 심의·의결 절차 ..... | 11 |

## 2

부

### 심의·의결 현황

|                             |    |
|-----------------------------|----|
| 제1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     | 16 |
|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        | 16 |
| 1. 자체심의 .....               | 16 |
| 2. 시정요구심의 .....             | 18 |
| 3. 재심청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    | 18 |
| II. 자체심의 분석 .....           | 19 |
| 1. 위반유형별 분석 .....           | 19 |
| 2. 결정유형별 분석 .....           | 25 |
| 3. 매체유형별 분석 .....           | 30 |
| 제2장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 ..... | 32 |

# 3

부

## 종합평가

|                   |    |
|-------------------|----|
| 제1장 심의위원 평가 ..... | 44 |
| 제2장 결산 좌담 .....   | 56 |

# 4

부

## 심의·의결 사례

|                      |     |
|----------------------|-----|
|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 | 62  |
| 1. 경고결정문 게재 .....    | 62  |
| 2. 경고 .....          | 114 |
| 3. 주의 .....          | 134 |
| 4. 권고 .....          | 165 |
| 5. 안내문 송부 .....      | 166 |

## 부록

|                                |     |
|--------------------------------|-----|
|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182 |
|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           | 188 |
|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 200 |
| 4. 심의대상 매체 목록 .....            | 224 |
| 5. 색 인 .....                   | 227 |



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 1

## 위원회 구성

###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기사(사실, 논평, 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선거로 치러졌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한 2025년 6월 3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탄핵 결정 10일 후인 2025년 4월 14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25년 7월 3일까지 81일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 ■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구분                            | 운영기간                         | 선거일           | 비고  |
|-------------------------------|------------------------------|---------------|---|
| 제16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0. 2. 25. ~ 2000. 5. 13.  | 2000. 4. 13.  |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br>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2. 2. 14. ~ 2002. 7. 13.  | 2002. 6. 13.  |   |
| 제16대 대통령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2. 8. 21. ~ 2003. 1. 18.  | 2002. 12. 19. |   |
| 제17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3. 12. 17. ~ 2004. 5. 15. | 2004. 4. 15.  |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6. 1. 31. ~ 2006. 6. 30.  | 2006. 5. 31.  |   |
| 제17대 대통령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7. 8. 21. ~ 2008. 1. 18.  | 2007. 12. 19. |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7. 12. 11. ~ 2008. 5. 9.  | 2008. 4. 9.   |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0. 2. 1. ~ 2010. 7. 2.    | 2010. 6. 2.   |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br>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
|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0. 5. 29. ~ 2010. 8. 27.  | 2010. 7. 28.  | 20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br>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br>선심위 설치·운영 |
|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0. 8. 28. ~ 2010. 11. 26. | 2010. 10. 27. |   |

| 구분                           | 운영기간                         | 선거일           | 비고   |
|------------------------------|------------------------------|---------------|--|
|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1. 2. 26. ~ 2011. 5. 27.  | 2011. 4. 27.  |  |
|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1. 8. 27. ~ 2011. 11. 25. | 2011. 10. 26. |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1. 12. 12. ~ 2012. 5. 11. | 2012. 4. 11.  |  |
|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2. 2. 11. ~ 2012. 5. 11.  | 2012. 4. 11.  |  |
| 제18대 대통령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2. 4. 22. ~ 2013. 1. 18.  | 2012. 12. 19. |  |
|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2. 10. 20. ~ 2013. 1. 18. | 2012. 12. 19. |  |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3. 2. 23. ~ 2013. 5. 24.  | 2013. 4. 24.  |  |
|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3. 8. 31. ~ 2013. 11. 29. | 2013. 10. 30. |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4. 2. 3. ~ 2014. 7. 4.    | 2014. 6. 4.   |  |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4. 5. 31. ~ 2014. 8. 29.  | 2014. 7. 30.  |  |
|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4. 8. 30. ~ 2014. 11. 28. | 2014. 10. 29. |  |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5. 2. 28. ~ 2015. 5. 29.  | 2015. 4. 29.  |  |
|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5. 8. 29. ~ 2015. 11. 27. | 2015. 10. 28. |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5. 12. 14. ~ 2016. 5. 13. | 2016. 4. 13.  |  |
| 2016년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6. 2. 13. ~ 2016. 5. 13.  | 2016. 4. 13.  |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br>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br>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
| 2017년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7. 2. 11. ~ 2017. 5. 12.  | 2017. 4. 12.  |  |
| 제19대 대통령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7. 3. 20. ~ 2017. 6. 8.   | 2017. 5. 9.   | 2017. 3. 10. 현재 탄핵결정에<br>따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8. 2. 12. ~ 2018. 7. 13.  | 2018. 6. 13.  |  |
| 2018년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8. 4. 14. ~ 2018. 7. 13.  | 2018. 6. 13.  |  |
| 2019년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9. 2. 2. ~ 2019. 5. 3.    | 2019. 4. 3.   |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19. 12. 16. ~ 2020. 5. 15. | 2020. 4. 15.  |  |
| 2020년 재·보궐선거<br>선거사심의위원회     | 2020. 2. 15. ~ 2020. 5. 15.  | 2020. 4. 15.  |  |

| 구분                            | 운영기간                         | 선거일           | 비고                                  |
|-------------------------------|------------------------------|---------------|-------------------------------------|
| 2021년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1. 2. 6. ~ 2021. 5. 7.    | 2021. 4. 7.   |                                     |
| 제20대 대통령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1. 7. 11. ~ 2022. 4. 8.   | 2022. 3. 9.   |                                     |
| 2022년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2. 1. 8. ~ 2022. 4. 8.    | 2022. 3. 9.   |                                     |
|                               | 2022. 5. 9. ~ 2022. 7. 1.    | 2022. 6. 1.   |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2. 1. 31. ~ 2022. 7. 1.   | 2022. 6. 1.   |                                     |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3. 2. 4. ~ 2023. 5. 5.    | 2023. 4. 5.   |                                     |
|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3. 8. 12. ~ 2023. 11. 10. | 2023. 10. 11.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3. 12. 11. ~ 2024. 5. 10. | 2024. 4. 10.  |                                     |
|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4. 2. 10. ~ 2024. 5. 10.  | 2024. 4. 10.  |                                     |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4. 8. 17. ~ 2024. 11. 15. | 2024. 10. 16. |                                     |
|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5. 2. 1. ~ 2025. 5. 2.    | 2025. 4. 2.   |                                     |
| 제21대 대통령선거<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25. 4. 14. ~ 2025. 7. 3.   | 2025. 6. 3.   | 2025. 4. 4. 현재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

## 2. 구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2025. 2. 1. ~ 5. 2.) 중 출범하였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위촉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심의위원을 겸직하였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 성명  | 이력                         | 추천단체       |
|------|-----|----------------------------|------------|
| 위원장  | 박홍래 | (현)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언론중재위원회    |
| 부위원장 | 박혁진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위원   | 김준형 |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 더불어민주당     |
|      | 한기천 |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 국민의힘       |
|      | 박영흠 | (현)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한국언론학회     |
|      | 김민호 | (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
|      | 성기철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 한국신문협회     |
|      | 정화옥 | (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 정혜진 | (현)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앞줄 왼쪽부터) 성기철 심의위원, 박혁진 부위원장, 박홍래 심의위원장, 정화옥 심의위원, 김민호 심의위원  
 (뒷줄 왼쪽부터) 임종우 심의실장, 박영흠 심의위원, 김준형 심의위원, 정혜진 심의위원, 한기천 심의위원, 손정배 전 심의실장, 남승균 선거기사심의팀장

###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조치 관련 규정

| 제재조치     | 관련법률                   | 관련규칙             |
|----------|------------------------|------------------|
| 정정보도문 게재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
| 반론보도문 게재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8조의4 |                  |
| 경고결정문 게재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                  |
| 주의사실 게재  |                        |                  |
| 경고       |                        |                  |
| 주의       |                        |                  |
| 권고       |                        |                  |
| 안내문 송부   | -                      |                  |

## 2

## 심의·의결 절차

## 1. 자체심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인 선거기사심의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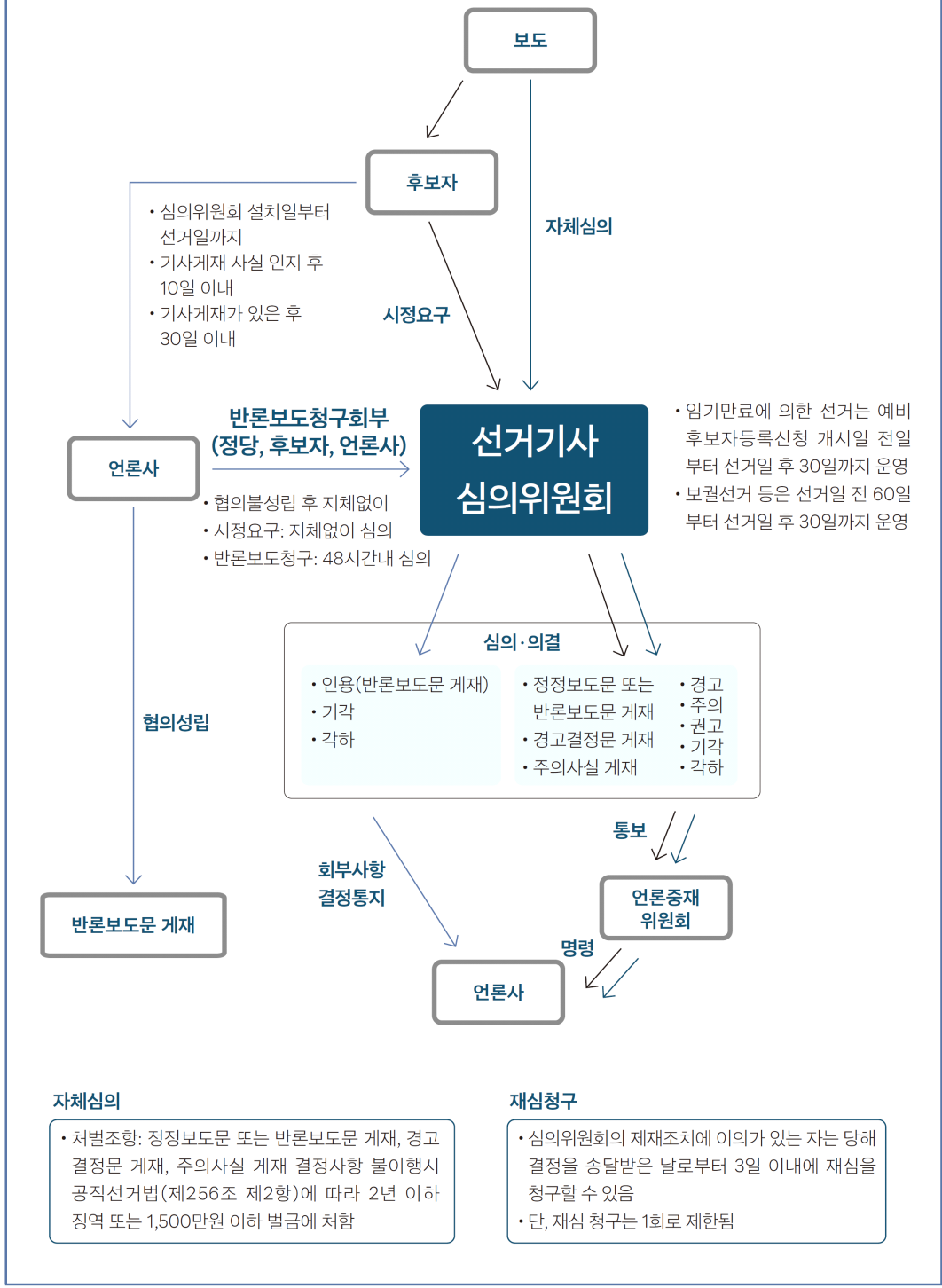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각각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 심의절차





부

# 심의·의결 현황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

제1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제2장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

# 1

##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 1. 자체심의

선거기사심의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기사심의팀 직원 및 모니터링 전담 심의원은 총 420개(중앙 일간지 31개, 지역 및 기타 일간지 134개, 중앙주간지 26개, 지역주간지 206개, 월간지 10개, 뉴스통신 13개)의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 사설·논평·광고 등을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기사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 26건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고, 총 25건의 제재조치와 1건의 안내문 송부를 의결하였다. 주의 조치가 15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건(23.1%), 경고결정문 게재 3건(11.5%), 권고 1건(3.8%) 순이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향후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안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건 1건(3.8%)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이 22건(84.6%),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4건(15.4%)이었다. 보도유형별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의견광고 및 상업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7건(6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일반 선거기사가 4건(15.4%),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이 3건(11.5%),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여론조사 보도가 1건(3.8%),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만평) 게재가 1건(3.8%)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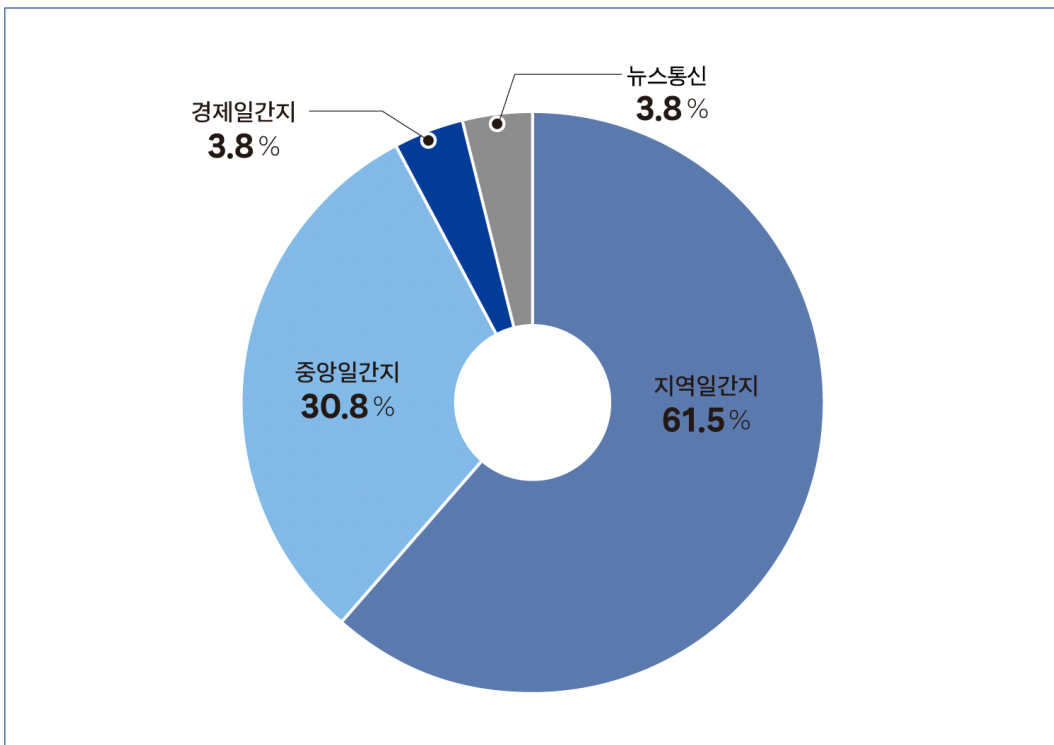
■ 회차별 자체심의 의결 현황

| 회차        | 계       | 위반유형<br>(일반 심의기준) |                      |            | 보도유형<br>(세부 심의기준) |                |          |               |          | 결정내용            |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객관성<br>및<br>사실<br>보도 | 정치적<br>중립성 | 일반<br>선거<br>기사    | 여론<br>조사<br>보도 | 사진<br>계재 | 칼럼<br>및<br>기고 | 광고<br>제한 | 경고<br>결정문<br>계재 | 주의<br>사실<br>계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안내문<br>송부 |
| 2차        | 20      | 18                | 2                    | -          | 1                 | 1              | -        | 1             | 17       | -               | -              | 4      | 15     | 1     | -         |
| 3차        | 6       | 4                 | 2                    | -          | 3                 | -              | 1        | 2             | -        | 3               | -              | 2      | -      | -     | 1         |
| 총계<br>(%) | 26      | 22                | 4                    | 0          | 4                 | 1              | 1        | 3             | 17       | 3               | 0              | 6      | 15     | 1     | 1         |
|           | (100.0) | (84.6)            | (15.4)               | (0.0)      | (15.4)            | (3.8)          | (3.8)    | (11.5)        | (65.4)   | (11.5)          | (0.0)          | (23.1) | (57.7) | (3.8) | (3.8)     |

※ 제1차 및 제4차 회의의 경우 자체심의 상정안건이 없었음

한편 매체유형별 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조치 대상이 된 매체 가운데 지역일간지가 16건 (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8건(30.8%), 경제일간지와 뉴스통신 각각 1건(3.8%) 순이었다.

■ 매체유형별 자체심의 의결 현황



| 간별         | 계  | 위반유형<br>(일반 심의기준) |                      |            | 보도유형<br>(세부 심의기준) |                |          |                    |          | 결정내용            |                |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객관성<br>및<br>사실<br>보도 | 정치적<br>중립성 | 일반<br>선거<br>기사    | 여론<br>조사<br>보도 | 사진<br>게재 | 칼럼<br>기고<br>및<br>등 | 광고<br>제한 | 경고<br>결정문<br>게재 | 주의<br>사실<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안내문<br>송부 |       |
| 일간         | 중앙 | 8                 | 8                    | -          | -                 | -              | -        | 1                  | -        | 7               | -              | -     | 4      | 3      | 1         | -     |
|            | 경제 | 1                 | 1                    | -          | -                 | -              | -        | -                  | -        | 1               | -              | -     | -      | 1      | -         | -     |
|            | 지역 | 16                | 12                   | 4          | -                 | 3              | 1        | -                  | 3        | 9               | 2              | -     | 2      | 11     | -         | 1     |
| 주간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간        | 중앙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 1                 | 1                    | -          | -                 | 1              | -        | -                  | -        | -               | 1              | -     | -      | -      | -         | -     |
| 총 계<br>(%) |    | 26                | 22                   | 4          | 0                 | 4              | 1        | 1                  | 3        | 17              | 3              | 0     | 6      | 15     | 1         | 1     |
|            |    | (100.0)           | (84.6)               | (15.4)     | (0.0)             | (15.4)         | (3.8)    | (3.8)              | (11.5)   | (65.4)          | (11.5)         | (0.0) | (23.1) | (57.7) | (3.8)     | (3.8) |

## 2. 시정요구심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자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보도내용 및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심의대상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없었다.

## 3. 재심청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없었으며, 지면과 홈페이지 등에 결정문의 게재를 명령한 사안들도 모두 원활히 이행되었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 또한 없었다.

## II 자체심의 분석

### 1. 위반유형별 분석

####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는 모두 22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기사의 유형은 크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를 게재하였거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사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을 게재한 사례, 특정 후보자 관련 성명서 등 홍보자료를 여러 일자에 걸쳐 그대로 게재한 사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평을 게재한 사례로 구분된다.

#### (1) 광고 제한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유형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견 광고 및 상업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중 16건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광고를 게재한 경우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라도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보도 건수, 매체 발행 부수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주의, 권고 등 차등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자에 관한 우호적인 내용과 함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상업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정 후보자가 지자체장으로서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의 저서를 광고하거나(광주일보, 제21대 대선-자심4), 후보자에 관한 우호적인 평가가 담긴 문구들과 함께 후보자의 저서를 광고(경기신문, 제21대 대선-자심8)하는 형식의 저술광고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저술광고가 국민일보(제21대 대선-자심7), 경기일보(제21대 대선-자심9), 경인일보(제21대 대선-자심10), 기호일보(제21대 대선-자심11), 대전일보(제21대 대선-자심12), 매일신문(제21대 대선-자심13), 문화일보(제21대 대선-자심14), 브릿지경제신문(제21대 대선-자심15), 인천일보(제21대 대선-자심16), 중부일보(제21대 대선-자심17), 중앙일보(제21대 대선-자심18)에도 게재되었고 모두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더라도 서로 다른 후보자에 관한 저술광고를 총 3건 게재한 조선일보(제21대 대선-자심5)와 총 2건 게재한 동아일보(제21대 대선-자심6)에 대해서는 매체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각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경향신문(제21대 대선-자심19)은 후보자 명의를 나타난 저술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에서 제재의 대상임은 명백하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저술한 도서에 대한 광고였다는 점에서 유사 안건들과 비교했을 때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권고 조치하였다.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1건(조선일보, 제21대 대선-자심20) 있었는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광고가 특정 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통해 타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 ■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1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4  | 광주일보 | 2025-04-14 | 17면         | 천원주택 인구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5  | 조선일보 | 2025-04-16 | 31면         |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한 시대에, 곳곳이 맞서 온 한 사람의 뜨거운 이야기 | 경고 |
|              |      | 2025-04-18 | 1면          |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    |
|              |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6  | 동아일보 | 2025-04-17 | 1면          |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 경고 |
|              |      | 2025-04-21 |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7  | 국민일보 | 2025-04-18 | 29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주의 |
|              |      | 2025-04-21 | 11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
|              |      | 2025-04-22 | 28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
| 제21대 대선-자심8  | 경기신문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      | 2025-04-21 | 1면<br>(인천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9  | 경기일보 | 2025-04-21 | 1면<br>(인천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      | 2025-04-21 | 7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10 | 경인일보 | 2025-04-21 | 1면<br>(2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      | 2025-04-21 | 1면<br>(1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11 | 기호일보    | 2025-04-21 | 1면<br>(1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         | 2025-04-21 | 1면<br>(2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12 | 대전일보    | 2025-04-21 |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13 | 매일신문    | 2025-04-21 | 9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14 | 문화일보    | 2025-04-21 | 31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15 | 브릿지경제신문 | 2025-04-23 | 18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16 | 인천일보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         | 2025-04-21 | 1면<br>(경기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17 | 중부일보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         | 2025-04-21 | 1면<br>(인천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제21대 대선-자심18 | 중앙일보    | 2025-04-21 |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19 | 경향신문    | 2025-04-25 | 26면         | 이재명의 서재                                   | 권고 |
| 제21대 대선-자심20 | 조선일보    | 2025-04-17 | 31면         | 김문수·한덕수·나경원 《드림팀》 만들라!<br>《성남 이재명파》 제압하라! | 경고 |

## (2)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칼럼이나 기고문을 게재한 사례 가운데 여러 일자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만을 보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의 보도에 대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전라매일(제21대 대선-자심3)과 경북연합일보(제21대 대선-자심24)는 모두 특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부각하면서 타 후보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칼럼과 기고문을 각 2건 게재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조치 이후에도 전라매일(제21대 대선-자심 21)은 동일 필진이 작성한 유사한 취지의 칼럼을 여러 일자에 걸쳐 총 7건 게재하는 등 위반을 반복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제재조치 이후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하여 특정 후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하였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수위를 상향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3  | 전라매일   | 2025-04-22 | 11면 |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 경고          |
|              |        | 2025-04-23 | 11면 |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             |
| 제21대 대선-자심21 | 전라매일   | 2025-04-29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 경고결정문<br>게재 |
|              |        | 2025-04-30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             |
|              |        | 2025-05-01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             |
|              |        | 2025-05-09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             |
|              |        | 2025-05-13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             |
|              |        | 2025-05-16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             |
|              |        | 2025-05-22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             |
| 제21대 대선-자심24 | 경북연합일보 | 2025-05-13 | 11면 | 김문수를 評한다                                | 경고          |
|              |        | 2025-05-21 | 11면 |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             |

(3)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 게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을 뉴스통신사 홈페이지 혹은 지면에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를 후보자에 유리 혹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물로 보아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외뉴스통신(제21대 대선-자심23)은 여러 일자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 및 칼럼 총 8건을 게재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면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른 뉴스통신 매체의 특성상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다량의 홍보물이 게재되는 경우 선거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내렸다.

■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 게재 사례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23 | 내외<br>뉴스<br>통신 | 2025-04-27 | 정치면   |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경고결정문<br>게재 |
|              |                | 2025-05-11 | 정치면   | [전문][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             |
|              |                | 2025-05-11 | 정치면   |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             |
|              |                | 2025-05-13 | 정치면   |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             |
|              |                | 2025-05-14 | 정치면   |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끕니다!"             |             |
|              |                | 2025-05-16 | 오피니언면 |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             |
|              |                | 2025-05-17 | 오피니언면 | [전문][김문수의 눈물]                                  |             |
|              |                | 2025-05-17 | 정치면   | [전문][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

#### (4)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평 게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보아 심의 및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유일보(제21대 대선-자심25)는 부정적인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물의 사진에 특정 후보자의 얼굴 그림을 합성한 만평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만평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결정을 내렸다.

####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평 게재 사례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25 | 자유일보 | 2025-05-16 | 14면 | 3권장악... | 경고 |

#### 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기준을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기사는 모두 4건이었다.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기준을 위반한 기사의 유형은 크게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비교평가 결과를 보도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서열화한 사례, 여론조사 보도의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은 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로 구분된다.

#### (1) 후보자 간 비교·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누락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선거 보도 영역에서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후보자 공약을 서열화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던 과거 사례 중에는 전문가나 무속인 등이 평가 주체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심의안건으로는 AI가 평가 주체가 되어 후보자 및 공약을 평가한 사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유형에 관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보도의 특성상 경미한 내용이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언론사가 AI를 활용하여 선거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노력과 책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투데이신문(제21대 대선-자심2)은 AI를 활용하여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AI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평가지표, 질의 방법 등 해당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채 별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서열화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언론사는 제재조치 이후에도 AI를 활용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후보자들의 어휘와 표현, 몸짓과 표정, 복장, 연설 방식, 발언 패턴 등을 비교하는 기사를 여러 건 게재하여 심의 안건으로 재차 상정되었다(제21대 대선-자심2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에 대해, 심의대상 기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요소들은 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에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AI의 분석에만 의존해 결과를 도출한 점을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만 제재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간 첨예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선 자심2 사례와 달리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요소를 서열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AI를 활용한 보도의 참신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문 송부를 결정하였다.

한편, 경북연합일보(제21대 대선-자심26)는 비교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한 질문이나 지표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AI를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점수화한 기사를 1면에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후보자들의 역량을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았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주목도가 높은 지면에 게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 후보자 간 비교·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사례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2  | 이투데이신문 | 2025-04-18 | 8면 | AI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 주의       |
| 제21대 대선-자심22 | 이투데이신문 | 2025-04-25 | 6면 | 불리한 질문엔... 말하리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 안내문 송부   |
|              |        | 2025-05-16 | 4면 | 李 '안정적 리더' ... 金 '기득권 탈피' ... 李 '젊은 전문가' |          |
|              |        | 2025-05-20 | 6면 |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          |
|              |        | 2025-05-23 | 6면 | 이재명 '무대 포용'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          |
| 제21대 대선-자심26 | 경북연합일보 | 2025-05-21 | 1면 |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 경고결정문 게재 |

## (2)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심의기준이 개정(2024. 10. 30.)된 이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해석 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만을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간경북신문(제21대 대선-자심1)은 총 3건의 여론조사 보도에서, 그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제목과 본문에 ‘1위’, ‘선두’ 등의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 ■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사례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결과 |
|-------------|--------|------------|----|-------------------------|----|
| 제21대 대선-자심1 | 일간경북신문 | 2025-04-18 | 6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 주의 |
|             |        | 2025-04-22 | 7면 |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    |
|             |        | 2025-04-25 | 1면 |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    |

## 2. 결정유형별 분석

### 가. 경고결정문 게재

자체심의 안건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경고결정문 게재로 총 3건(11.5%)이었다. 전라매일(제21대 대선-자심21)은 이미 한 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심의기준을 재차 위반하여 제재수위가 상향된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고, 내외뉴스통신(제21대 대선-자심23)은 성명서나 지지선언문 전문 등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다수의 홍보물을 그대로 게재하고 해당 후보자에 우호적인 칼럼을 보도하여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경북연합일보(제21대 대선-자심26)는 AI(ChatGPT)를 활용하여 후보자 간 역량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평가한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도하였으나, 해당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기사에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한 추가 설명 없이 그래프 이미지만을 1면에 보도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 사례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위반유형          | 보도유형       |            |
|--------------|------------|------------|-----------|--|---------------|------------|------------|
| 제21대 대선-자심21 | 전라매일       | 2025-04-29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 공정성 및<br>형평성  | 칼럼 및<br>기고 |            |
|              |            | 2025-04-30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               |            |            |
|              |            | 2025-05-01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               |            |            |
|              |            | 2025-05-09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               |            |            |
|              |            | 2025-05-13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               |            |            |
|              |            | 2025-05-16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               |            |            |
|              |            | 2025-05-22 | 11면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               |            |            |
| 제21대 대선-자심23 | 내외뉴스<br>통신 | 2025-04-27 | 정치면       |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공정성 및<br>형평성  | 일반<br>선거기사 |            |
|              |            | 2025-05-11 | 정치면       | [전문][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               |            |            |
|              |            | 2025-05-11 | 정치면       |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               |            |            |
|              |            | 2025-05-13 | 정치면       |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               |            |            |
|              |            | 2025-05-14 | 정치면       |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아깝니다!              |               | 칼럼 및<br>기고 |            |
|              |            | 2025-05-16 | 오피<br>니언면 |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               |            |            |
|              |            | 2025-05-17 | 오피<br>니언면 | [전문][김문수의 눈물]                                  |               |            | 일반<br>선거기사 |
|              |            | 2025-05-17 | 정치면       | [전문][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            |            |
| 제21대 대선-자심26 | 경북연합<br>일보 | 2025-05-21 | 1면        |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 객관성 및<br>사실보도 | 일반<br>선거기사 |            |

나. 경 고

자체심의 안건 중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6건(23.1%)이었고,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유형이었다. 전라매일(제21대 대선-자심3)과 경북연합일보(제21대 대선-자심24)는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자유일보(제21대 대선-자심25)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재구성한 만평을 게재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광고제한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저술을 여러 차례 광고한 조선일보(제21대 대선-자심5)와 동아일보(제21대 대선-자심6)에 경고 조치하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저술광고 이외에도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제21대 대선-자심20) 경고 조치를 받았다.

■ 경고 조치 사례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위반유형         | 보도유형       |
|--------------|--------|------------|-----|---|--------------|------------|
| 제21대 대선-자심3  | 전라매일   | 2025-04-22 | 11면 |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 공정성 및<br>형평성 | 칼럼 및<br>기고 |
|              |        | 2025-04-23 | 11면 |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              |            |
| 제21대 대선-자심5  | 조선일보   | 2025-04-16 | 31면 |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한 시대에, 곳곳이 맞서 온 한 사람의 뜨거운 이야기 | 공정성 및<br>형평성 | 광고<br>제한   |
|              |        | 2025-04-18 | 1면  |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              |            |
|              |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6  | 동아일보   | 2025-04-17 | 1면  |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 공정성 및<br>형평성 | 광고<br>제한   |
|              |        | 2025-04-21 |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20 | 조선일보   | 2025-04-17 | 31면 | 김문수·한덕수·나경원 《드림팀》 만들라!<br>《성남 이재명파》 제압하라! | 공정성 및<br>형평성 | 광고<br>제한   |
| 제21대 대선-자심24 | 경북연합일보 | 2025-05-13 | 11면 | 김문수를 쫓는다                                  | 공정성 및<br>형평성 | 칼럼 및<br>기고 |
|              |        | 2025-05-21 | 11면 |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              |            |
| 제21대 대선-자심25 | 자유일보   | 2025-05-16 | 14면 | 3권장악...                                   | 공정성 및<br>형평성 | 사진<br>계재   |

다. 주 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중 가장 많았던 조치는 주의다. 자체심의 안전의 절반 이상인 15건(57.7%)에 해당하며, 그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광고를 게재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가 앞서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1건(일간경북신문, 제21대 대선-자심1),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며 별점을 매기는 등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면서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사례가 1건(이투데이신문, 제21대 대선-자심2) 있었다.

■ 주의 조치 사례 (1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위반유형       | 보도유형    |
|--------------|---------|------------|----------|---|------------|---------|
| 제21대 대선-자심1  | 일간경북신문  | 2025-04-18 | 6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 객관성 및 사실보도 | 여론조사 보도 |
|              |         | 2025-04-22 | 7면       |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            |         |
|              |         | 2025-04-25 | 1면       |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            |         |
| 제21대 대선-자심2  | 이투데이신문  | 2025-04-18 | 8면       | SI에 AI 공약 몰았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 객관성 및 사실보도 | 일반 선거기사 |
| 제21대 대선-자심4  | 광주일보    | 2025-04-14 | 17면      | 천원주택 인구조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제21대 대선-자심7  | 국민일보    | 2025-04-18 | 29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11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         |
|              |         | 2025-04-22 | 28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         |
| 제21대 대선-자심8  | 경기신문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1면 (인천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9  | 경기일보    | 2025-04-21 | 1면 (인천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7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10 | 경인일보    | 2025-04-21 | 1면 (2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1면 (1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11 | 기호일보    | 2025-04-21 | 1면 (1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1면 (2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12 | 대전일보    | 2025-04-21 |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제21대 대선-자심13 | 매일신문    | 2025-04-21 | 9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제21대 대선-자심14 | 문화일보    | 2025-04-21 | 31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제21대 대선-자심15 | 브릿지경제신문 | 2025-04-23 | 18면      | 난세의 영웅 김문수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제21대 대선-자심16 | 인천일보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1면 (경기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17 | 충부일보    | 2025-04-21 | 1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              |         | 2025-04-21 | 1면 (인천판)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         |
| 제21대 대선-자심18 | 중앙일보    | 2025-04-21 |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 광고 제한   |

라. 권 고

자체심의 안전 중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광고 제한 1건(3.8%)이 있었다. 권고 결정은 제재조치 중에서도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인데, 경향신문(제21대 대선-자심19)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타 광고제한 위반 사례와 보도유형은 동일하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저술한 도서를 광고했다는 점에서 유사 안전들과 달리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조치를 내렸다.

■ 권고 조치 사례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위반유형         | 보도유형     |
|--------------|------|------------|-----|---------|--------------|----------|
| 제21대 대선-자심19 | 경향신문 | 2025-04-25 | 26면 | 이재명의 서재 | 공정성 및<br>형평성 | 광고<br>제한 |

마. 안내문 송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 및 심의기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나 향후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기준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결정 외에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 송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내문 송부는 총 1건(3.8%) 있었는데, AI를 활용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후보자들의 어휘와 표현, 몸짓과 표정, 복장, 연설 방식, 발언 패턴 등을 비교하는 기사를 여러 건 게재한 경우였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기보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독창적 보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내문 송부를 조치하여 향후 유사한 유형의 보도 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안내문 송부 조치 시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을 함께 송부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안내문 송부 조치 사례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위반유형          | 보도유형      |
|--------------|--------|------------|----|--|---------------|-----------|
| 제21대 대선-자심22 | 이투데이신문 | 2025-04-25 | 6면 | 불리한 질문엔... 말흐리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 객관성 및<br>사실보도 | 안내문<br>송부 |
|              |        | 2025-05-16 | 4면 | 李 '인정적 리더' ... 金 '기득권 탈피' ... 李 '젊은 전문가' |               |           |
|              |        | 2025-05-20 | 6면 |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               |           |
|              |        | 2025-05-23 | 6면 |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               |           |

### 3. 매체유형별 분석

자체심의 대상매체 420개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매체는 총 22개였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7개, 경제일간지 1개, 지역일간지 13개, 뉴스통신 1개였다.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4곳으로, 경북연합일보, 전라매일, 조선일보가 각 2건의 제재를 받았고, 이투데이신문은 1건의 제재와 1건의 안내문 송부 조치를 받았다.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조치는 총 8건으로, 경고 4건, 주의 3건, 권고 1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8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이었으며, 보도유형별로는 광고 제한이 7건이었고 사진 게재가 1건이었다.

지역일간지는 총 15건의 제재조치를 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경고결정문 게재 2건, 경고 2건, 주의 1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이 12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3건이었으며, 보도유형별로는 광고제한 9건, 일반선거기사와 칼럼 및 기고 등이 3건, 일반 선거기사 2건, 여론조사 보도가 1건이었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일반 선거기사 1건에 대해서는 안내문 송부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경제일간지와 뉴스통신에 대한 각 1건의 제재결정이 있었는데, 경제일간지는 주의, 뉴스통신은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2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이었으며, 보도유형별로는 경제일간지의 광고 제한이 1건, 뉴스통신에 게재된 일반 선거기사가 1건 있었다.

■ 매체별 의결 현황\_ 자체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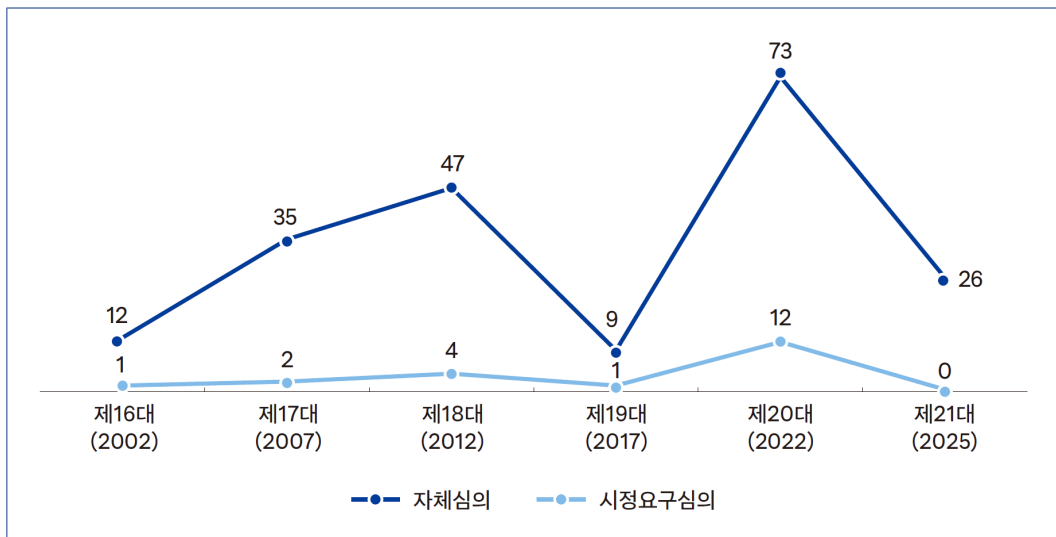
| 매체명               |         | 구분     | 위반유형<br>(일반 심의기준) |                      | 보도유형<br>(세부 심의기준) |          |          |                    | 결정내용     |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객관성<br>및<br>사실<br>보도 | 일반<br>선거<br>기사    | 여론<br>조사 | 사진<br>게재 | 칼럼<br>및<br>기고<br>등 | 광고<br>제한 | 경고<br>결정문<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중앙<br>일간지<br>(7)  | 경향신문    | 1      | -                 | -                    | -                 | -        | -        | 1                  | -        | -               | -      | 1     | -     |
|                   | 국민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동아일보    | 1      | -                 | -                    | -                 | -        | -        | 1                  | -        | 1               | -      | -     | -     |
|                   | 문화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자유일보    | 1      | -                 | -                    | -                 | 1        | -        | -                  | -        | 1               | -      | -     | -     |
|                   | 조선일보    | 2      | -                 | -                    | -                 | -        | -        | 2                  | -        | 2               | -      | -     | -     |
|                   | 중앙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소계      | 8      | 0                 | 0                    | 0                 | 1        | 0        | 7                  | 0        | 4               | 3      | 1     | 0     |
| 경제<br>일간지<br>(1)  | 브릿지경제신문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소계      | 1      | 0                 | 0                    | 0                 | 0        | 0        | 1                  | 0        | 0               | 1      | 0     | 0     |
| 지역<br>일간지<br>(13) | 경기신문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경기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경북연합일보  | 1      | 1                 | 1                    | -                 | -        | 1        | -                  | 1        | 1               | -      | -     | -     |
|                   | 경인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광주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기호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대전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매일신문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이투데이    | -      | 2                 | 2                    | -                 | -        | -        | -                  | -        | -               | 1      | -     | 1     |
|                   | 인천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일간경북신문  | -      | 1                 | -                    | 1                 | -        | -        | -                  | -        | -               | 1      | -     | -     |
|                   | 전라매일    | 2      | -                 | -                    | -                 | -        | 2        | -                  | 1        | 1               | -      | -     | -     |
| 중부일보              |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 소계      | 12     | 4                 | 3                    | 1                 | 0        | 3        | 9                  | 2        | 2               | 11     | 0     | 1     |
| 뉴스<br>통신<br>(1)   | 내외뉴스통신  | 1      | -                 | 1                    | -                 | -        | -        | -                  | 1        | -               | -      | -     | -     |
|                   | 소계      | 1      | 0                 |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 총계<br>(%)         | 22개 매체  | 22     | 4                 | 4                    | 1                 | 1        | 3        | 17                 | 3        | 6               | 15     | 1     | 1     |
|                   | 26건     | (84.6) | (15.4)            | (15.4)               | (3.8)             | (3.8)    | (11.5)   | (65.4)             | (11.5)   | (23.1)          | (57.7) | (3.8) | (3.8) |

# 2

##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등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제16대부터 제21대까지 총 6차례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 ■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



각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수는 제16대 13건, 17대 37건, 제18대 51건, 제19대 10건, 제20대 85건이었고, 제21대는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결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대통령 궐위에 의하여 실시된 제19대와 제21대를 제외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총 272일간 운영되는데, 제19대와 제21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81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설치·운영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

의위원회 또한 통상의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대비 의결 건수가 적은 편이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제19대 보다 의결건수가 증가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을 기반으로 보도의 분량 및 건수, 매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보도 형태 가운데 심의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는 안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보도 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결정 하였다.

앞으로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급변하는 선거 보도 환경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선거보도 문화가 정착되도록 선거기사 심의제도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 1.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별 심의·의결 현황

### 가. 제16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2002. 12. 19.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2002. 8. 21. ~ 2003. 1. 18.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12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 등 총 1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 ■ 자체심의

| 간별   | 계       | 위반유형            |                |          |          | 결정내용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여론<br>조사<br>보도 | 광고<br>제한 | 외부<br>기고 | 경고<br>결정문<br>게재 | 주의<br>사실<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일간지  | 중앙      | 2               | -              | 2        | -        | -               | -              | 1      | 1      | -     |
|      | 지역      | 1               | -              | 1        | -        | -               | -              | 1      | -      | -     |
| 주간지  | 종합      | 6               | 5              | 1        | -        | -               | -              | 1      | 5      | -     |
|      | 지역      | 2               | 1              | 1        | -        | -               | -              | -      | 2      | -     |
| 월간지  | 0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1       | -               | 1              | -        | -        | -               | -              | -      | 1      | -     |
| 계    | 12      | 6               | 6              | 0        | 0        | 0               | 0              | 3      | 9      | 0     |
| %    | (10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25.0) | (75.0) | (0.0) |

#### ■ 시정요구심의

| 간별   | 계       | 처리결과        |             |       |         |       |       |    |
|------|---------|-------------|-------------|-------|---------|-------|-------|----|
|      |         | 정정보도문<br>게재 | 반론보도문<br>게재 | 경고    | 주의      | 취하    | 기각    | 각하 |
| 일간지  | 중앙      | 0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주간지  | 종합      | 0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월간지  | 1       | -           | -           | -     | 1       | -     | -     |    |
| 뉴스통신 | 0       | -           | -           | -     | -       | -     | -     |    |
| 계    | 1       | 0           | 0           | 0     | 1       | 0     | 0     |    |
| %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

나. 제17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2007. 12. 19.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2007. 8. 21. ~ 2008. 1. 18.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35건과 시정요구심의 2건 등 총 37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 간별   |    | 계       | 위반유형            |                |          |          | 결정내용            |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여론<br>조사<br>보도 | 광고<br>제한 | 외부<br>기고 | 경고<br>결정문<br>게재 | 주의<br>사실<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일간지  | 중앙 | 4       | 1               | -              | 3        | -        | -               | -              | 3      | 1      | -     |
|      | 지역 | 19      | 15              | 4              | -        | -        | 1               | -              | 6      | 11     | 1     |
| 주간지  | 종합 | 8       | 8               | -              | -        | -        | -               | -              | 3      | 5      | -     |
|      | 지역 | 2       | 2               | -              | -        | -        | -               | -              | 1      | 1      | -     |
| 월간지  |    | 2       | 2               | -              | -        | -        | 1               | -              | -      | 1      | -     |
| 뉴스통신 |    | 0       | -               | -              | -        | -        | -               | -              | -      | -      | -     |
| 계    |    | 35      | 28              | 4              | 3        | 0        | 2               | 0              | 13     | 19     | 1     |
| %    |    | (100.0) | (80.0)          | (11.4)         | (8.6)    | (0.0)    | (5.7)           | (0.0)          | (37.1) | (54.3) | (2.9) |

■ 시정요구심의

| 간별   |    | 처리결과    |             |             |       |       |       |       |       |
|------|----|---------|-------------|-------------|-------|-------|-------|-------|-------|
|      |    | 계       | 정정보도문<br>게재 | 반론보도문<br>게재 | 경고    | 주의    | 취하    | 기각    | 각하    |
| 일간지  | 중앙 | 1       | -           | 1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주간지  | 종합 | 1       | -           | 1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월간지  |    | 0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 0       | -           | -           | -     | -     | -     | -     | -     |
| 계    |    | 2       | 0           | 2           | 0     | 0     | 0     | 0     | 0     |
| %    |    | (10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다. 제18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2012. 12. 19.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2012. 4. 22. ~ 2013. 1. 18.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47건과 시정요구심의 4건 등 총 5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 간별   |    | 계       | 위반유형      |       |          |        |       |        | 결정내용    |        |        |        |
|------|----|---------|-----------|-------|----------|--------|-------|--------|---------|--------|--------|--------|
|      |    |         | 공정성 및 형평성 | 사실 보도 | 여론 조사 보도 | 정책 비교  | 기고 위반 | 의견 광고  | 사과문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일간지  | 중앙 | 22      | -         | -     | 6        | 6      | -     | 10     | -       | 2      | 14     | 6      |
|      | 지역 | 16      | 5         | 1     | 5        | 1      | 4     | -      | 1       | 3      | 8      | 4      |
| 주간지  | 종합 | 4       | 3         | -     | 1        | -      | -     | -      | -       | 1      | 3      | -      |
|      | 지역 | 1       | 1         | -     | -        | -      | -     | -      | -       | 1      | -      | -      |
|      | 특수 | 1       | -         | -     | -        | 1      | -     | -      | -       | -      | 1      | -      |
| 월간지  |    | 2       | 2         | -     | -        | -      | -     | -      | -       | 1      | 1      | -      |
| 뉴스통신 |    | 1       | 1         | -     | -        | -      | -     | -      | -       | -      | -      | 1      |
| 계    |    | 47      | 12        | 1     | 12       | 8      | 4     | 10     | 1       | 8      | 27     | 11     |
| %    |    | (100.0) | (25.5)    | (2.1) | (25.5)   | (17.0) | (8.5) | (21.3) | (2.1)   | (17.0) | (57.4) | (23.4) |

\* '사과문 게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7. 30., 2013헌가8)에 따라 2017. 2. 13.자 선거기사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제재결정 유형에서 삭제되었음

■ 시정요구심의

| 간별   |    | 계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정정 보도문 게재 | 반론 보도문 게재 | 경고 결정문 게재 | 주의 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취하     | 기각     | 각하     |   |
| 일간지  | 중앙 | 3       | 1         | -         | -         | -        | -     | -     | -     | -      | -      | 1      | 1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 - |
| 주간지  | 종합 | 0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 - |
| 월간지  |    | 1       | -         | -         | -         | -        | -     | -     | -     | 1      | -      | -      |   |
| 뉴스통신 |    | 0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4       | 1         | 0         | 0         | 0        | 0     | 0     | 0     | 1      | 1      | 1      |   |
| %    |    | (100.0) | (25.0)    | (0.0)     | (0.0)     | (0.0)    | (0.0) | (0.0) | (0.0) | (25.0) | (25.0) | (25.0) |   |

라. 제19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2017. 5. 9.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2017. 3. 20. ~ 6. 8.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60일 만에 실시됨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심의위원회 운영기간보다 짧은 81일간 운영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9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 등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 간별   | 계       | 위반유형         |               |          |       | 결정내용            |                |        |        |        |   |
|------|---------|--------------|---------------|----------|-------|-----------------|----------------|--------|--------|--------|---|
|      |         | 공정성 및<br>형평성 | 객관성 및<br>사실보도 | 광고<br>제한 | 기고 등  | 경고<br>결정문<br>계재 | 주의<br>사실<br>계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 일간지  | 중앙      | 2            | 1             | -        | 1     | -               | -              | -      | -      | 1      | 1 |
|      | 지역      | 4            | 3             | -        | 1     | -               | -              | -      | -      | 2      | 2 |
| 주간지  | 종합      | 3            | 1             | 1        | 1     | -               | -              | -      | 2      | -      | 1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 특수      | 0            | -             | -        | -     | -               | -              | -      | -      | -      | - |
| 월간지  | 0       |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0       | -            | -             | -        | -     | -               | -              | -      | -      | -      |   |
| 계    | 9       | 5            | 1             | 3        | 0     | 0               | 0              | 2      | 3      | 4      |   |
| %    | (100.0) | (55.6)       | (11.1)        | (33.3)   | (0.0) | (0.0)           | (0.0)          | (22.2) | (33.3) | (44.4) |   |

■ 시정요구심의

| 간별   | 계       | 처리결과            |                 |                 |                |         |       |       |       |       |   |
|------|---------|-----------------|-----------------|-----------------|----------------|---------|-------|-------|-------|-------|---|
|      |         | 정정<br>보도문<br>계재 | 반론<br>보도문<br>계재 | 경고<br>결정문<br>계재 | 주의<br>사실<br>계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취하    | 기각    |   |
| 일간지  | 중앙      | 1               | -               | -               | -              | -       | 1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주간지  | 종합      | 0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월간지  | 0       |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0       | -               | -               | -               | -              | -       | -     | -     | -     | -     |   |
| 계    |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
| %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

마. 제20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2022. 3. 9.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2021. 7. 11. ~ 2022. 4. 8.

2020년 5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유형과 보도유형을 구분하고, 일반선거기사 조항을 신설하여 기사유형에 따라 세부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정유형에 '안내문 송부'를 추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 첫 대통령선거로, 자체심의 73건과 시정요구심의 12건 등 총 85건을 조치하였다.

■ 자체심의

| 간별         | 계  | 위반유형<br>(일반 심의기준) |                      |            | 보도유형<br>(세부 심의기준) |                |                      |          |                    |          | 결정내용            |                |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객관성<br>및<br>사실<br>보도 | 정치적<br>중립성 | 일반<br>선거<br>기사    | 여론<br>조사<br>보도 | 인터뷰<br>및<br>인용<br>기사 | 사진<br>게재 | 칼럼<br>및<br>기고<br>등 | 광고<br>제한 | 경고<br>결정문<br>게재 | 주의<br>사실<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안내문<br>송부 |       |
| 일간지        | 중앙 | 18                | 7                    | 11         | -                 | 1              | 9                    | 1        | -                  | -        | 7               | -              | 1     | 3      | 14     | -         | -     |
|            | 지역 | 43                | 20                   | 23         | -                 | 7              | 23                   | -        | 1                  | 10       | 2               | -              | 3     | 11     | 26     | 2         | 1     |
| 주간지        | 종합 | 3                 | 2                    | 1          | -                 | 1              | 1                    | -        | -                  | 1        | -               | -              | -     | 1      | 2      | -         | -     |
|            | 지역 | 3                 | 2                    | 1          | -                 | 1              | 1                    | -        | -                  | 1        | -               | -              | -     | 2      | 1      | -         | -     |
| 월간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 6                 | -                    | 6          | -                 | -              | 6                    | -        | -                  | -        | -               | -              | -     | 6      | -      | -         | -     |
| 총 계<br>(%) |    | 73                | 31                   | 42         | 0                 | 10             | 40                   | 1        | 1                  | 12       | 9               | 0              | 4     | 17     | 49     | 2         | 1     |
|            |    | (100.0)           | (42.5)               | (57.5)     | (0.0)             | (13.7)         | (54.8)               | (1.4)    | (1.4)              | (16.4)   | (12.3)          | (0.0)          | (5.5) | (23.3) | (67.1) | (2.7)     | (1.4) |

■ 시정요구심의

| 간별   | 계  | 처리결과            |                 |                 |                |       |        |        |       |       |        |
|------|----|-----------------|-----------------|-----------------|----------------|-------|--------|--------|-------|-------|--------|
|      |    | 정정<br>보도문<br>게재 | 반론<br>보도문<br>게재 | 경고<br>결정문<br>게재 | 주의<br>사실<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취하    | 기각    |        |
| 일간지  | 중앙 | 12              | -               | -               | -              | -     | 3      | 2      | -     | -     | 7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주간지  | 종합 | 0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월간지  |    | 0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 0               | -               | -               | -              | -     | -      | -      | -     | -     | -      |
| 계    |    | 12              | 0               | 0               | 0              | 0     | 3      | 2      | 0     | 0     | 7      |
| %    |    | (100.0)         | (0.0)           | (0.0)           | (0.0)          | (0.0) | (25.0) | (16.7) | (0.0) | (0.0) | (58.3) |

바. 제21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2025. 6. 3.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2025. 4. 14. ~ 7. 3.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60일 만에 실시된 보궐선거로,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보다 짧은 81일간 운영되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안건 총 26건을 조치하였고, 시정요구심의 의결건수는 없었다.

■ 자체심의

| 간별         | 계       | 위반유형<br>(일반 심의기준) |                      |            | 보도유형<br>(세부 심의기준) |                |          |                    |          | 결정내용            |                |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객관성<br>및<br>사실<br>보도 | 정치적<br>중립성 | 일반<br>선거<br>기사    | 여론<br>조사<br>보도 | 사진<br>게재 | 칼럼<br>및<br>기고<br>등 | 광고<br>제한 | 경고<br>결정문<br>게재 | 주의<br>사실<br>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안내문<br>송부 |
| 일간지        | 중앙      | 8                 | 8                    | -          | -                 | -              | 1        | -                  | 7        | -               | -              | 4      | 3      | 1     | -         |
|            | 경제      | 1                 | 1                    | -          | -                 | -              | -        | -                  | 1        | -               | -              | -      | 1      | -     | -         |
|            | 지역      | 16                | 12                   | 4          | -                 | 3              | 1        | -                  | 3        | 9               | 2              | -      | 2      | 11    | -         |
| 주간지        | 종합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간지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뉴스통신       | 1       | 1                 | -                    | -          | 1                 | -              | -        | -                  | -        | 1               | -              | -      | -      | -     | -         |
| 총 계<br>(%) | 26      | 22                | 4                    | 0          | 4                 | 1              | 1        | 3                  | 17       | 3               | 0              | 6      | 15     | 1     | 1         |
|            | (100.0) | (84.6)            | (15.4)               | (0.0)      | (15.4)            | (3.8)          | (3.8)    | (11.5)             | (65.4)   | (11.5)          | (0.0)          | (23.1) | (57.7) | (3.8) | (3.8)     |

## 2. 역대 시정요구심의 목록

| 선거명               | 의결번호         | 시정요구인 | 피시정요구인 | 시정요구취지<br>(요구사항)       | 결정               |
|-------------------|--------------|-------|--------|------------------------|------------------|
| 제16대 대선<br>(2002) | 2002-시심1     | 노무현   | 월간조선   | 사과문 게재                 | 주의               |
| 제17대 대선<br>(2007) | 2007-시심-1    | 이명박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
|                   | 2007-시심-2    | 이회창   | 시사IN   | 반론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
| 제18대 대선<br>(2012) | 2012대선-37    | 문재인   | 문화일보   | 정정보도문 또는<br>반론보도문 게재   | 각하               |
|                   | 2012대선-42    |       | 월간조선   | 정정보도문 게재               | 취하<br>(반론보도문 게재) |
|                   | 2012대선-43    |       | 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게재               | 정정보도문 게재         |
|                   | 2012대선-46    |       |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게재               | 기각               |
| 제19대 대선<br>(2017) | 2017대선-시심1   | 문재인   | 중앙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경고               |
| 제20대 대선<br>(2022) | 제20대 대선-시심1  | 이재명   | 중앙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경고               |
|                   | 제20대 대선-시심2  |       | 조선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경고               |
|                   | 제20대 대선-시심3  |       | 중앙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br>또는 주의사실 게재 | 주의               |
|                   | 제20대 대선-시심4  |       | 조선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                   | 제20대 대선-시심5  |       | 중앙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                   | 제20대 대선-시심6  |       | 조선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                   | 제20대 대선-시심7  |       | 조선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                   | 제20대 대선-시심8  |       | 중앙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                   | 제20대 대선-시심9  |       | 조선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               |
|                   | 제20대 대선-시심10 |       | 동아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                   | 제20대 대선-시심11 |       | 동아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경고               |
|                   | 제20대 대선-시심12 |       | 조선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기각               |





부

# 종합평가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 좌담

# 1

## 심의위원 평가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박영흠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1. 선거기사 심의의 딜레마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으뜸가는 규범은 공정성이다.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취지도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데 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공정한 언론 보도이다. 언론이 선거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한다면 민주주의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범위나 기간, 방식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약하여 후보자나 주권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의사표현을 옥죄어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선거법이 말하는 선거운동 규제보다 상위 규범이므로,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공론장인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식견, 자질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때로 충돌하는 두 규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때 선거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다. 선거기사 심의는 이처럼 정답이 없는 딜레마 위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해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선심위에서는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사를 심의한다. 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선심위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본질적 딜레마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곳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점이 특히 그렇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공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언론인·법조인·학자 등 다양한 직군들의 지혜를 모으는 위원회 형태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점, 독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부터 내부에 전달만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제재의 수위를 다양하게 정한 점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충장치를 두어 헌법과 선거법의 취지를 모두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로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81일 동안 운영되었다. 이 기간은 극우 단체의 선동이 난무하며 일부 유사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언론이 극단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보도를 이어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선거 보도 환경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선심위는 갑작스러운 구성과 이전 선거보다 짧은 활동기간, 요동치는 정치 상황에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정치적 양극화로 여론이 분열되는 등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위원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활동 결과를 개괄하고 두드러지는 몇 가지 특징과 그 함의를 살펴본 뒤, 향후 선심위 활동과 관련해 개선 또는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 2. 선심위의 심의 결과와 특징

첫째,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심의·의결 건수는 이전 대통령선거 선심위에 비해서 감소했으나, 기간 대비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임기만료에 의한 통상의 대통령선거일 경우 선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총 272일간 운영된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운영 기간이 81일로 통상의 경우보다 짧았다. 당연히 심의·의결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심의 건수는 제16대 13건, 제17대 37건, 제18대 51건, 제19대 10건, 제20대 85건을 기록했으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서는 심의·의결 건수가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26건).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때에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가 반복되는 것이다. 동일한 조기 대선 상황이었던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심의 건수가 늘어났지만, 임기만료에 의해 치러진 대선이었던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의 단순 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 '기간 대비 심의·의결 건수'를 계산해 보면 조금 다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가 활동한 날짜 수로 심의·의결 건수를 나누어 보면, 제16대 0.048건(13/272), 제17대 0.136건(37/272), 제18대 0.188건(51/272), 제19대 0.123건(10/81), 제20대 0.313건(85/272)이었고, 제21대에는 0.32건(26/81)이다. 제19대 때 조금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제21대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선심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조기 대선과 짧은 활동기간이라는 예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밀도 높은 심의·의결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체심의 안전만 있고 시정요구심의 안전은 없었다.

선심위의 심의는 크게 자체심의와 시정요구심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체심의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팀이 자체적으로 선거기사를 모니터링하여 선거기사 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찾아내 안전으로 상정하여 이루어진다. 시정요구심의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심위가 다루는 안전의 대부분은 자체심의 안전이다.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자체심의 안전 대 시정요구심의 안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16대 대선에서 12건 대 1건, 제17대 대선에서 35건 대 2건, 제18대 대선에서 47건 대 4건, 제19대 대선에서 9건 대 1건, 제20대 대선에서 73건 대 12건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운영 기간 동안 시정요구심의 안전은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선거 선심위에서 시정요구심의를 한 건도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추세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해 높은 비중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와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김지현, 2025; 박재령, 2025). 이러한 차이점은

신문 보도보다 방송이나 인터넷 보도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지만,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한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정당과 후보자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와 달리 선심위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이 심의 요청을 꺼리도록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sup>1)</sup>

셋째, 매체 유형별로 살펴볼 때 지역일간지가 심의 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의결 대상 매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중 지역 일간지가 16건(6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앙일간지 8건(30.8%), 경제일간지와 뉴스통신 각각 1건(3.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일간지에 대한 16건의 의결 내역을 수위별로 나누어 보면 경고결정문 게재 2건, 경고 2건, 주의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도 1건이 있었다.

이러한 심의 결과가 지역신문의 반성과 혁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신문의 역량과 윤리의식 부재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 그친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위반 유형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을 게재한 사례도 3건을 차지했다. 어느 신문이나 마찬가지지만, 경영 사정이 더 열악한 지역신문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광고 게재의 유혹에 취약해지기가 쉽다.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 여론이 높은 지역의 매체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칼럼이 별다른 이견이나 저항 없이 게재되거나 그러한 편향된 보도가 오히려 수익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문제는 이 같은 정치적·경제적 맥락과 연관된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선심위의 심의기준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제4조), 객관성 및 사실보도(제5조), 정치적 중립성(제6조)을 제시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가 의결한 조치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가운데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이 22건(84.6%),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4건(15.4%) 있었다.

1) 정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심을 신청할 수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청구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된 기간(2025. 4. 14. ~ 7. 3.)동안 84건의 정당(중앙당에 한함) 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편집자 주]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22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의견광고 및 후보자의 저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범주의 비중이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유형 때문이었다. 대다수 언론사들이 광고에 수익의 상당 비중을 의존하는 상황인 데다, 광고는 직접 생산한 기사와 달리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경우도 3건 있었다. 선심위는 내부 편집 방향과 무관할 수 있음을 고지한 외부 기고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신중한 검토와 의결을 거쳤다. 그럼에도 한 언론사는 특정 후보자의 홍보자료라 봐도 무방할 만큼 과도하고 노골적인 지지를 담은 칼럼을 반복적으로 실어 '경고결정문 게재'라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놓은 논평이나 성명 등 홍보자료를 편집 없이 반복적으로 게재한 경우가 1건 있었는데, 이 언론사도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결과다. 이밖에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물의 사진을 후보자와 합성한 만평이 게재된 경우가 1건 있었다.

다섯째,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 대통령선거 선심위에 비하여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의결 결과를 이전 대통령선거 선심위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재의 수위가 다소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선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제재조치 가운데 언론사 내부에 전달되기만 하는 경고·주의·권고 조치에 비하여 독자들이 제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조치 등은 상대적으로 더 강도 높은 제재라 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서는 총 26건의 조치 가운데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가 11.5%를 차지해 전체 의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다. 증가하는 불공정 보도에 엄정한 조치로 대응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문제의식이 표출된 결과이다.

참고로 제16대 대선 당시에는 총 13건의 제재 중 '게재' 조치가 없었고, 제17대 대선 때는 총 37건의 제재 중 경고결정문 게재 2건(5.4%), 제18대 대선 때는 총 51건의 제재 가운데 사과문 게재 1건(2%)이 있었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활동한 제19대 대선 선심위에서는 총 10건의 제재 가운데 '게재' 조치가 없었다.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총 85건에 대해 조치를 내렸는데, 주의사실 게재는 4건으로 4.7%에 그쳤다.

물론 각 대통령선거 선심위의 제재 수위를 수평 비교하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 때마다 선거와 언론 환경이 다르고 심의위원도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들이 심의기준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기존의 심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변화가 발생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선거 보도가 질적으로 악화된 현실이나 이러한 언론 환경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선거 보도의 추세와 함의

이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정리한 심의 결과의 특성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선거 보도의 몇 가지 추세와 중요한 함의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정파적 의도가 아닌 극단적으로 낮은 품질로 인하여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뉴스 기사의 형태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특정 후보의 보도자료, 입장문, 성명문, 출범식 인사말 등의 전문을 그대로 보도한 안전이 선심위에 상정되는 것이다.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츠이지만, 실제로는 언론사의 뉴스 취재·가공·제작 행위가 전혀 없이 후보자가 보낸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사례들이다. 언론사의 가치판단이나 편집 행위를 거치지 않은 채 발행된 이러한 콘텐츠는 저널리즘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질적으로 현저히 낮은 품질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뿐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지만, 언론사의 제호 아래 발행된 콘텐츠라면 특별한 주의 없이 수용하는 일부 독자들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스의 품질은 선심위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선심위의 심의기준은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정치적 중립성으로, 품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취재와 편집 행위조차 거치지 않아 극단적으로 품질이 낮은 뉴스의 경우, 공정한 선거 보도에 요구되는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편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무엇 이든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입장을 언론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전달함으로써 마치 그러한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 보도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선심위에도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 품질에 대한 평가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 들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극단적인 저품질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 변화가 품질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한꺼번에 접하게 되면서 독자들은 뉴스의 원산지에 무관심해졌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브랜드가 독자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는다면 많은 자원을 투입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장기적 신뢰를 도모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플랫폼에 입점만 하면 광범위한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근소 매체가 난립하게 된 영향도 크다. 포털 환경에서 뉴스를 접하는 독자에게는 함량 미달의 신생 언론사도 수준 높은 전통적 언론사와 똑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저품질 뉴스 역시 독자에게 고품질 뉴스와 별 차이 없는 의미와 효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플랫폼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이 같은 뉴스 품질의 저하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의 자정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심위의 제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객관성의 규범을 내팽개치고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나 반대 성향을 보이는 정파적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이 특정 정치 집단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지지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방향을 결정하는 정파성은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 또는 정치적 후견주의(Political Clientelism) 등으로도 이야기되는 언론의 정파성은 근래 들어 유권자이자 독자인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점점 더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골적인 진영 논리로 무장한 유튜브 채널에 열광하고 객관적 보도를 추구하는 레거시 미디어를 비난·공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언론의 보도조차 전보다 더 정파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과 정치권, 이용자 등이 함께 정파적 언론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면, 언론 윤리나 규범이 무력화될 위험성이 높다(심석태, 202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서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선심위의 제재를 받고도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한 기사가 안전으로 상정된 바 있다. 이 언론사는 결국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한 언론사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후보를 히틀러와 같이 묘사한 만평을 실어서 '경고' 제재를 받았다.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옹호와 적대하는 후보에 대한 공격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용인되는 건전한 찬성과 비판을 넘어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수준까지 나아가는 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성이 앞으로 개선되기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개인화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환경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보도를 원치 않는 뉴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 보도에서

중립성이라는 구속을 벗어나려는 언론사들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편향된 보도를 규율하는 개념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은 누구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언론학계에서조차 개념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에 따르면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지만, 양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균형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질적인 균형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보도를 양산하게 되면 향후 선심위에도 큰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 보도가 등장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해졌다. 사회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대중화되고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선거 보도만 예외가 될 리 없다. AI 기술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언론인이 AI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거나 뉴스 제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은 뉴스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 교육에 힘쓰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2024년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주관하여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만들었다. 이 준칙은 ‘인공지능은 뉴스 생산에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스 생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투명성’의 원칙도 강조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언론인들에게 아직 이러한 윤리 준칙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서는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 보도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한 언론사는 생성형 AI에 후보자 공약에 대한 평가를 맡기고 별점을 매기는 식으로 서열화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도 윤리에 언론인들이 아직 익숙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 언론사는 제재조치 이후에 다시 AI를 활용해 후보자의 연설 방식이나 발언, 몸짓 등을 비교 평가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분석의 한계를 투명하게 알리지 않는

기사를 여러 건 게재해 재차 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선심위는 이 보도들은 앞서와 달리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점을 감안, 향후 공정한 보도를 위한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후보자들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점수화하고 막대그래프로 서열화하여 1면에 보도한 안건도 상정됐다. 이 보도는 역량 평가의 구체적 기준과 AI에 질문한 프롬프트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가 뛰어난 역량 평가를 받았다는 점만을 강조했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주목도가 높은 1면에 배치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점 등이 고려되어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보편화되고 뉴스 생산에 폭넓게 활용되면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고민과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언론계 내에 AI 활용 선거 보도의 공정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하루빨리 필요하며, AI 활용 보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요건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도 시급해 보인다. 향후 선심위의 결정 내용과 방향은 이 같은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4. 선심위 개선과 관련한 쟁점과 제언

##### 가. 심의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

선심위는 심의를 거쳐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를 포함한 총 7가지 유형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래 사과문 게재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sup>2)</sup>을 받아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심의 대상이 된 기사들은 대부분 경고·주의·권고 수위의 제재를 받는다.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결정 등 뉴스 이용자들이 제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제재와 달리, 언론사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고·주의·권고 결정은 언론사의 인식을 일부 제고할 순 있겠지만 선거 보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게재' 조치를 받더라도 지면에 결정문을 게재하는 신문사와 달리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게재하는 통신사의 경우 포털사이트로 뉴스를 이용하는

2) '사과문 게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7. 30., 2013헌가8)에 따라 2017. 2. 13. 선거기사 심의기준 개정 시 제재 유형에서 삭제되었다. [편집자 주]

독자들에게 제재 사실이 알려지기는 쉽지 않다. 선거기사 심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언론의 기본적 책임과 본령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제재가 선거 보도에 실질적 효과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반영으로 비교적 무거운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경고결정문 제재를 3건 의결하여 이전 선심위보다 제재 수위를 높였으나, 총 26건의 심의 안건 중 여전히 주의(15건), 경고(6건), 권고(1건), 안내문 송부(1건) 등이 의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다.

언론사에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려 고통을 주는 것이 선거기사 심의의 목적은 아니다. 선거기사 심의는 객관적 선거 보도를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언론·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선거 보도의 질적 악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가벼운 조치의 남발은 자칫 선거기사 심의 제도를 형식적 절차에 그치도록 만들 위험성이 있다. 위반 언론사가 기사 심의 제도와 공정 보도 윤리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언론 보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재 수위의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악의적 보도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양한 대안적 제재 방안을 강구·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거기사 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언론진흥기금 등을 통한 각종 언론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뉴스제휴평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는 제재 사실을 포털사이트 제휴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탈락이나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재를 받은 언론사와 위반 사실, 심의 결과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각종 웹사이트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표하는 규정을 두어 제재 결과의 가시성과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 나. 심의 기구 통합 논의와 제도의 재설계

선거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가 매체 유형에 따라 분리 운영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선심위는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활용한 정기간행 보도 매체와 뉴스통신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방송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아 별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각 기구의 소속도 상이하다. 선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운영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이다.

심의 기구가 매체별로 분산돼 있다 보니, 한 언론사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 기사가 서비스되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기구의 심의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내용의 기사로 중복 심의를 받게 될 우려도 있고, 기구별로 심의기준과 범위가 달라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분산되어 있는 심의기구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기구 간 혼선이나 일관성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심석태, 2025). 그러나 중복 심의와 제재 결과의 차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최진호·이재진, 2016)도 있으며, 기구 통합을 통해 국가 규제를 공고히 하기보다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김선량, 2023).

미디어가 융합되는 오늘날의 언론 유통·소비 환경을 생각할 때 이처럼 매체 유형에 따라 상이한 심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신문과 잡지, 방송, 인터넷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존의 미디어 범주로 구획하기 곤란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매체 유형별 분리 방식은 심의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성도 있다. 통합 심의 기구 설립이나 심의 기구 간의 역할 조율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재의 효율성과 일관성만을 따져 줄속으로 통합 심의 기구를 만드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거 보도 심의는 엄정하고 효율적인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언론과 공정한 선거라는, 때로 상충되는 가치들을 조화시키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입김으로 인해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 사회에서 심의 성과의 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 심의의 딜레마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일이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목표로 설립된 단일한 심의 기구가 효율적으로 권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심의 기구의 독립성, 업무 처리의 전문성, 기구가 설치되는 상위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신뢰 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통합 심의 기구 설립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성급하게 제도를 손보았다간 부작용이 커도 되돌리기 어렵다. 공론의 장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언론계 안팎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 다. 선심위의 상설 기구화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운영 기간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이며, 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선거 기간에만 임시로 설치되고 매년 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한시 기구의 성격은 선심위 업무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심의위원이 매년 바뀌다 보니 심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심의 활동 과정에서 공유된 고민과 논의가 다음 선거 심의에 반영되기도 쉽지 않다. 선심위의 심의기준이 일관성을 갖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선심위의 운영을 상설화하고 심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시 기구로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심위와 달리, 유사한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운영된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매체 유형별로 심의 기구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의 본질적 성격에 차이가 없다면 어떤 곳은 상설 기구로, 다른 곳은 한시 기구로 운영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선심위의 활동과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기구의 상설화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시기에는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제재 효과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 위반 언론사에 대한 교육 활동, 언론사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심의 수용성 및 반응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상설화를 통해 선거 기간에는 심의에 집중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심의 효과와 보도 개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선심위의 기능을 제고한다면 향후 심의의 전문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선량 (2023).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기구 통합 문제 및 심의기준 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52(2), 305-333.
- 김지현 (2025). 대선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78.5%가 국민의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263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263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박재령 (2025). 대선 선방위 MBC 심의·의결, 100% 국민의힘 민원이었다.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219>
- 심석태 (2023). 불편한 언론(정파적 언론 생태계, 현실과 해법). 나눔.
- 심석태 (2025).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재설계 필요성과 방향: 선거보도 심의의 실효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6(2), 176-209.
- 최진호·이재진 (2016).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언론과 법*, 15(2), 1-35.

# 2

## 결산 좌담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 좌담

- 일 시 2025. 7. 1.(화) 16:00
- 장 소 위원회 11층 제1강의실
- 참석자 박홍래 | 심의위원장,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박혁진 | 부위원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김준형 |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한기천 |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영흠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민호 |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성기철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정회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혜진 | 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 결산좌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요구심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매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심의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살펴봐야”**

이번 대선 선심위에서는 시정요구심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당의 시정요구 심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다 다양한 유형의 안건을 탐색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한 심의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규모 언론사에 대형 언론사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심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정하고 치밀하게 논의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의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박 홍 래**  
심의위원장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고,  
각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위원장님의 리더십과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사결정 덕분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언론 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 역할이나 업무 등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혁 진**  
부위원장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 업무협조와  
심의위원 임기 보장, 심의위원·모니터링 인력 풀 운영 필요해”**

심의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전문성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과 법령의 통일성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언제든 심의에 투입될 수 있는 위원 및 모니터링 인력 풀을 구축해 경험과 기준이 축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준 형** 위원

**“유의미한 제재 사례를 바탕으로  
선심위를 더욱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언론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심위에서 제재조치한 사례 중에는 최소한의 책임 의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며, 기자들이 보도에 임할 때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심의기준을 반복 위반한 매체에 대해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영향력 있는 매체에 대한 심의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심위 결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의위원으로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활동을 마치게 되어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 기 천 위원

**“보도의 질이 양극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해”**

학생들에게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언론 보도의 질적 수준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지만, 심의를 하며 접한 기사들 중에는 스스로도 충격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질적으로 낮은 보도가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이런 상황에서 선심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박 영 흘 위원

**“포용과 양보를 바탕으로 논의한 덕분에  
공정하고 이견 없는 심의가 가능했다고 생각”**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 과정에서 수위가 높은 제재조치가 여러 건 의결되었음에도 재심청구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로의 입장을 포용하고 양보하며 논의에 임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민 호 위원

**“시정요구심의제도와 선심위의 역할을 널리 알려  
기구의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 있어”**

이번에 제재를 받은 매체들 중 상당수가 소규모 매체였으며, 특히 보도의 기본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채 무비판적으로 작성한 기사들의 경우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심위에서 높은 수위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심위의 역할과 존재감이 외부에 더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들이 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알릴 방안을 마련하고, 선심위 관련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들에 배포하여 선심위의 기능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 기 철 위원

**“급변하는 언론 환경과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고민,  
민주주의의 작은 디딤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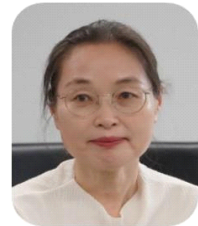
이번 선심위 활동을 통해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보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의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평을 심의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논의들이 모여 이번 선심위가 민주주의의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식견과 전문성 덕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 회 옥 위원

**“AI를 활용한 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심위도 이에 대비해야”**

선심위 첫 회의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차 판단 기준을 잡아나갈 수 있었고, 이후 보다 원활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보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선심위 또한 이에 대비하여 관련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혜 진 위원



부

# 심의·의결 사례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 1

## 자체심의 의결 사례

### 1. 경고결정문 게재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21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   |
| <b>심의대상기사</b>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라매일 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제하의 칼럼</li><li>2. 전라매일 2025년 4월 30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제하의 칼럼</li><li>3. 전라매일 2025년 5월 1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제하의 칼럼</li><li>4. 전라매일 2025년 5월 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제하의 칼럼</li><li>5. 전라매일 2025년 5월 13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제하의 칼럼</li><li>6. 전라매일 2025년 5월 16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제하의 칼럼</li><li>7. 전라매일 2025년 5월 22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제하의 칼럼</li></ol> |
| <b>주 문</b>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li><li>2.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전라매일 11면에 [별지2]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인 2025년 4월 29일자 11면의 사설 「청년 이탈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기울여야」의 제목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li></ol>   |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등 7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 는 시작되었다(1)



최공섭  
프리랜서 PD

“  
이재명은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했다  
”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재명은 4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한 가운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거쳐,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90%대로 기록적인 압도적 1위로 민주당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라는 선언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대통령이란 권력자로서 최초로 ‘훌륭한 도구인 이재명’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되고자 한 이재명 그가 넘어온 시간들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공직자로서의 마음은 매우 단순하다. 그가 첫 공직을 맡은 성남 시장 시절 한 인터뷰가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한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매년 연초에는 각 동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누구든지 아무나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다 써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병행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의 불편사항인 민원을 많이 찾아온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를 시행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러 다니며 ‘혹시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퇴임할 때 보니까 그 많은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두고 거의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도 민원이 1년이면 수천만 건은 될 것인

데 이런 불만, 불편한 것, 궁금한 질문 등을 모아볼 수 있다면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작은 불만 사항 하나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그가 걸어온 시간은 결코 쉽지않았다. 1963년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뽕기까지 노름에 날리고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고, 그토록 원하던 중학교 대신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 공으로서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를 막았고, 자서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2022, 위즈덤 하우스)를 보면 가난의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첫 시도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졌고, 2번째는 둘째 형인 이재영이 구해줬으며, 이 때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 같은 다른 약을 대신 쥐 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짐한 것이 ‘그래 죽도록 살아내자’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러 산재를 당한 한쪽 팔이 영구적으로 휘어져 버린 장애인이 되었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해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서

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이천에서 변호사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권익활동을 했다.

본격적으로 공직에 나서게 된 일이 2004년, 바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당시 성남시민들은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했지만 변호사로서 벽에 부딪치자 직접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결과는 전직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다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어 공직의 인생이 시작하였다. 전임 이대엽시장이 남겨 놓은 순부채 4,572억원을 청산하고도 지방자치 지방단체장 최초로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육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청년배당금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어린시절 그토록 소망했던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육비를 지급, 신생아 약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그저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대리하는 머슴과 일꾼, 도구로서의 공직자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몸과 발로 이뤄낸 공공 이행률이 무려 94%의 엄청난 기록을 세우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었다. <계속>

(20.5\*22.8)cm

▲ 전라매일 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이재명은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했다”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재명은 4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한 가운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거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90%대로 기록적인 압도적 1위로 민주당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라는 선언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란 권력자로서 최초로 ‘훌륭한 도구인 이재명’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되고자 한 이재명 그가 넘어온 시간들이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공직자로서의 마음은 매우 단순하다. 그가 첫 공직을 맡은 성남시장 시절 한 인터뷰가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한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매년 연초에는 각 동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누구든지 아무나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다 써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병행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의 불편 사항인 민원을 많이 찾아온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를 시

행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려 다니며 ‘혹시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퇴임할 때 보니까 그 많던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거의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도 민원이 1년이면 수천만 건은 될 것인데 이런 불만, 불편한 것, 궁금한 질문 등을 모아낼 수 있다면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작은 불만 사항 하나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진짜 민주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그가 걸어온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1963년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뽕기까지 노름에 날리고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고, 그토록 원하던 중학교 대신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서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를 막았고, 자서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2022, 위즈덤 하우스>를 보면 가난의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첫 시도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졌고, 2번째는 둘째 형인 이재영이 구해줬으며, 이때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려 갔다가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 같은 다른 약을

대신 쥐 죽지 못했다. 그래서 다짐한 것이 '그래 죽도록 살아내자'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러 산재를 당한 한쪽 팔이 영구적으로 휘어져 버린 장애인이 되었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해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 연수원을 마치고 나서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이천에서 변호사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권익 활동을 했다.

본격적으로 공직에 나서게 된 일이 2004년, 바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당시 성남 시민들은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를 했지만 변호사로서 벽에 부딪히자 직접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결과는 전직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다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어 공직의 인생이 시작하였다. 전임 이대엽 시장이 남겨 놓은 순 부채 4,572억 원을 청산하고도 지방 자치 지방단체장 최초로 '청년 배당·무상 산후 조리·무상 교복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청년배당금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어린 시절 그토록 소망했던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급, 신생아 약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그저 시장의 권한을 행세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대리하는 머슴과 일꾼, 도구로서의 공직자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몸과 발로 이뤄낸 공약 이행률이 무려 94%의 엄청난 기록을 세워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었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최공섭  
프리랜서 PD

“

경기도지사  
였을 때  
보여준  
수 십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재명의 정치드라마!

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시도한 경기도 내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은 그가 진정한 도민의 일꾼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정책이었다.

그동안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경기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뿌리 뽑았다. 처음 수십 년간 운영했던 불법 시설물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반발도 거셴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수많은 협박까지 당했지만 그의 노련한 행정 수완으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일방적이고 강압적 철거가 아니라 놀라게도 상인들이 자진철거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드디어 이재명의 강력한 의지와 자발적인 상인들의 협조로 2020년 7월 기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 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런 계곡 불법 철거물 철거는 거의 기적같은 자진철거방식이어서 경기도민 스스로도 놀라워 한 성공적 정책 실행이었다.

이런 지지는 지난 4월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3천여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 낸 것은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

액 후원금을 모아준 것은 바로 국민의 희망이 모아진 것 아닌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오직 말뿐이었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저버리고 가장 불공정한 그리고 가장 비상식적인 나라로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이제 진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 나선 이재명에게 국민들은 그저 번지르르한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몸으로 바로 뛰여 실천하는 진정한 대통령, 도구가 되기를 자원한 이재명이다.

대부분 백 년도 못사는 인생에서 이재명이 살아낸 굴곡진 삶 속에서 그를 향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상위계층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친일 반민족세력은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키기가 담당하게 대한민국 상위계층의 권력의 특혜를 누려왔다.

국민의 힘의 정치인들부터 재벌 권력과 이들의 손발이 된 언론, 종교 세력들까지 광범위하게 보수를 자처하며 권력을 유지 장악되어 왔다. 이재명이란 이런 기득권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도구, 일꾼이 되고자 한 그의 출연은 처음부터 눈의 가시였다. 그를 향한 집중포화 사범 리스트라는 골레로 전과 4범의 범죄자로 낙인찍어 악마화 시켰다.

바로 무고 및 공무원 자객사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인데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는 대부분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전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특수 공무방해는 성남시팀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낚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에서 벌어진 낚치기 시의원 3명이 폭행이나 의회 집 일부도 파손된 결과였다.

기득권의 이익의 최고 대변자인 윤석열 검찰 정권의 공격은 더 집요했다.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사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난 위증 교사사건, 쌍방을 대북송금사건, 경기도 법원 카드 사적 유용사건등 727일 가량의 검찰의 집중 수사와 376회의 압수수색 등 이재명 죽이기 조사가 이어졌다. 이런 직접적인 윤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나 압수 수색 뿐만 아니라 언론의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 보도는 그 수위가 심상치 않다.

언론의 노골적인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누리고 저지르는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를 용납하지 않을 그의 개혁적인 행동과 실행력, 경기도지사였을 때 보여준 수 십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20.5~30.9)cm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경기도지사였을 때 보여준 수십 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재명의 정치드라마!

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시도한 경기도내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은 그가 진정한 도민의 일꾼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정책이었다.

그동안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뿌리 뽑았다. 처음 수십 년간 운영했던 불법 시설물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반발도 거셌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수많은 협박까지 당했지만 그의 노련한 행정 수완으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일방적이고 강압적 철거가 아니라 놀랍게도 상인들이 자진 철거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드디어 이재명의 강력한 의지와 자발적인 상인들의 협조로 2020년 7월 기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 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런 계곡 불법 철거물 철거는 거의 기적 같은 자진 철거 방식이어서 경기도민 스스로도 놀라워 한 성공적 정책 실행이었다.

이런 지지는 지난 4월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 3천여 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액 후원금을 모아준 것은 바로 국민의 희망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오직 말뿐이었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저버리고 가장 불공정한 그리고 가장 비상식적인 나라로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이제 진짜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 나선 이재명에게 국민들은 그저 번지르르한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몸으로 발로 뛰어 실천하는 진정한 대통령, 도구가 되기를 자원한 이재명이다.

대부분 백 년도 못사는 인생에서 이재명이 살아낸 굴곡진 삶 속에서 그를 향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상위계층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친일 반민족 세력은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키기까지 당당하게 대한민국 상위계층의 권력 특혜를 누려왔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부터 재벌 권력과 이들의 손발이 된 언론, 종교 세력들까지 광범위하게 보수를 자처하며 권력을 유지 장악되어 왔다.

이재명이란 이런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도구, 일꾼이 되고자 한 그의 출연은 처음부터 눈엣가시였다. 그를 향한 집중포화 사법 리스트라는 굴레로 전과 4범의 범죄자로 낙인찍어 악마화 시켰다.

바로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인데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는 대부분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전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특수 공무 방해는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날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에서 벌어진 날치기 시의원 3명이 폭행이나 의회 집기 일부도 파손된 결과였다.

기득권 이익의 최고 대변자인 윤석열 검찰 정권의 공격은 더 집요했다.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사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난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727일가량의 검찰의 집중 수사와 376회의 압수수색 등 이재명 죽이기 조사가 이어졌다. 이런 직접적인 윤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언론의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 보도는 그 수위가 심상치 않다.

언론의 노골적인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누리고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용납하지 않을 그의 개혁적인 행동과 실행력,

경기도지사였을 때 보여준 수십 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최공섭  
프리랜서 PD

“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나라당 주도로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신설할 수 있게 된 TV CHOSUN이나 채널A, JTBC, 매일경제신문 소유인 MBN 등 종합편성채널 채널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며 실제 SBS를 운영하는 태영건설 외에도 여러 중견 건설사들이 앞 다투어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자본의 방송 진출 현황 시행령은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정해 방송 진출을 금지해 왔음에도 유진기업은 YTN을 3천억을 주고 인수하였고, 호반건설은 KBC 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전자신문을,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UBC 울산방송, 두진건설은 CJB 청주방송, SG건설은 강원민방G1 부영그룹은 천안일보,한라일보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소유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 정부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나 택지 개발계획 등의 발주 내용 등의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접수해 수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출입기자 등을 통해 발주기관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 협의를 벌이기도 하며, 발주 방법부터 로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바로 대장동 사업개발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단호하고 투명한 개발계획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관행적으로 누리던 천문학적 개발계획의 이득이 대부분을 성남 시민에게 돌아간 이재명의 조치를

직접 봤고 개발업자가 가져갈 이득을 고스란히 빼앗긴 꼴이 되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민간개발업자들은 관행대로 이른바 '50억 클럽'인 정부나 검찰의 요직 인사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광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장동 국형 5억을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던 계획에서 도리어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 대주주인 김만배가 말한대로 '빨갱이 공산당 시장'인 것이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극우 선전보 목사나 "이재명은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목사 등 보수 개신교회들이 들어 내놓고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나경원이나 정재원 같은 극우 정치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한의 대형교회 중 일부가 북한 공산당의 박해에 못이겨 6.25 전쟁 후 피난와서 설립되어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혐오와 편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수대형교회가 운영하는 개신교 사학재단 운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만 250여개이며 기독교를 표방하는 미션 스쿨이 500여개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일 경우 교회에서 설립한 한세대학교에 아내인 김성혜씨가 제4~8대 총장을 맡았고 셋째 아들 조승제씨 역시 한세대 이사이다. 대부분 사학재단의 이사장부터 사무총장, 교수등을 마음대로 임명 관리 통제하는 상태에 민주당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유력 정치인 중 실제 부산 사상구 최대유지인 동서학원이란 사학재벌 아버지 장성만의 아들이 바로 정재원 국회의원이며 대통령 후보로 나온 나경원의원 역시 흥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흥신학원의 설립자 나채성의 큰 딸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그동안 이재명의 딸과 행보를 보면 쉽게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정치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약간의 무리한 불발이 있어도 비상계엄같은 반민주적 행위에도 도리어 그의 탄핵을 그렇게 극구 반대해온 이유는 도리어 윤석열 정권이 다루기 쉬운 미숙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정권의 어떤 간섭도 없었고 그들의 기득권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국교회총연합 제7대 대표회장을 지내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윤대통령 관저로 고가의 소나무 분재 뇌물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한 정확하게 12일 전 현 정권을 지지하는 김장환 목사의 '부흥계 하울소서'(하박국 3장 2절)라는 축복기도와 설교해준 11월 22일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왜 수 백명의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은 물러가 있는가?

'이제 그만 진실해지시다. 그만들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뽐읍시다.' 이런 국민들이 민주당의 후보경선에서 총청과 영남 경선에서 약 90% 득표율, 호남권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8.7%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90%대로 압도적 1위로 물러 주었으니 이재명의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그의 말대로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끝〉

(20.5\*24.4)cm

▲ 전라매일 2025년 5월 1일자 11면

### 가격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 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나라당 주도로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신설할 수 있게 된 TV CHOSUN이나 채널A, JTBC, 매일경제신문 소유인 MBN 등 종합편성채널 채널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며 실제 SBS를 운영하는 태영건설 외에도 여러 중견 건설사가 앞다투어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자본의 방송 진출 현행 시행령은 자산 규모 3조 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정해 방송 진출을 금지해 왔음에도 유진기업은 YTN을 3천억을 주고 인수하였고,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전자신문을,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UBC 울산방송, 두진건설은 CJB 청주방송, SG건설은 강원민방G1, 부영그룹은 인천일보, 한라일보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소유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 정부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나 택지 개발계획 등의 발주 내용 등의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접수해 수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출입기자 등을 통해 발주기관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 협의를 벌이기도 하며, 발주 방법부터 로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바로 대장동 사업 개발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단호하고 투명한 개발계획을 지켜 보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관행적으로 누리던 천문화적인 개발 계획의 이득이 대부분을 성남 시민에게 돌아간 이재명의 조치를 직접 봤고 개발업자가 가져갈 이득을 고스란히 빼앗긴 꼴이 되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민간개발업자들은 관행대로 이른바 ‘50억 클럽’인 정부나 검찰의 요직 인사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광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장동 국힘 5적을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던 계획에서 도리어 성남 시민에게 5천억 원 이익을 빼앗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 대주주인 김만배가 말한 대로 ‘빨갱이 공산당 시장’인 것이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극우 손현보 목사나 “이재명은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목사 등 보수 개신교회들이 드러내놓고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나경원이나 장제원 같은 극우 정치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한의 대형 교회 중 일부가 북한 공산당의 박해에 못 이겨 6.25 전쟁 후 피난 와서 설립되어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혐오와 편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수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개신교 사학재단 운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만 250여 개이며 기독교를 표방하는 미션스쿨이 500여 개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일 경우 교회에서 설립한 한세대학교에 아내인 김성혜 씨가 제4~8대 총장을 맡았고 셋째 아들 조승제 씨 역시 한 세대 이사이다. 대부분 사학재단의 이사장부터 사무총장, 교수 등을 마음대로 임명 관리 통제하는 상태에 민주당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유력 정치인 중 실제 부산 사상구 최대 유지인 동서학원이란 사학 재벌 아버지 장성만의 아들이 바로 장제원 국회의원이며 대통령 후보로 나온 나경원 의원 역시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설립자 나채성의 큰 딸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그동안 이재명의 말과 행보를 보면 쉽게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정치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약간의 무리한 불법이 있어도 비상계엄 같은 반민주적 행위에도 도리어 그의 탄핵을 그렇게 극구 반대해 온 이유는 도리어 윤석열 정권이 다루기 쉬운 미숙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정권의 어떤 간섭도 없었고 그들의 기득권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국교회 총연합 제7대 대표회장을 지내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윤 대통령 관저로 고가의 소나무 분재 뇌물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한 정확하게 12일 전 현 정권을 지지하는 김장환 목사의 '부흥케 하옵소서'(하박국 3장

2절)라는 축복기도와 설교해 준 11월 22일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왜 수백 명의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은 몰려가 있는가?

‘이제 그만 진실해집시다. 그만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읍시다.’ 이런 국민들이 민주당의 후보 경선에서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약 90% 득표율, 호남권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8.7%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역 90%대로 압도적 1위로 몰아주었으니 이재명의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그의 말대로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최공섭  
프리랜서 PD

“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기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조희대의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환송했는데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이 나선 대선 선거 개입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결정으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윤석열 검찰 정부가 임명한 10명이 동의했다. 이런 사법부의 선거개입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재명재판 원심 파기환송한 미친 대법관들의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든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또 다시 5월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5월 금쪽같은 황금연휴에도 촛불대행진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들 탄핵에만도 100만명이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촛불집회 사회를 말한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역시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

법 위반이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단 이를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라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재판 역시 지구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제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는 2016년 브라질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인 '사법 쿠데타'와 매우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 수사 검사들이 주도한 합법적인 법적 절차들을 이용하여 당시 톨라 브라질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내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톨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구속시켰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바뀌고,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역시 브라질과 비슷한 사법 쿠데타 전쟁에 직면해 있다. 톨라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과 내란 공범 세력의 비열한 꼼수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나 예정돼 있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잠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붙여왔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내란공범인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 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했고,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구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파주지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해 한 겨울 엄동설한을 넘어선 '빛의 광장'의 K-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국민들이 누구보다 빠르고 명쾌하게 조희대 대법원의 음흉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와 도리어 대통령의 권좌에 앉으려는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기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계속>

(20.5x25.9)cm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기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 환송하였는데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이 나선 대선 선거 개입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만의 초고속 결정으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윤석열 검찰 정부가 임명한 10명이 동의했다. 이런 사법부의 선거 개입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재명 재판 원심 파기 환송한 미친 대법관들의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든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또다시 5월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5월 금쪽같은 황금연휴에도 촛불 대행진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들 탄핵에만도 100만 명이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촛불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역시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이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재판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제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는

2016년 브라질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인 ‘사법 쿠데타’와 매우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 수사 검사들이 주도한 합법적인 법적 절차들을 이용하여 당시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내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룰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구속시켰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바뀌고,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역시 브라질과 비슷한 사법 쿠데타 전쟁에 직면해 있다. 룰라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과 내란 공범 세력의 비열한 꼼수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판 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나 예정돼 있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려 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내란 공범인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 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 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해 한겨울 엄동설한을 넘어서 ‘빛의 광장의 K-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국민들이 누구보다 빠르고 명쾌하게 조희대 대법원의 음흉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와 도리어 대통령의 권좌에 앉으려는 내란 공범 한덕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최공섭  
프리랜서 PD

“  
뿌리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지난 4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연설 중 한마디 말이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이 이뤄진 날이 바로 2004년,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민들은 성남 시립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 조례를 한 일에서 비롯된 결심이다. 만 21년 만에 이 결심이 이제 21대 대한의 위대한 미국, 환우 입은 민초의 나라 대통령 후보로서 던진 말이다.

원고도 없이 국민을 향해 부르짖는 환호와 감동의 30분 연설은 “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며 제대로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라고 외쳤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의 이재명의 도전에 지난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백년이 넘게 자리잡은 소위 권력있고 돈 있는 백까지 가진 기득권층의 바위 같이 견고한 권력이 그의 앞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세운 기득권층의 반대가 전 국민까지 당황하게 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

죄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하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나선 반대, 단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조희대는 4월 22일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거 윤석열에게 임명받은 대법관 10명, 이에 힘없고 돈없는 일반 국민의 편은 오직 단 2명으로, 이런 10대 2라는 구조는 바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장악해 왔던 고질적인 기득권층의 '이재명만은 안된다' 편향한 바위이다.

그러나 이런 깨기 힘든 기득권층에 맞서 성남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한 결심을 죽기로 지키고자 이재명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의연하게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월 28일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여준을 임명한 그의 결정은 바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분명한 의지를 내 보인 일명이다. 바로 윤여준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의 파평 윤씨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파평 윤씨의 종가로 충남 논산에 조선 후기 학자 명재 윤증고택이 남아 있고 이 고택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조선의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서 전통한옥의 모델이라고 평가받은 뿌리깊은 집안이다. 특히 파평 윤씨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종학당' 있는데 이 종학당은 조선 인조 21년(1643) 윤순거가 문종의 자녀교육을 위해 건립하고 종약(宗約)을 제정하여 집안의 자녀와 문종의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세

계 유일의 사립학교(서당)이다. 종학당 건립 후 280여년 동안 운영해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신교육제도의 도입으로 폐쇄되었다.

무려 280여년 동안 이 파평 윤씨 사립학교를 통해 42명의 문과 급제자 31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세계 교육역사 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 유산이 되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충청도에 올 때마다 '충청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던 바로 그 이유였고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12월 2일 자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던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기 했지만 속칭 '짜이지 않는 자식'이 된 윤석열은 바로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는 논산의 윤증 고택이나 종학당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파평 윤씨 집안의 대표적 보수 책사인 윤여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재명의 결정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를 외치며, 국민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대로 진보와 보수, 진영과 계파를 뛰어넘는 융합로식 총망라된 선대위 출범시켰다. 문제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노무현 정부 첫 법무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경선 라이벌이었던 김경수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합류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혁혁한 성공이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영입한 것은 바로 2천명 의대 정원 확대를 촉발된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강력한 인물로 주목하고 영입하였을 것이다. 근대화 백년동안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선택은 바로 우리 국민 몫이다.

(계속)

(20.0\*26.9)cm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뿌리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시청 앞 한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랐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지난 4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연설 중 한마디 말이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이 이뤄진 날이 바로 2004년, 이재명이 당시 성남 시민들은 성남 시립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 조례를 한 일에서 비롯된 결심이다. 만 21년 만에 이 결심이 이제 21대 대한의 위대한 민국, 흰웃 입은 민초의 나라 대통령 후보로서 던진 말이다.

원고도 없이 국민을 향해 부르짖는 환호와 감동의 30분 연설은 “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 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며 제대로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라고 외쳤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의 이재명의 도전에 지난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백 년이 넘게 자리 잡은 소위 권력 있고 돈 있는 백까지 가진 기득권층의 바위같이 견고한 권력이 그의 앞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세운 기득권층의 반대가 전 국민까지 당황 하게 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나선 반대, 단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조희대는 4월 22일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직 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 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거 윤석 열에게 임명받은 대법관 10명, 이에 힘없고 돈 없는 일반 국민의 편은 오직 단 2명으로, 이런 10대 2라는 구조는 바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동안 장악해 왔던 고질적인 기득권층의 '이재명만은 안된다' 편협한 바위이다.

그러나 이런 깨기 힘든 기득권층에 맞서 성남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한 결심을 죽기로 지키고자 이재명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의연하게 이재명 대선후보는 4월 28일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여준을 임명한 그의 결정은 바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분명한 의지를 내보인 임명이다. 바로 윤여준은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의 파평 윤씨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파평 윤씨의 증가로 충남 논산에 조선 후기 학자 명재 윤증고택이 남아 있고 이 고택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조선의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서 전통 한옥의 모델이라고 평가받은 뿌리 깊은 집안이다. 특히 파평 윤씨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종학당'이 있는데 이 종학당은 조선 인조 21년(1643) 윤순거가 문중의 자녀 교육을 위해 건립하고 종약(宗約)을 제정하여 집안의 자녀와 문중의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세계 유일의 사립학교(서당)이다. 종학당 건립 후 28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신교육제도의 도입으로 폐쇄되었다.

무려 280여년 동안 이 파평 윤씨 사립학교를 통해 42명의 문과 급제자 31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세계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 유산이 되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충청도에 올 때마다 '충청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던 바로 그 이유였고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12월 2일 자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던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긴 했지만 속칭 '짜아지 없는 자식'이 된 윤석열은 바로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는 논산의 윤증고택이나 종학당에 한 번도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파평 윤씨 집안의 대표적 보수 책사인 윤여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재명의 결정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를 외치며, 국민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대로 진보와 보수, 진영과 계파를 뛰어넘는 용광로식 총망라된 선대위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경선 라이벌이었던 김경수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혁혁한 성공 이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영입한 것은 바로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를 촉발된 의료 대란을 종식시킬 강력한 인물로 지목하고 영입하였을 것이다. 근대화 백 년 동안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선택은 바로 우리 국민 몫이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최공섭  
프리랜서 PD

“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캠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  
(백낙천)

”

‘이재명은 일 잘하는 단체장입니다. 본인이 한 말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94% 이상 실천 검증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정립합니다. 공직자에게 귀가 따갑게 청렴정신을 강조하였고 수 백번의 압수수색에도 단 한 건의 불법적인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후보자는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고 준비되어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공무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공무원 152명이 한 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순회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89.77%를 얻은 이재명은 돌풍과 같은 인기를 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77.53%)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당내 경선 득표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국민 삶과 동행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라는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그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길 고대하게 된다.

2004년 성남 시장앞 작은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열린 결심에서 시작된 이재명의 기적은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엄청난 임무를 앞두고 있다. 바로 한 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공무원 152명이 이재명 기적의 작은 마중물이다.

지난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경선도 론 후 바로 AI가 각 후보자 별 흥미로운 인물평을 내놓았다. ‘이미지는 세련되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안 보인다. 정치신인이라기 보다 잘 짜여진 기획된 인물’ 바로 AI가 한동훈 후보를 평가하는 글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격한 표현은 많은 데 구체적 정책이 없다. 말은 많지만 논리적 구조가 없고 말을 하면 항상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다.’

홍준표에 대해선 ‘자신감은 넘치지만 타인의 말을 듣지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 안철수는 더 정확하다. ‘중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실제 모호하고 출마는 자주하지만 그 이유가 희미하다.’ 역시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AI의 인물평이다.

오로지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기득권층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이 인생이 목표가 된 사람들 중 가까이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든 그의 과거 말과 행동, 결정만을 봐도 명확하게 그들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어 유죄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한 이유나 배경은 명확해 보인다. 출생지가 바로 현 경상북도 경주시이고 2014년 3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은혜와 의리로 대법원에서 이제는 무죄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조차 역시 무죄 판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 조차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에

게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을 임명 받은 은혜를 갖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의 무죄 공직선거법조차 거침없이 유죄로 판결, 파기 환송한 당연한 이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 (백낙천) ‘지금까지 살아남아 거대 야당의 황제 대표가 된 것은 김대중도 못한 일이다. 보수진영이 씩은 악마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고 월간조선의 최보식은 말했다.

특히 정규제TV에서도 이재명을 한마디 거들어 주었다. ‘이재명이 전과 4범 중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KBS 최철호PD다. KBS PD이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옆에서 거들어준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영터리가 어디 있어요. 5건의 재판도 모두 검찰정권이 만들어낸 기소의 횡포다.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없애면 소위 검찰독재 수법에 걸려든 재판 5건을 모두 경멸합니다.’

이제라도 이재명의 분노를 가감 없이 평가하고 보도하는 보수 논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의 기적은 더욱 더 가깝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늘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은 진짜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표준이 될 이재명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바뀔 6월 3일, 바로 이재명과 함께 우리 손에 달렸다.

<글>

(20.6\*23.8)cm

▲ 전라매일 2025년 5월 16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백낙천)”**

‘이재명은 일 잘하는 단체장입니다. 본인이 한 말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을 94% 이상 실천 검증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합니다. 공직자에게 귀가 따갑게 청렴 정신을 강조하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도 단 한 건의 불법적인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후보자는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무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 공무원 152명이 한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순회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89.77%를 얻은 이재명은 돌풍과 같은 인기를 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77.53%)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당내 경선 득표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로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라는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그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

가길 고대하게 된다.

2004년 성남 시청 앞 작은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올린 결심에서 시작된 이재명의 기적은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엄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 바로 한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 공무원 152명이 이재명 기적의 작은 마중물이다.

지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후 바로 AI가 각 후보자별 흥미로운 인물평을 내놓았다. ‘이미지는 세련되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안 보인다. 정치신인이라기보다 잘 짜여진 기획된 인물’ 바로 AI가 한동훈 후보를 평가하는 글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격한 표현은 많은데 구체적 정책이 없다. 말은 많지만 논리적 구조가 없고 말을 하면 항상 옛날이야기로 돌아간다.’

홍준표에 대해선 ‘자신감은 넘치지만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 안철수는 더 정확하다. ‘중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실제 모호하고 출마는 자주 하지만 그 이유가 희미하다.’ 역시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AI의 인물평이다.

오로지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기득권층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 중 기꺼이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든 그의 과거 말과 행

동, 결정만을 봐도 명확하게 그들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어 유죄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나 배경은 명확해 보인다. 출생지가 바로 현 경상북도 경주시 이고 2014년 3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은혜와 의리로 대법원에서 이제는 무죄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조차 역시 무죄 판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조차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제 17대 대법원장을 임명받은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의 무죄 공직선거법조차 거침없이 유죄로 판결, 파기 환송한 당연한 이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백낙천)' '지금까지 살아남아 거대 야당의 황제 대표가 된 것은 김대중도 못 한 일이다. 보수 진영이 씌운 악마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고 월간조선의 최보식은 말했다.

특히 정규재TV에서도 이재명을 한마디 거들고 주었다. '이재명이 전과 4범 중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KBS 최철

호 PD다. KBS PD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옆에서 거들어 준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영터리가 어디 있어요. 5건의 재판도 모두 검찰 정권이 만들어낸 기소의 횡포다.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얹어맨 소위 검찰 독재수법에 걸려든 재판 5건을 모두 경멸합니다.'

이제라도 이재명의 본모습을 가감 없이 평가 하고 보도하는 보수 논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의 기적은 더욱더 가깝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늘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은 진짜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표준이 될 이재명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바뀔 6월 3일, 바로 이재명과 함께 우리 손에 달렸다.

#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최공섭  
프리랜서 PD

“

500년 조선사회를

뿌리채 흔든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메시지는

오늘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K-민주주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

‘조백숙이 누군 줄 알아요, 정음 동학혁명때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의 손녀딸이랑 겹요’ 우연히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들려준 말인데, 자신이 바로 절대권력을 가진 왕인줄 착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어떻게 전라도 국회의원인 조백숙이 윤석열 편에 설 수 있는나라는 원망섞인 비난이어서 검색해보니 조병갑의 진짜 증손녀딸은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바 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였다. 마침 지난 5월 11일 정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리는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가 열리고 있다. 12·3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 기간중에 열린 전봉준 순국 기념 특별전은 더욱 더 큰 의미로 혁명은 결코 1895년에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도 수많은 ‘전봉준’들이 불에 맞서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 독재정권 맞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민주주의의 결실이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친일파 조병갑의 후손들이 아직도 평평거리며 홍보하는 오늘의 현실이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득권의 현주소다. 130년전 전봉준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가치를 세운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탐관오리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한 후 부조금으로 2천 냥을 거둬오라는 요구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대표로 나서 항의하자 도리어 조병갑에게 곤장을 맞아 죽는 역울한 일이 벌어지고 마침내 1894년 농민 천여 명과 함께 혁명의 기치를 들었고 양반 착취에 저항한 최초의 시도로 관아를 습격해 빼앗긴 곡식을 되찾고 사람이 바로 세상의 중심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조선 강도를 피로 물들인 이 동학농민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조선의 구태의연한 봉건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새벽을 열

어졌던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지원으로 받은 막강한 개틀링기관총 앞에서 2만 5천명의 무고한 농민군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참혹하게 희생된 농민군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민원의 혁명이다.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조선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된 지 4일 후인 3월 29일 이른바 처음 도입된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내려진 첫 사형선고야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 지도자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김덕명 등에 대한 교수형 선고였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은 농민들이 미리 불기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고, 책임을 물어 잠시 유배되었지만 청일전쟁 직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이 설립한 친일 내각에 의해 석방됐고, 도리어 고종으로부터 중용받아 1898년에는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자신에 의해 야기된 동학 혁명의 2대 접주 최시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역사적 불공정 재판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고종과 친일파 양쪽에게 총애받으며 호의호식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친손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명예교수는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기도 했고, 2006년 《월간조선》 11월호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촉발시킨 탐관오리이자 친일파 집안인 조병갑 집안의 손녀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도리어 조기숙은 ‘증조부에 대한 사실이 오류이며 증조부는 역사의 희생양일 뿐이다’라는 증조부 조병갑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대를 옹호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며 거꾸로 비판자들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반성은 커녕 어떤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이 지위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전봉준 장군의 딸 전옥례는 15세의 어린 나이로 화를 피하여 진안군 마이산으로 들어가 김옥련으로 이름을 고치고, 어렵게 숨어 살다가 동학 농민 운동이 민란에서 농민운동으로 승격된 1970년에야 비로소 그 동안 전봉준의 딸임을 숨기고 살아왔던 27년 기구한 사실을 밝히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5백년 조선사회를 뿌리채 뒤 흔들어 놓은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는 유관순의 3·1운동과 안중근의 만주 하얼빈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 오는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의 녹두밭 대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를 부르며 푸르른 응원봉을 흔드는 K-민주주의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정치가 뭘니까? 국민을 괴롭히고 지배하라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인가? 대한민국의 공복, 국민의 머슴 중에 제일 큰 책임을 지닌 머슴, 옛날로 하면 마름아닙니까? 마름의 최대 덕목은 주인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 충직한 마름, 유능한 머슴이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인 인내천은 이재명의 충직하고 유능한 마름, 머슴으로 변하였지만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한 고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는 이재명의 약속을 오늘 다시 바라보게 된다.

(20.7\*26.9)cm

▲ 전라매일 2025년 5월 22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500년 조선 사회를 뿌리채 흔든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는 오늘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K-민주주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조배숙이 누군 줄 알아요, 정읍 동학혁명 때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의 손녀딸이랑게요’ 우연히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들려준 말인데, 자신이 바로 절대권력을 가진 왕인 줄 착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어떻게 전라도 국회의원이 조배숙이 윤석열 편에 설 수 있느냐는 원망 섞인 비난이어서 검색해 보니 조병갑의 진짜 증손녀딸은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바 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였다. 마침 지난 5월 11일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리는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가 열리고 있다. 12·3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 기간에 열린 전봉준 순국 기념 특별전은 더욱더 큰 의미로 ‘혁명은 결코 1895년에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도 수많은 ‘전봉준’들이 불의에 맞서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 독재정권 맞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민주주의의 결실이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친일파 조병갑의 후손들이 아직도 평평거리며 활보하는 오늘의 현실이 아직 청

산하지 못한 과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득권의 현주소다. 130년 전 전봉준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가치를 세운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탐관오리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한 후 부조금으로 2천냥을 거둬오라는 요구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대표로 나서 항의하자 도리어 조병갑에게 곤장을 맞아 죽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마침내 1894년 농민 천여 명과 함께 혁명의 가치를 들었고 양반 착취에 저항한 최초의 시도로 관아를 습격해 빼앗긴 곡식을 되찾고 사람이 바로 세상의 중심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인 이 동학농민 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조선의 구태의연한 봉건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세력을 열어젖힌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지원으로 받은 막강한 개틀링 기관총 앞에서 2만 5천 명의 무고한 농민군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아직 까지도 참혹하게 희생된 농민군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다.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조선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된 지 4일 후인 3월 29일 이른바 처음 도입된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내려진 첫 사형 선고가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 지도자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김덕명 등에 대한 교수형 선고였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은 농민들이 미리 봉기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고, 책임을 물어 잠시 유배되었지만 청일전쟁 직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이 설립한 친일 내각에 의해 석방됐고, 도리어 고종으로부터 중용받아 1898년에는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자신에 의해 야기된 동학혁명의 2대 접주 최시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역사적 불공정 재판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고종과 친일파 양쪽에게 총애받으며 호의호식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친손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명예교수는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기도 했고, 2006년 《월간조선》 11월호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촉발시킨 탐관오리이자 친일파 집안인 조병갑 집안의 손녀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도리어 조기숙은 '증조부에 대한 사실이 오류이며 증조부는 역사의 희생양일 뿐이다.'라는 증조부 조병갑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대를 옹호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며 거꾸로 비판자들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반성은 커녕 어떤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이 지위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전봉준 장군의 딸 전옥례는 15세의 어린 나이로 화를 피하여 진안군 마이산으로 들어가 김옥련으로 이름을 고치고, 어렵게 숨어 살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민란에서 농민운동으로 승격된 1970년에야 비로소 그동안 전봉준의 딸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기구한 사실을 밝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5백 년 조선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는 유관순의 3·1운동과 안중근의 만주 하얼빈의 역사를 만들어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의 녹두꽃 대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를 부르며 푸르른 응원봉을 흔드는 K-민주주의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정치가 뭘니까? 국민을 괴롭히고 지배 하라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잡니까? 대한민국의 공복, 국민의 머슴 중에 제일 큰 책임을 지닌 머슴, 옛말로 하면 마름 아닙니까? 마름의 최대 덕목은 주인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 충직한 마름, 유능한 머슴이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인 인내천은 이재명의 충직하고 유능한 마름. 머슴으로 변하였지만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는 이재명의 약속을 오늘 다시 바라보게 된다.

### 경고결정문

1.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등 7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2025년 6월 10일

(20.6\*10.4)cm

▲ 전라매일 2025년 6월 10일자 11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3

**언론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심의대상기사**

1. 내외뉴스통신 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하의 기사
2.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문][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제하의 기사
3.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제하의 기사
4.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3일자 정치면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제하의 기사
5.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4일자 정치면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끰니다!”」 제하의 기사
6.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제하의 칼럼
7.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전문][김문수의 눈물]」 제하의 기사
8.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정치면 「[전문][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외뉴스통신 홈페이지(<https://www.nbnnews.co.kr>) 정치-정치일반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2] 경고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경고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 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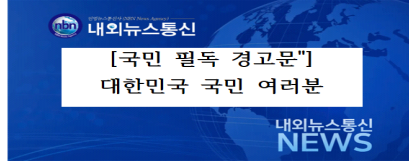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 뉴스통신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편집국 | ⓒ 승인 2025.04.27 10:55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재명의 본심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석한 결과,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이재명의 발언과 그 위험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경제]

대기업에 리코법 적용해 재산 몰수 추진

법인세 인상, 재벌 해체 선언

지역화폐 의무화, 완전 추가 건설 반대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반복

▶ 평가: 반기업-반시장적 성향, 산업 기반 붕괴 위험.

### [2. 복지]

전국민 기본소득, 토지배당 주장

데이터세, AI세,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100만원 주면 경기가 살아난다" 발언

▶ 평가: 재정 파탄 유발, 무책임한 포퓰리즘.

### [3. 노동]

"한상균을 노동부장관 시키자", "노동자정권 만들어야"

파업 손해배상 제한 주장

경찰 부상에도 시위대 편들기

▶ 평가: 법질서 파괴, 사회 혼란 유발, 극좌 성향.

### [4. 법치]

"대선은 부정선거", "전산개표 조작 가능" 주장

6.25 전쟁은 총돌 누적이야 예국

음식점 총량제 주장

▶ 평가: 헌정질서 부정, 법치 붕괴 우려.

### [5. 외교]

"미군 철수 대비해야", "사드는 무용지물"

"중국 자국 말자", "일본은 적성국"

▶ 평가: 동맹 파괴, 외교 고립 초래.

### [6. 안보]

"미군은 정령군", "사드보다 보일러" 주장

김일성-김정일 긍정 발언

북한 포격 사건 회색

▶ 평가: 국가 안보 무시, 국민 안전 위협.

### [7. 막말]

이승만 대통령을 "쓰레기"로 모욕

"박근혜는 유애 앞으로 보내자" 막말

기자 질문 끊고 모욕 발언 반복

▶ 평가: 국가 원수 품격 상실, 국민 통합 불가.

### [8. 정당관]

"국힘은 무늬정당", "우리 지지자는 고학력"

정치보복은 "올래 해야" 발언

▶ 평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편 가르기, 민주주의 파괴.

### [9. 재능 대응]

세월호 국정원 소유 주장

환풍기 사고 실소, 이천화재 막방 논란

▶ 평가: 국민 생명 경시, 위기대응 리더십 부재.

### [10. 언론관]

"TV조선 폐간시키겠다", "언론은 징벌해야 한다"

카톡 등 통제 발언

▶ 평가: 언론 자유 침해, 전체주의적 통제 성향.

최종 종합 평가:

국가관: 심각한 결함.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언 다수)

정책 능력: 비현실적 포퓰리즘, (재정-경제 붕괴 우려)

안보관: 심각한 안보 불감증. (국민 생명 위협)

도덕성: 국민 통합 불가. (품격-도덕성 결여)

언론관: 전체주의적 경향.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결론: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절대 부적격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편집국 | 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재명의 본심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석한 결과,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이재명의 발언과 그 위험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대기업에 리코법 적용해 재산 몰수 추진  
법인세 인상, 재벌 해체 선언

지역화폐 의무화, 원전 추가 건설 반대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반복

▶ 평가: 반기업·반시장적 성향. 산업 기반 붕괴 위험.

【2. 복지】

전 국민 기본소득, 토지배당 주장  
데이터세, AI세,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100만원 주면 경기가 살아난다” 망언

▶ 평가: 재정 파탄 유발, 무책임한 포퓰리즘.

【3. 노동】

“한상균을 노동부 장관 시키자”, “노동자 정권 만들어야”

파업 손해배상 제한 주장

경찰 부상에도 시위대 편들기

▶ 평가: 법질서 파괴, 사회 혼란 유발. 극좌 성향.

【4. 법치】

“대선은 부정선거”, “전산 개표 조작 가능” 주장  
6.25 전쟁은 충돌 누적이라 왜곡

음식점 총량제 주장

▶ 평가: 헌정질서 부정, 법치 붕괴 우려.

【5. 외교】

“미군 철수 대비해야”, “사드는 무용지물”  
“중국 자극 말자”, “일본은 적성국”

▶ 평가: 동맹 파괴, 외교 고립 초래.

【6. 안보】

“미군은 점령군”, “사드보다 보일러” 주장  
김일성·김정일 긍정 발언

북한 포격 사건 희석

▶ 평가: 국가 안보 무시, 국민 안전 위협.

【7. 막말】

이승만 대통령을 “쓰레기”로 모욕

“박근혜는 유해 옆으로 보내자” 막말

기자 질문 끊고 모욕 발언 반복

▶ 평가: 국가 원수 폄격 상실. 국민 통합 불가.

**【8. 정당관】**

“국힘은 무뇌정당”, “우리 지지자는 고학력”  
정치보복은 “몰래 해야” 망언

▶ 평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편 가르기.  
민주주의 파괴.

여러분,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2025년 4월 2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9. 재난 대응】**

세월호 국정원 소유 주장

환풍기 사고 실소, 이천 화재 먹방 논란

▶ 평가: 국민 생명 경시. 위기 대응 리더십 부재.

**【10. 언론관】**

“TV조선 폐간시키겠다”, “언론은 징벌해야 한다”  
카톡 등 통제 발언

▶ 평가: 언론 자유 침해, 전체주의적 통제 성향.

최종 종합 평가:

국가관: 심각한 결함.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언 다수)

정책 능력: 비현실적 포퓰리즘. (재정·경제 붕괴 우려)

안보관: 심각한 안보 불감증. (국민 생명 위협)

도덕성: 국민 통합 불가. (품격·도덕성 결여)

언론관: 전체주의적 경향.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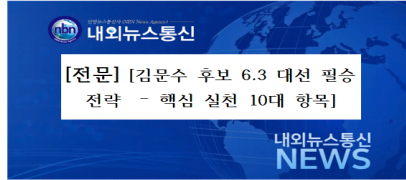
결론: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절대 부적격입니다.

# [전문] [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 편집국 | ⓒ 승인 2025.05.11 14:57



[전문] [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 1. 부정·불법선거 원천 차단 및 최고형 경고 선언

중앙선관위 및 투표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세력과 부정선거 시도자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간주, 당선 즉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형법에 따라 최고형을 선고하겠다"고 공식 경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 '공정선거 수호자' 이미지를 확립.

### 2. 사법부에 공정 재판 촉구 및 위반 시 엄정 대응 선언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집행"을 촉구. 특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지연에 대해 "정의 유예는 정의의 파괴"라며 강력 경고. 김문수 측이 이재명의 협박과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서 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

### 3. 국민의힘 당내 분열 조기 수습 및 통합 리더십 표방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 "당원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전 후보군 및 계파 대표자들과 공개적 화합 퍼포먼스, 공동 선언 등을 통해 국민적 통합 이미지 연출. 당 내 상처를 치유하고 유능한 통합 리더로 인식 전환.

### 4. 서울고법 재판 지연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서울고법의 6.18 형량 선고 연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규탄. "국민은 범죄자의 출마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은 책임 있게 결단하라"고 강력 메시지 전달.

### 5. 민생·안보·외교 핵심정책 조기 발표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위해 즉각 실행 가능한 ①서민가계 보호 ②물가안정 ③한미동맹 ④북중 견제전략 ⑤청년일자리 대책 등 국정 핵심 정책 5대 패키지를 대국민 발표.

### 6. 이재명 후보 자격정치 가치본 신칭의 조속한 제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5.1), 서울고법 형량 선고 예정(6.18)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파선거권 실질 상실을 주장하며 가치본 신칭 제기. 가치본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과 국민 판단 보호 차원의 법률적 정공범.

### 7. '기호 2번은 자유대한민국' 메시지 프레임화

민주당(기호 1번)과 이재명의 범죄 전력을 엮어 "기호 1번은 범죄, 기호 2번은 헌법"이라는 프레임 고착. "기호 2번 김문수 = 자유와 정의의 표상"이라는 상징적 언어 반복 주입.

### 8. 유권자 참여 유도 - '기권은 범죄를 돕는 일' 프레임

무당층·중도층 대상으로 "무관심은 범죄자의 당선을 돕는 것"이라는 책임 프레임 전개.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메시지로 감성·도덕성 공략.

### 9. 5.20~6.3일 집중 메시지 및 여론전 돌입

6.18 선고 전에 있을 선거일을 겨냥해 "범죄자 후보에게 표를 주면 나중에 다시 선거 치르게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집중 배포.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길거리 현수막을 통한 집중 홍보 돌입.

### 10. 김문수 다류 콘텐츠 + 국민 서명운동 병행

김문수의 노동자 출신, 반독재운동, 무소유 철학을 담은 진정성 다류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동시에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는 국민 서명운동과 자유수호 국민 선언 캠페인으로 전국적 여론전 유도.

2025년 5월 11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편집국 nbnews1@naver.com

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원]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1. 부정·불법 선거 원천 차단 및 최고형 경고 선언

중앙선관위 및 투표 시스템을 악용한 조작 세력과 부정선거 시도자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으로 간주, 당선 즉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형법에 따라 최고형을 선고하겠다”고 공식 경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 ‘공정선거 수호자’ 이미지를 확립.

2. 사법부에 공정 재판 촉구 및 위반 시 엄정 대응 선언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집행”을 촉구.

특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지연에 대해 “정의 유예는 정의의 파괴”라며 강력 경고.

김문수 측이 이재명의 헐박과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서 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

3. 국민의힘 당내 분열 조기 수습 및 통합 리더십 표방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 “당원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전 후보군 및 계파 대표자들과 공개적 화합 퍼포먼스, 공동 선언 등을 통해 국민적 통합 이미지 연출.

당내 상처를 치유하고 '유능한 통합 리더'로

인식 전환.

4. 서울고법 재판 지연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서울고법의 6.18 형량 선고 연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규탄.

“국민은 범죄자의 출마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은 책임 있게 결단하라”고 강력 메시지 전달.

5. 민생·안보·외교 핵심 정책 조기 발표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위해 즉각 실행 가능한 ①서민 가게 보호 ②물가 안정 ③한미동맹 ④북중 견제 전략 ⑤청년 일자리 대책 등 국정 핵심 정책 5대 패키지를 대국민 발표.

6. 이재명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제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5.1), 서울고법 형량 선고 예정(6.18)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실질 상실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제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과 국민 판단 보호 차원의 법률적 정공법.

7. ‘기호 2번은 자유대한민국’ 메시지 프레임화  
민주당(기호 1번)과 이재명의 범죄 전력을 엮어 “기호 1번은 범죄, 기호 2번은 헌법”이라는 프레임 고착.

“기호 2번 김문수 = 자유와 정의의 표상”이라는 상징적 언어 반복 주입.

#### 8. 유권자 참여 유도 - ‘기권은 범죄를 돕는 일’ 프레임

무당층·중도층 대상으로 “무관심은 범죄자의 당선을 돕는 것”이라는 책임 프레임 전개.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메시지로 감성·도덕심 공략.

#### 9. 5.20~6.3일 집중 메시지 및 여론전 돌입 6.18 선고 전에 있을 선거일을 겨냥해 “범죄자 후보에게 표를 주면 나중에 다시 선거 치르게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집중 배포.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길거리 현수막을 통한 집중 홍보 돌입.

#### 10. 김문수 다큐 콘텐츠 + 국민 서명운동 병행 김문수의 노동자 출신, 반독재운동, 무소유 철학을 담은 진정성 다큐 콘텐츠 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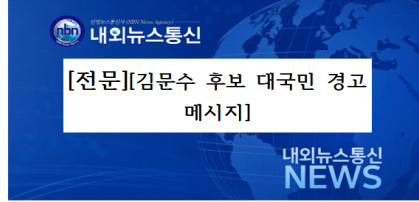
동시에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는 국민 서명운동과 자유 수호 국민 선언 캠페인으로 전국적 여론전 유도.

2025년 5월 11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A 편집국 | © 승인 2025.05.11 23:18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여론조사 및 언론 보도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겠습니다.

허위 수치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왜곡 프레임 등 더 이상 언론 자유나 조사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 범죄’로 간주하여, 당선 이후 즉시 특별감찰과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패가망신할 정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선은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느냐, 조작과 거짓을 용인하느냐의 기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민심은 조작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원]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 조사와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여론조사 및 언론 보도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허위 수치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왜곡 프레임 등은 더 이상 언론 자유나 조사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면책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 범죄’로 간주하여, 당선 이후 즉시 특별감찰과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패가망신할 정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선은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느냐, 조작과 거짓을 용인하느냐의 기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민심은 조작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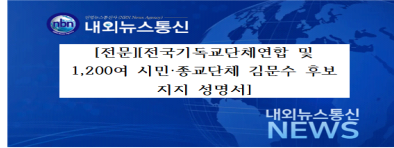
4.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주 편집국 | 2025.05.13 19:12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자유민주주의와 신앙, 가정과 윤리를 지킬 유일한 선택 –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의 선택을 넘어 문명의 방향과 가치의 존속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1,200여 개 시민 및 종교 단체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 양심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 1.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킬 유일한 지도자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국회와 경기도정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좌익에서 출발했으나, 자유의 가치가 진정한 평등과 분배의 출발점을 깨닫고 보수로 전향한 역사 의식과 결단력 있는 인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교회도 설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 2.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낼 유일한 후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악법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 정치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교회와 설 수 있는 나라,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3. 청렴하고 정직한 삶, 서민과 약자 편에 서온 진심의 사람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 남은 선거자금을 전액 당에 헌납하며 공직자의 청렴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상성반도체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X사업 구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행정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한센인, 탈북민,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해왔으며,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탈북민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지도자, 그것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 4.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 [지지 선언 단체 및 주요 인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회장 박동호 목사)

오산리 금식기도원 전 원장 권경환 목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 이훈 목사)

진리수호국가기독교연합 (상임회장 노요한 목사, 공동대표 조규현 목사)

정의자유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용석 목사)

법국민보수대연합 (사무총장 장한목 목사)

대한민국기독교인연합회

교회생명지키기연대

바른신앙수호목회자회

기독교청년나라지킴이연대

한국기독교기정회복연합

자유대한기독교청년연합

통일선교연대

달북민신앙공동체연대

전국목회차사모기도연합

다음세대기독교운동본부

한국기독교문화선교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전국교회선교협력연대

기타 전국 1,200여 시민 및 종교단체 일동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헌법적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김문수 후보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의 마음을 모읍시다.

2025년 5월 13일

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일동

nbnews1@naver.com

편집국 nbnews1@naver.com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3일자 정치면

**[전문] [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 가정과 윤리를 지킬 유일한 선택 -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의 선택을 넘어 문명의 방향과 가치의 존속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1,200여개 시민 및 종교단체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보로 공식 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 양심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1.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킬 유일한 지도자**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국회와 경기도정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좌익에서 출발했으나, 자유의 가치가 진정한 평등과 분배의 출발점임을 깨닫고 보수로 전향한 역사의식과 결단력 있는 인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설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2.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낼 유일한 후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악법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 정치 현장에서 일관되게 저지해 온 인물입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나라,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청렴하고 정직한 삶, 서민과 약자 편에 서은 진심의 사람**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 남은 선거 자금을 전액 당에 헌납하며 공직자의 청렴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삼성반도체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X 사업 구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행정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한센인, 탈북민,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해왔으며,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탈북민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지도자, 그것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지 선언 단체 및 주요 인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회장 박동호 목사)

오산리 금식기도원 전 원장 권경환 목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 이훈 목사)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상임회장 노요한

목사, 공동대표 조규현 목사)

정의자유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용석 목사)

범국민보수대연합 (사무총장 장한묵 목사)

대한민국기독언론인연합회

교회생명지키기연대

바른신앙수호목회자회

기독청년나라지킴이연대

한국기독교가정회복연합

자유대한기독청년연합

통일선교연대

탈북민신앙공동체연대

전국목회자사모기도연합

다음세대기독교운동본부

한국기독문화선교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전국교회선교협력연대

기타 전국 1,200여 시민 및 종교단체 일동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신  
앙의 양심과 헌법적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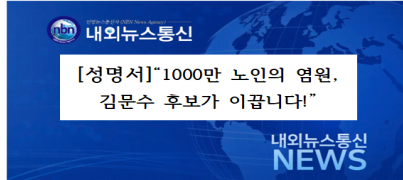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김문수 후보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의 마음을 모읍시다.

2025년 5월 13일

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일동

##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끁니다!"

A 편집국 | © 승인 2025.05.14 10:08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전문] 성명서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 고령 인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시니어 세대가 이제는 돌봄과 존중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주거·돌봄 서비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가 직접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려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를 실현할 준비가 된 단 한 명의 후보,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복지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는 GTX, 판교테크노밸리,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지하며 일자리와 미래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는 공직생활 내내 단 한 점의 부정 없이 청렴하게 일했고, 국민 세금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지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복지의 본질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김문수와 함께 가능합니다!"

"1000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노인기초소득 40만 원 인상,

70세 이상 고령층 무상의료 적용,

전국 시니어 복지센터 확대 설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노인복지의 획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경륜과 도덕성, 능력과 청렴함을 모두 갖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시니어 세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 시니어평생복지위원회 일동  
(공동위원장 김일운, 김의재, 김호일, 문희주, 박희도, 송영선, 오제세, 유용태, 이규택, 이남식, 이춘식, 장준근, 조만준, 최태현, 홍수환, 황우여 외 다수)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과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4일자 정치면

## [성명서] “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룹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 고령 인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시니어 세대가 이제는 돌봄과 존중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주거·돌봄 서비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가 직접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려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를 실현할 준비가 된 단 한 명의 후보,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복지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는 GTX, 판교테크노밸리,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하며 일자리와 미래를 함께 열어왔습니다.

그는 공직 생활 내내 단 한 점의 부정 없이 청렴하게 일했고, 국민 세금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지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복지의 본질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노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김문수와 함께 가능합니다!”

“1000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노인기초소득 40만 원 인상,

70세 이상 고령층 무상의료 적용,

전국 시니어 복지센터 확대 설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노인복지의 획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경륜과 도덕성, 능력과 청렴함을 모두 갖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시니어 세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  
시니어평생복지위원회 일동  
(공동위원장 김일윤, 김의재, 김호일, 문희주,  
박희도, 송영선, 오제세, 유용태, 이규택,  
이남식, 이춘식, 장훈근, 조만준, 최태현,  
홍수환, 황우여 외 다수)

#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 편집국 | © 승인 2025.05.16 10:54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우파들은昨속의 국내 상황을 자유민주주의대 중북좌파의 이념갈등으로 인한 좌우 대결로 정의 내립니다. “이념이 밥 먹여준다?” 중북좌파 인기영합주의 이재명의 단골 메뉴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지 왜 꼭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는 말로 돌립니다. 중북좌파/주사파가 집권하면 어쨌든 밥 먹여준다.

그런데 이념이 밥 먹여줍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최초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삽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중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13,000불가량되고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은 37,000불가량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중국 69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모두 6개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대만 33위 일본 34위 중국 69위 베트남 118위 북한 180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 대만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 베트남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Richmond에서 Patrick Henry가 한 연설 내용입니다.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은 불린서 혁명 역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 모두 1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해방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인 남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6.25를 거치고 1960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비록 개발독재기간을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 중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에는 인적자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삽니다. 자유는 개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의 기업은 너무 성공적이자 공산당이 제재하고 공산당이 빼앗아 운영합니다. 개인이 공산당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용납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삼성을 탄압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이제는 3-4위로 떨어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은 민노총 소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끌어내렸고 문재인은 삼성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우파 정권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원도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1등 반도체 회사 삼성이 태어나는데 가능했지만 중북좌파 문재인 정권은 삼성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Amazon Telsa Google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성공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K-culture, K-food, K-화장품, 등 K가 붙으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합니다. 한국 젊은 여자들이 세계 golf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이 세계로 진출합니다. 중국선수 북한선수들이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K-pop이 세계를 휩쓸고 BTS가 전세계 1위가 되기도 하는데 C-pop 또는 NK-pop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김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김 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한 일인가요? 개인의 자유가 한 일입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북좌파 국가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5,000만에 불과하고 불과 60년 전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도록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느냐 또는 김일성을 추구하는 중북 좌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만들게 하느냐는 선택을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재명이 승리하면 우리는 북한과 같이 최빈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김문수가 승리하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김문수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Argentine는 1950년대까지도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Peron의 인기영합주의가 시작되어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규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국민 개인 소득은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어 지금은 세계 66위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6.25당시 한국을 원조한 국가이고 세계의 석유매장량의 17.8%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인기영합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주력시키어 지금은 국민 개인 GDP 4,000불, 순위 127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쿠바는 1950년대에 미주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을 Castro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어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의 1/7정도입니다. 위에도 말하였지만 북한은 1980년대 초 까지만 하여도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최빈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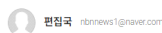
인기영합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국민을 못 살게 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0년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와 중북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순간적으로 다시 최빈국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 중북좌파와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서 선택을 필요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합니다. 현명한 여러분은 가족 친지들과 같이 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2025년 05년 16일 이영작

nbnews1@naver.com



지적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우파들은 昨今の 국내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중북좌파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좌우 대결로 정의 내립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중북좌파 인기영합주의 이재명의 단골 메뉴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지 왜 꼭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는 말로 들립니다. 중북좌파/주사파가 집권하면 어떻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념이 밥 먹여줍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최초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삽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중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13,000불가량 되고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은 37,000불가량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중국 69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모두 6개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대만 33위 일본 34위 중국 69위 베트남 118위 북한 180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 대만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 베트남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독

립운동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Richmond에서 Patrick Henry가 한 연설 내용입니다.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은 불란서 혁명 역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모두 1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해방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나마 반쪽인 남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6.25를 거치고 1960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비록 개발독재 기간을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 중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에는 인적자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삽니다. 자유는 개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의 기업은 너무 성공적이지 공산당이 제재하고 공산당이 빼앗아 운영합니다. 개인이 공산당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용납 못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삼성을 탄압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이제는

3-4위로 떨어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은 민노총 소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끌어내렸고 문재인은 삼성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우파 정권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원도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1등 반도체 회사 삼성이 태어나는데 가능했지만 중북좌파 문재인 정권은 삼성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Amazon, Tesla, Google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성공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K-culture, K-food, K-화장품 등 K가 붙으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합니다. 한국 젊은 여자들이 세계 golf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세계로 진출합니다. 중국 선수 북한 선수들이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K-pop이 세계를 휩쓸고 BTS가 전 세계 1위가 되기도 하는데 C-pop 또는 NK-pop이라는 말은 못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김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김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한 일인가요? 개인의 자유가 한 일입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북좌파 국가라면 절

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5,000만에 불과하고 불과 60년 전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도록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느냐 또는 김일성을 추구하는 중북 좌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만들게 하느냐는 선택을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재명이 승리하면 우리는 북한과 같이 최빈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김문수가 승리하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김문수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Argentine은 1950년대까지도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Peron의 인기영합주의가 시작되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규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국민 개인 소득은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어 지금은 세계 66위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6.25 당시 한국을 원조한 국가이고 세계의 석유매장량의 17.8%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인기영합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추락시키어 지금은 국민 개인 GDP 4,000불, 순위 127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쿠바는 1950년대에 미주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을 Castro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어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의 1/7 정도입니다. 위에도 말하였지만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최빈국입니다.

인기영합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국민을 못 살게 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와 종북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순간적으로 다시 최빈국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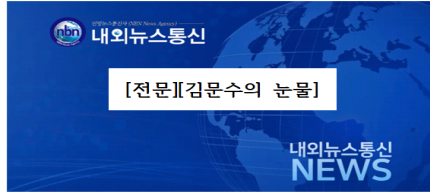
우리는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 종북좌파와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합시다. 현명한 여러분은 가족 친지들과 같이 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2025년 05년 16일 이영작

## [전문]김문수의 눈물

▲ 편집국 | © 승인 2025.05.17 20:34



[전문]김문수의 눈물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울고 싶지 않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고 싶다.

버스 안에서, 장바구니를 든 골목 어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들이 있다.

그 눈물에는 사연이 많다.

[https://youtu.be/MgRuKmvOptc?si=rL0pTMBqkw0\\_Hs7U](https://youtu.be/MgRuKmvOptc?si=rL0pTMBqkw0_Hs7U)

무너진 삶의 자리, 잊힌 약속, 버티아만 했던 하루하루가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조금씩 굳어져 간다.

울음을 삼킨채, 말할 곳도 없이 살아야 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이 있다.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다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거 같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은 제가 대신 흘려겠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구호도, 꾸며낸 감성도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삶이 무거운 사람은 눈물을 참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표정은 더욱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다가 온다.

김문수, 그는 삶의 낮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청년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지난날, 차가운 바닥에 엎어져 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

그는 "정처럼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의 이유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 눈물 앞에 조용히 다가가기, 내가 대신 울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 내미는 손에 우리는 위로받는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아픔을 대신 풀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고, 마음이 덜 외롭다.

김문수의 표정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듯하다.

내가 흘릴 눈물을, 그가 대신 흘려겠다는 듯하다.

김문수의 그 얼굴이,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https://www.freez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4>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전원]김문수의 눈물

울고 싶지 않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고 싶다.

버스 안에서, 장바구니를 든 골목 어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들이 있다.

그 눈물에는 사연이 많다.

[https://youtu.be/MgRuKmvOptc?si=rL0pTMBqkw0\\_Hs7U](https://youtu.be/MgRuKmvOptc?si=rL0pTMBqkw0_Hs7U)

무너진 삶의 자리, 잊힌 약속, 버텨야만 했던 하루하루가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조금씩 굳어져 간다.

울음을 삼킨 채, 말할 곳도 없이 살아야 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눈물을 제가 닦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이 있다.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다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거 같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은 제가 대신 흘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구호도, 꾸며낸 감성도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삶이 무거운 사람은 눈물을 참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표정은 더욱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다가온다.

김문수, 그는 삶의 낮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청년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지난날,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

그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의 이유를 알아 주는 사람이다.

그 눈물 앞에 조용히 다가와, 내가 대신 울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 내미는 손에 우리는 위로받는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아픔을 대신 품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고, 마음이 덜 외롭다.

김문수의 표정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듯하다.

내가 흘릴 눈물을, 그가 대신 흘리겠다는 듯하다.

김문수의 그 얼굴이,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국민들 가슴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https://www.freez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4>

## [전문] [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A 편집국 | © 승인 2025.05.17 13:40

“정직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사진-pixabay)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범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중범죄 혐의자 앞에, 줄지어 총성 맹세를 하는 일부 국민들과 기관, 단체들.

그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양심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김문수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국민 곁에서, 맘 졸이는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패나 특혜와도 무관한, 청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한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섰던 일부 인사들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당을 등지고, 홀로 살아남겠다는 알락한 계산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의 영문이 달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직하게 싸워야 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당권만을 탐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기득권 정치’가 바로 당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당신들의 권력이 위태롭다 생각되어, 오히려 그를 발목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에 무릎 꿇을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세대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로,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진실이 이깁니다.”

2025년 5월 1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미래를 염원하며

“중범죄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와 함께 만드는 정직한 나라”

“침묵은 공범,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nbnews1@naver.com

편집국 nbnews1@naver.com

지적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정치면

[전문][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직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범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중범죄 혐의자 앞에, 줄지어 충성 맹세를 하는 일부 국민들과 기관, 단체들.

그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양심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김문수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국민 곁에서, 땀 흘리는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패나 특혜와도 무관한, 청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한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섰던 일부 인사들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당을 등지고, 홀로 살아남겠다는 알팍한 계산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의 명운이 달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작 함께 싸워야 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당권만을 탐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기득권 정치’가 바로 당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당신들의 권력이 위태롭다 생각되어, 오히려 그를 발목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에 무릎 꿇을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의로,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진실이 이깁니다.”

2025년 5월 1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미래를 염원하며

“중범죄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와 함께 만드는 정직한 나라”

“침묵은 공범,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HOME > 정치 > 정치일반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 편집국 | ⌚ 승인 2025.06.04 17:13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본 뉴스통신은 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하여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 1항제1호 및 제 7조(일반 선거기사) 제 2호, 제 11조(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 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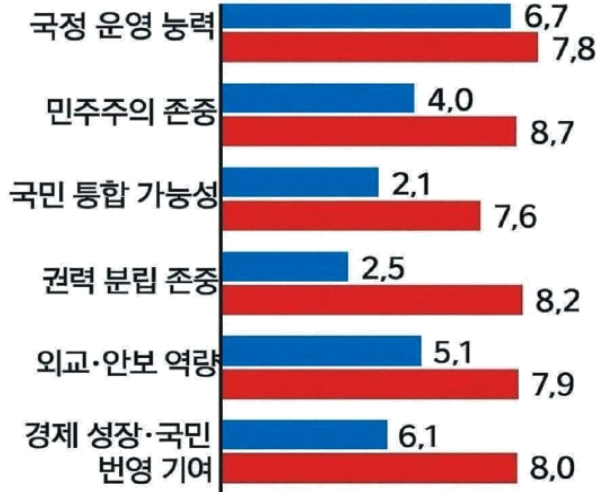
▲ 내외뉴스통신 2025년 6월 4일자 정치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26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제하의 기사  |
| <b>주 문</b>    |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p> <p>2. 주식회사 경북산업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경북연합일보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심의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인 2025년 5월 21일자 1면의 기사 「李-金 개헌카드 ‘헛바퀴’…임기단축 합의 없을 듯」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p>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리더십, 외교 및 안보역량, 경제 성장 기여 등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 <b>별지</b>   | <b>경고결정문</b> |
| <p>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p> <p>2. 본문 :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p> |              |

###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후보 역량

## 이재명 vs 김문수 국정 리더십 평가 차트



174 × 199 mm

▲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면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평가지표·기

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7.5\*6.0)cm

▲ 경북연합일보 2025년 6월 5일자 1면

## 2. 경고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3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  |
| <b>심의대상기사</b> | 1. 전라매일 2025년 4월 22일자 11면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제하의 칼럼<br>2. 전라매일 2025년 4월 23일자 11면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제하의 칼럼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b>이 유</b>    |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br>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최공섭  
프리랜서 PD

“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 (2021년 7월 1일 출마선언문 중)

올해는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영상 출마 선언 중)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13명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 본인을 민주공화국의 대표하는 일꾼, 머슴이나 도구, 대리인이라 부른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 즉 조선시대의 세습 왕부터 일본 식민지 시절의 총독, 오로지 지배자요 권력자였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오는 6월 13일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택의 날, 인사조직이론의 권위자 최동석 선생의 말이 감동을 준다.

“이재명은 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도구처럼 써왔던 정치인들 틈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애써왔고 스스로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최동석의 인사조직연주소유튜브중)

우리 최고법인 헌법 제1조 규정을 문자 그대로 실천되기를 고대하는 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의 바램이

다. 이 날은 전 세계가 진짜 K-민주주의가 열매를 맺는 날임을 기대하고 어떻게 K-민주주의를 한국인들이 선택하는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K-민주주의 드라마에 스스로 머슴이 부르며 만들어낼 결말을 고대하는 것이다. 미국 타임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고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이재명 머슴의 정치드라마의 전개가 흥미로운 것은 평생토록 무(無)자화두를 들고 살았던 효봉 조계종 중정이 돌아가시기 33일 전인 1966년에 2025년까지는 열지 말라는 ‘역상록’이란 예언서를 남겼는데 ‘보이지 않는 영웅이며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이 25년 6월에 백두산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효봉스님은 ‘아 몰라 스님’, ‘너나 잘해라 스님’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1914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 최초로 판사를 역임했던 전설적 스토리를 가진 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1963년 음력 10월 23일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

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치활동을 시작한 우리 시대의 상머슴이다. 성남시장 시절엔 시민의 머슴으로, 경기도 지사였을 때는 도민의 머슴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머슴으로 벌써 세 번째 손을 번쩍 들었다.

2004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문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고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2004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문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고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그의 역정은 놀랍고 경이적이다. 그의 가슴깊이 품고 있는 선명한 비전과 이 비전을 우리네 삶에 옮길 독특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전신체제형 지도자로 우리 앞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오직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했던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에 눈만 뜨면 술타령, 밤낮없이 점술가 도사를 찾은 대통령,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에, 경제를 죽이고, 북한까지 적대국으로 한 반도의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가 아니었던가? 바로 지난 입후한 겨울 살얼음에는 추위,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20.6×24.4)cm

▲ 전략매일 2025년 4월 22일자 11면

재남  
생의 의결 사례

## 경상도 인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 (2021년 7월 1일 출마선언문 중) 올해는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영상 출마 선언 중)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13명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 본인을 민주공화국의 대표 하는 일꾼, 머슴이나 도구, 대리인이라 부른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 즉 조선시대의 세습 왕부터 일본 식민지 시절의 총독, 오로지 지배자요 권력자였던 대통령이였다. 그러나 오는 6월 13일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택의 날, 인사조직이론의 권위자 최동석 선생의 말이 감동을 준다.

“이재명은 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도구처럼 써왔던

정치인들 틈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애써왔고 스스로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중)”

우리 최고법인 헌법 제1조 규정을 문자 그대로 실천되기를 고대하는 제21대 대통령을 선출 하는 날의 바람이다. 이날은 전 세계가 진짜 K-민주주의가 열매를 맺는 날임을 기대하고 어떻게 K-민주주의를 한국민들이 선택하는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K-민주주의 드라마에 스스로 머슴이 부르며 만들어낼 결말을 고대하는 것이다. 미국 타임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 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표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이재명 머슴의 정치 드라마의 전개가 흥미로운 것은 평생토록 무(無)자 화두를 들고 살았던 효봉 조계종 종정이 돌아가시기 33일 전인 1966년에 2025년까지는 열지 말라는 ‘역상록’이란 예언서를 남겼는데 ‘보이지 않는 영웅이며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이 25년 6월에 백두산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효봉스님은 '아 몰라 스님', '너나 잘해라 스님'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1914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 최초로 판사를 역임했던 전설적 스토리를 가진 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1963년 음력 10월 23일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치활동을 시작한 우리 시대의 상머슴이다. 성남시장 시절엔 시민의 머슴으로,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도민의 머슴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머슴으로 벌써 세 번째 손을 번쩍 들었다.

2004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문재인 참여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파격 발탁되어 한미 FTA 타결을 주도했던 김현종이 '우리 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한다. 정치가 세상만사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글로벌시장, 외교, 안보, 경제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아야 한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다.'라고 말한 대로 올해 2025년 새로운 상머슴 대통령의 드라마를 엮어낼 이재명의 역정은 놀랍고 경이적이다. 그의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선명한 비전과 이 비전을 우리네 삶에 옮길 두둑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전시 체제형 지도자로 우리 앞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오직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했던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에 눈만 뜨면 술타령, 밤낮없이 점술가 도사를 찾은 대통령,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에, 경제를 죽이고, 북한까지 적대국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가 아니었던가? 바로 지난 엄혹한 겨울 살얼음 에는 추위,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최공섭  
프리랜서 PD

“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팍 이겼수다’

라는 대선드라마가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

“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진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중)

상머슴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의 비전은 가슴을 뛰게할 만큼 확고하다.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경제 상태, 전 세계가 성장을 전제가 떨어지고 있어서 바로 먹고사는 문제부터 들고 나선 비전,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라는 김구 선생의 해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지금 문화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한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K-민주주의의 나라로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절대 검찰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의 성과는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를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부

르며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나라 한 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 힘 후보들의 생각이 바로 당 비전이 ‘반 이재명 죽이기’로 8명의 후보가 하나같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성토대회를 만들어 버리는 후안무치한 내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아닌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막말로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전과자의 나라 만들어서야 되겠다’는 홍준표나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독재’라고 성토하는 이철우 후보들, 이재명 한 사람을 놓고 늑대처럼 달려드는 1대 8의 대통령 계임에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아직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절대 권력 대통령 놀음을 하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

4월 15일 오전 10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 3천여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액 후원으로 집계되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후원 첫날 약 9억 854만원을 모금했고, 두달 동안 3만 1천여명이 후원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두 배의 인원이 후원에 참여한 K-민주주의의 오늘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민족,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 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불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늘 이재명이 세 번째로 써 내려간 K-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킬 K-민주주의 정치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 평가받은 제주의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식’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팍 이겼수다’라는 대선 드라마가 제21대 상머슴으로 경상도 안동 가난한 촌놈 대통령의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게 된다.

(20.8\*22.8)cm

▲ 전라매일 2025년 4월 23일자 11면

**경상도 인동 기린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딱 이겼수다’라는 대선 드라마가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개 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진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랴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기자 회견 중)

상머슴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의 비전은 가슴을 뛰게 할 만큼 확고하다.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경제 상태, 전 세계가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서 바로 먹고사는 문제부터 들고 나선 비전,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라는 김구 선생의 혜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지금 문화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 하는 K- 컬처, 한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K-

민주주의의 나라로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절대 검찰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의 성과는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를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부르며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나라 한 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의 생각이 바로 당 비전이 ‘반 이재명 죽이기’로 8명의 후보가 하나같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성토대회를 만들어 버리는 후안무치한 내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아닌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막말에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전과자의 나라 만들어서야 되겠냐’는 홍준표나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독재’라고 성토하는 이철우 후보 등등, 이재명 한 사람을 놓고 늑대처럼 달려드는 1대 8의 대통령 게임에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아직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절대 권력 대통령 놀음을 하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

4월 15일 오전 10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 3천여 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액 후원으로 집

계되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후원 첫날 약 9억 854만원을 모금했고, 두 달 동안 3만 1천여 명이 후원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두 배의 인원이 후원에 참여한 K-민주주의의 오늘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늘 이재명이 세 번째로 써 내려간 K-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킬 K-민주주의 정치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 평가받은 제주의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팍 이겼수다’라는 대선 드라마가 제21대 상머슴으로 경상도 안동 가난한 촌놈 대통령의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게 된다.



朝鮮日報 2025년 04월 18일  
1면 (후고)

#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홍준표 글

홍준표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책에는 홍준표의 30년 정치 역경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진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철학,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시크로드  
Sikroad  
값: 18,000원  
시행에 있습니다.  
구입문의: 031-955-6333

(K4-S12.70cm)

▲ 조선일보 2025년 4월 18일자 1면

朝鮮日報 2025년 04월 21일  
1면 (후고)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연합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령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K4-S12.60cm)

▲ 조선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6   |
| <b>언론사</b>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동아일보 2025년 4월 17일자 1면 하단 광고<br>2. 동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東亞日報 2025년 04월 17일 1면 (총 1면)

#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홍준표 글

홍준표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책에는 홍준표의 30년 정치 역정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진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책, 철학,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시크로드  
Sikroad  
간: 18,000원  
시청에 있습니다.  
구입문의: 031-955-6333

185\*9\*15.5cm

▲ 동아일보 2025년 4월 17일자 1면

東亞日報 2025년 04월 21일 2면 (총 2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185\*9\*15.5cm

▲ 동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의 결 번호

제21대 대선-자심20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25년 4월 17일자 31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유도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5년 4월 17일 31면 (제21대 대선)

트럼프, 1석2조 ① & ② 원해

김문수·한덕수·나경원 《드림팀》 만들라! 《성남 이재명파》 제압하라!

① 관세협상 성공 모델 ② 이재명 밀어내기 | (대선 당권 분리) 전제로 드라마 연출하라

《국면의 전환》을 어떤 관제와 기조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떤 담론에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비전으로 완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듯 고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만큼 어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선은 국민의힘의 행사가 아니란 뜻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포괄 정책의 별명이 걸린 행사**란 뜻이다. **《제2의 관국》** 초상이 될까?

《성남 이재명파》와 싸울 자유의 투사는?

미국이나 63 대선에서 자유 국민의 **선명함** 할 **적(敵)**은 예시로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다. 저들은 **《민주평화민중민주주의(N) 체계 혁명 끝》**이다. 그중에서도 일말이 가장 심하다는 **《성남 이재명파》**다.

그런 그는 주권이권을 절경군이 불린다. 《공공연》 《세》라 하면 된다. 복에는 **《우의 길잡이-길잡이 선대》의 **성공이 결핵이신 안 된다**고 했다. 《선명 평론 뇌물 조로 800만 달러 송금》 혐의로 재판 중이다. UN 결의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완전 세계 대상》** 일보 직전**

▲ 이재명파 이재명파의 연호 정체를 보면 알 수 있다. 000000 있다. 《세》는 전술병을 떠올리게 한다. 1인당 현금 250만(13조원 소)으로 움직이는 배후세력의 체제를 생각하게 한다. 김문수(재정)를 무서워하는 이재명파 정권이 47%는 수백억 미화권-대금(3조)을 느낀다고 하는 국민도 있다. 한덕수 / 김문수 / 나경원 《드림팀》이 구성되면, 《성남 이재명파》 제압을 희망할 수 있다. © 뉴데일리

이러 할 수 있다.

자유인들은 이런 **《성남 이재명파》와 싸울 《자유의 투사》**로서 누가 가장 적합할지를 함께 발굴해 내야만 한다.

우리는 특히 **《김문수 / 나경원 / 한덕수》** 3인을 주목한다. **《한동훈 / 안철수》** 등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정권 좌절 후, 다른 좋은 선수를 지지하고 협력하길 바랄 뿐이다.

《역전 극장》을 준비하라

김문수 전 장관은 정진 총리자 중 단연 저자를 1위다. 어떤 조사에선 정진 총리자 한덕수 《한덕수》가 나온 걸, 사실적 노년비, 정세수에 대한 투구 등은 어떤 선수를보다도 박탈하다. 《결핵-결손-도덕성-노동 환경 제함-평생적 노약자》에서도 두보적이다.

《경제-통상외교-국제 노약자》에선 한덕수 대령이 단연 돋보인다. 한덕수 산수는 하버드 경제학박사 출신 경제통이다. **《대우-무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술관료, **《경제-외교-관세-무역 활장》**의 노련한 전문가다.

국회 정선에서 김문수-나경원 1, 2위를 한다는 관제 아래 **《김문수+한덕수+나경원》** 《한덕수+김문수+나경원》이 《드림 팀》을 짜는 **《아이돌 코스》**를 기대한다. 《대통령 / 국무총리 / 당 대표》 등을 놓고서.

한국 자유 보수 우파의 대선 승리를 담보하고 자유대한

트럼프의 미국이 보내는 시그널

대미청 한국과 미국 사이엔 **《관세외교-한국의 핵무장-대중국 디커플링》** 등에서 시급히 해결할 방안이 없다.

《한덕수 vs. 트럼프 담판》은 **《최치(崔滋)의 맞수》**가 《최선의 협상》을 만들어 내는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희생》**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공적 관세협상 모델》을 제재에 만들어 보이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파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고.

렛츠고 투게더!

류근일 뉴데일리는 본보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를 통해 제공됩니다. 뉴데일리는 본보 / 전 조선일보 주필

www.newdaily.co.kr | 147-148호 2025년 4월 16일 게재 제21대 대선

NO. 14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츠 뉴데일리 콘텐츠들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재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680570 뉴데일리(주)

04-515-3300

▲ 조선일보 2025년 4월 17일자 31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24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13일자 11면 「김문수를評한다」 제하의 기고</li> <li>2.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1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제하의 기고</li> </ol>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기고

김문수를 評한다

김문수는 완전한 인간에 가깝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흠 잡을데 없는 완전 무결점의 인간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같은 정치력을 겸비하였음이 보수의 무덤이던 부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하고서 후배에게 양보할 때까지 대단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박정희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G2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자임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된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금수저 출신 같아 보이지만 그의 청춘시절은 인간 본성에 충실한 투쟁의 역사였다.

짚어지게 가난한 7남매 중에 여섯번째로 태어나서 잠을 설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나 유신 반대 투쟁으로 재학 후 복학이 되었으나 민청학련에 연루되어 또 재학되면서 학업은 포기하고 위장취업으로 노동계에 투신하여 노동운동의 전설이 된다.

그는 요즘 같은 귀족노조가 아니라 정말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쟁한 진정한 노동 운동가였다.

서노련 지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는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협의 등으로 구속되어 2년 이상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때 보안사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으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음에도 심상정 등의 후배 은거지 등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나 국회의원이자 도지사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다.

도지사로서는 철원에 있는 한센 마을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며, 1박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성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1994년 북학으로 비록 늦깎이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경영학도답게 경기지사 시절 8년만에 이룬 성과는 엄청난 것이다.

삼성반도체 평택유지, 여주 하이닉

스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S 철도설계 및 착공, 광교신도시 개발, 파주 LG 디스플레이, 광역교통연계망 설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과히 박정희 대통령에 필적 할 만한 창의력과 추진력의 소유자임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나라는 제2의 경제기적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

노조와 사법 리스크로 우리 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 하거나 외국 기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이면서, 우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일류 세계적 제조업에 기술혁신 RND를 접목시켜 획기적인 조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성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경기도를 탈바꿈 시켰듯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탈바꿈 시킬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의 따뜻한 애민정신은 성장의 낙수효과가 서민층으로 스며 들어 풍요로운 나라를 비로서 만들 유일한 지도자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성장에 목매어 왔으나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안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실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김문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과거의 행적과 실적을 자랑하거나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도 거절한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이다.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하다.

국회의원 12년, 도지사 8년을 한 사람이지만 일반 중산층 보다 가난하게 산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 이상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었는가?

더 이상 법률 전공자는 이제 그만 하면 좋겠다.

법조계 출신들은 이 나라 사회의 유리한 위치에서 이 나라를 요리하여 그들의 기득권 과 벼속만 채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질체질명의 위기로 물리고

있다.

또한 지금은 비상사국이므로 안정적 관리형 보다는 능력과 돌파력을 갖춘 인사가 제적인 시기임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서 비정치인인 윤석열을 선호한 것이었으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정치인인면서 비법조계인 경영학 전공자가 맡는 것이 자연스런 하늘의 뜻으로 보인다.

김문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겸비하였음에도 인륜의 지원이 없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대권주자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

김문수는 가장 낮은 곳의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삶의 궤적을 실천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좌우 통할 그 차례 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위험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여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이며, 질체질명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 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를 고루 갖춘 지도자라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대선 경쟁 상대인 이재명의 지지기반인 읍지에서 자수성가한 코스프레의 대척 점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이다.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 알려 지기만 하면 이재명은 게임이 될 수 없다.

위나 겸손하여 본인의 장점을 알리지 않아서 저평가된 부분 들이 제대로 조명만 된다면 이재명은 적수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사실상의 걸림돌은 국회 내부에 있음이 안타까우며, 그를 더 적나라하게 소개하기에는 나의 어휘력 부족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佛記 2569 날에 피주농부

182 X 320 mm

## 김문수를 評한다

김문수는 완전한 인간에 가깝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 무결점의 인간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같은 정치력을 겸비 하였음이 보수의 무덤이던 부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하고서 후배에게 양보할 때까지 대단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박정희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G2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자임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된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금수저 출신 같아 보이지만 그의 청춘시절은 인간 본성에 충실한 투쟁의 역사였다.

짚어지게 가난한 7남매 중에 여섯번째로 태어나서 잠을 설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나 유신 반대 투쟁으로 제적 후 복학이 되었으나 민청학련에 연루되어 또 제적되면서 학업은 포기하고 위장취업으로 노동계에 투신하여 노동운동의 전설이 된다.

그는 요즘 같은 귀족노조가 아니라 정말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쟁한 진정한 노동 운동가였다.

서노련 지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년 이상 투옥 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때 보안사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음에도 심상정 등의 후배 은거지 등을 불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다.

도지사로서는 철원에 있는 한센 마을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며, 1박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 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성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1994년 복학으로 비록 늦깎이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경영학도답게 경기 지사 시절 8년 만에 이룬 성과는 엄청난 것이다.

삼성반도체 평택 유치, 여주 하이닉스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S 철도설계 및 착공, 광고신도시 개발, 파주 LG 디스플레이, 광역교통연계망 설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과히 박정희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창의력과

추진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기적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

노조와 사법 리스크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외국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일류 세계적 제조업에 기술혁신 RND를 접목시켜 획기적인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상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경기도를 탈바꿈시켰듯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탈바꿈시킬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의 따뜻한 애민정신은 성장의 낙수 효과가 서민층으로 스며들어 풍요로운 나라를 비로소 만들 유일한 지도자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성장에 목매어 왔으나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안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김문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과거의 행적과 실적을 자랑하거나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도 거절한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이다.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하다.  
국회의원 12년, 도지사 8년을 한 사람이

지만 일반 중산층보다 가난하게 산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 이상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더 이상 법률 전공자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법조계 출신들은 이 나라 사회의 유리한 위치에서 이 나라를 요리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뺏속만 채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또한 지금은 비상시국이므로 안정적 관리형보다는 능력과 돌파력을 갖춘 인사가 제격인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서 비정치인인 윤석열을 선호한 것이었으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정치인 이면서 비법조계인 경영학 전공자가 맡는 것이 자연스런 하늘의 뜻으로 보인다.

김문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겸비하였음에도 언론의 지원이 없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대권 주자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

김문수는 가장 낮은 곳의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삶의 궤적을 실천적으로 살아온 사람

으로서 좌우 통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위협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여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이며, 절체절명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를 고루 갖춘 지도자라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대선 경쟁 상대인 이재명의 지지기반인 음지에서 자수성가한 코스프레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다.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 알려지기만 하면 이재명은 게임이 될 수 없다.

워낙 겸손하여 본인의 장점을 알리지 않아서 저평가된 부분들이 제대로 조명만 된다면 이재명은 적수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사실상의 걸림돌은 국힘 내부에 있음이 안타까우며, 그를 더 적나라하게 소개하기에는 나의 어휘력 부족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佛紀 2569 날에

파주농부

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외세도, 경제도 아니다.

바로 국내에 뿌리박은 '내란세력' 그 중심에 선 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내란의 본질은 무력만이 아니다.

현정을 파괴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조작하는 정치 공작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내란이다.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있다.

탄핵도, 선거도, 입법도, 사법도 모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법치가 아닌 보복정치의 도가니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후보를 기대할 수 없다.

모두가 부족하다.

최선의 후보를 찾기 어렵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현정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이재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괜찮다.

단 한 사람,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도록,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피로 지겨운 자유민주주의를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 6·3 대선에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달라.

이재명만은 결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소한의 선택이다.

독자 청모 씨

182 × 98 mm

▲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1면

##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외세도, 경제도 아니다.

바로 국내에 뿌리박은 '내란세력' 그 중심에 선 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내란의 본질은 무력만이 아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조작하는 정치 공작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내란이다.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있다.

탄핵도, 선거도, 입법도, 사법도 모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법치가 아닌 보복정치의 도가니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후보를 기대할 수 없다.

모두가 부족하다.

최선의 후보를 찾기 어렵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이재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괜찮다.

단 한 사람,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도록,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 6·3대선에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달라.

이재명만은 결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소한의 선택이다.

독자 정모 씨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25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자유일보(자유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자유일보 2025년 5월 16일자 14면 만평 「3권장악...」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변형 및 재구성한 만평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자유일보 2025년 5월 16일자 14면

### 3. 주의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18일자 6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제하의 기사</li><li>2.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22일자 7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제하의 기사</li><li>3.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25일자 1면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제하의 기사</li></ol>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 여론조사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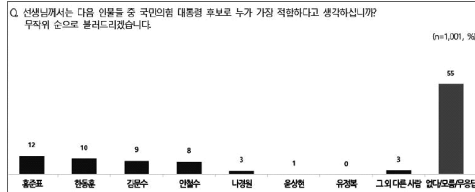
한동훈 > 김문수 > 안철수

'반드시' 적극 투표층 82%

국민의힘이 오는 22일까지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을 통해 4명의 2차 진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국민의회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0%,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 4위권에 진입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3%, 윤상현 의



원 1%, 그 외 다른 사람 3%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없다'는 48%, '모름/무응답'은 7%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대별로 홍 후보는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23%로 타 후보를 압도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각각 14%, 19%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홍 후보(17%)와 안 후보(16%)가 엇비슷했다. 40대에서는 한 후보와 안 후보가 9%로 같았다.

지역별 서울(13%), 인천·경기(10%)에서는 홍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17%)에서는 한 후보

가, 광주·전라(10%)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1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16%)과 강원·제주(16%)에서는 홍 후보가 가장 앞섰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2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한동훈 19%,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4%로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인 '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홍준표·한동훈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가 20%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한동훈 12%,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5%였다.

중도층의 경우 한동훈이 12%로 가장 앞섰고, 이어 안철수 10%, 홍준표 8%, 김문수 5%, 나경원 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이 82%로 나타났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2%였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투표층(전혀 + 별로)은 6%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74)의 92%, 국민의힘 지지층(n=302)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기자 (23.6~14.1)cm

### ▲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18일자 6면

#### 보도내용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 여론조사 맛보기

한동훈>김문수>안철수

'반드시' 적극 투표층 82%

국민의힘이 오는 22일까지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을 통해 4명의 2차 진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국민의회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0%,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로, 4위권에 진입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3%, 윤상현 의원 1%, 그 외 다른 사람 3%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없다'는 48% '모름/무응답'은 7%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대별로 홍 후보는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23%로 타 후보를 압도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각 14%, 19%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홍 후보(17%)와 안 후보(16%)가 엇비슷했다. 40대에서는 한 후보와 안 후보가 9%로 같았다.

지역별 서울(13%), 인천·경기(10%)에서는 홍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17%)에서는 한 후보가, 광주·전라(10%)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1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16%)과 강원·제주(16%)에서는 홍 후보가 가장 앞섰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2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한동훈 19%,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4%로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인 '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홍준표·한동훈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가 20%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한동훈 12%,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5%였다.

중도층의 경우 한동훈이 12%로 가장 앞섰고, 이어 안철수 10%, 홍준표 8%, 김문수 5%, 나경원 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82%로 나타났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2%였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 투표층(전혀 + 별로)은 6%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74)의 92%, 국민의힘 지지층(n=302)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정권 연장' 여론 앞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로 4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김문수 후보가 18.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동훈 후보 14.9%, 3위 홍준표 후보 12.4%, 4위 안철수 후보 9.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선틀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집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타 후보에 비해 강한 보수 핵심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차 경선이 3강 2중으로 전개되는 양상에서 전체 집계의 4위는 안철수 후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집계 결과에선 나경원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 최종 4인 경선 진출에 막판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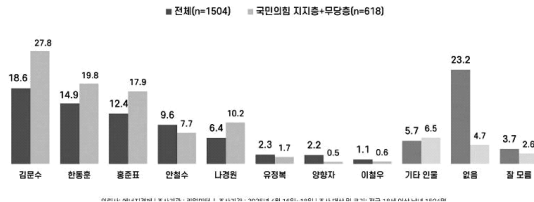
또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 한 반면,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15.8%포인트 벌어졌다.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의 '집무실 세종 이전·총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총청권과 영남권 정책공약으로 표심 공약을 하면서, 충청권과 PK, 50대, 진보층 지지층 결집에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리얼미터의 4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민주당은 2.0%P 높아진 48.7%, 국민의힘은 0.2%P 낮아진 32.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1.4%P 낮

###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아진 4.2%, 개혁신당은 0.2%P 높아진 2.9%, 진보당은 변동없는 0.8%, 기타 정당은 1.3%P 낮아진 2.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높아진 8.4%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0.3%P ↑), 부산·울산·경남(8.1%P ↑), 광주·전라(6.1%P ↑), 여성(2.6%P ↑), 50대(10.4%P ↑), 70대 이상(3.7%P ↑), 20대(3.3%P ↑), 진보층(7.3%P ↑), 농림어업(12.2%P ↑), 무직/은퇴/기타(6.1%P ↑), 자영업(4.8%P ↑)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7.7%P ↓), 인천·경기(2.2%P ↓), 40대(3.3%P ↓), 60대(3.3%P ↓)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4.9%P ↓), 부산·울산·경남(3.9%P ↓), 50대(10.4%P ↓), 진보층(5.7%P ↓), 자영업(5.6%P ↓)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7.6%P ↑), 인천·경기(2.3%P ↑), 광주·전라(2.1%P ↑), 70대 이상(5.2%P ↑), 20대(2.6%P ↑), 40대(2.0%P ↑), 보수층(2.3%P ↑), 학생(3.8%P ↑), 무직/은퇴/기타(2.6%P ↑), 가정주부(2.3%P ↑)에서는 상승했다.

또 차기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 여론은 2월 말(4주차) 이후 8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권 우위 구도가 지속되면서 정치 지형이 야권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68.7%) 선호가 정권 연장(27.4%) 여론보다 크게 앞서며 야권 출립 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대구·경북(TK)과 60·70세 이상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도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여론이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의힘으로선 경고등이 커

진셈이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 의견이 전 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9.9%,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1.0%포인트 하락한 34.3%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5.6%포인트로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5.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역별 대부분의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호남권(정권 연장 21.7% vs 정권교체 75.7%)에서 가장 우세했다.

이어 서울(33.9% vs 61.6%), 인천/경기(33.8% vs 60.2%), 충청권(33.2% vs 60.2%), PK(36.3% vs 57.3%) 순이었다. TK(49.5% vs 42.9%)에서는 정권연장의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 연장 22.3% vs 정권교체 74.2%), 50대(22.0% vs 74.0%), 30대(35.6% vs 59.7%), 20대(37.2% vs 54.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48.0% vs 41.8%)과 60대(44.8% vs 50.0%)에서는 정권연장의 의견이 앞섰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0.3%가 정권연장론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6.9%는 정권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25.4%)보다 정권교체(47.0%) 의견이 많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 내에서의 68.7%가 정권연장을, 진보층 내에서의 93.0%는 정권교체를 기대했고,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27.4%)보다 정권교체(68.7%) 쪽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김성태기자  
(17.7-29.0)cm

##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정권 연장' 여론 앞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김문수 후보가 18.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동훈 후보 14.9%, 3위 홍준표 후보 12.4%, 4위 안철수 후보 9.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선률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집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타 후보에 비해 강한 보수 핵심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차 경선이 3강 2중으로 전개되는 양상에서 전체 집계의 4위는 안철수 후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집계 결과에선 나경원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 최종 4인 경선 진출에 막판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15.8%포인트로 벌어졌다.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의 '집무실 세종 이전·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PK, 50대, 진보층 지지층 결집에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리얼미터의 4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민주당은 2.0%p 높아진 48.7%, 국민의힘은 0.2%p 낮아진 32.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1.4%p 낮아진 4.2%, 개혁신당은 0.2%p 높아진 2.9%, 진보당은 변동 없는 0.8%, 기타 정당은 1.3%p 낮아진 2.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높아진 8.4%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0.3%p ↑), 부산·울산·경남(8.1%p ↑), 광주·전라(6.1%p ↑), 여성(2.6%p ↑), 50대(10.4%p ↑), 70대 이상(3.7%p ↑), 20대(3.3%p ↑), 진보층(7.3%p ↑), 농림어업(12.2%p ↑), 무직/은퇴/기타(6.1%p ↑), 자영업(4.8%p ↑)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7.7%p ↓), 인천·경기(2.2%p ↓), 40대(3.3%p ↓), 60대(3.3%p ↓)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4.9%p ↓), 부산·울산·경남(3.9%p ↓), 50대(10.4%p ↓), 진보층(5.7%p ↓), 자영업(5.6%p ↓)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7.6%P ↑), 인천·경기(2.3%P ↑), 광주·전라(2.1%P ↑), 70대 이상(5.2%P ↑), 20대(2.6%P ↑), 40대(2.0%P ↑), 보수층(2.3%P ↑), 학생(3.8%P ↑), 무직/은퇴/기타(2.6%P ↑), 가정주부(2.3%P ↑)에서는 상승했다.

또 차기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 여론은 2월 말 (4주차) 이후 8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권 우위 구도가 지속되면서 정치 지형이 야권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68.7%) 선호가 정권 연장(27.4%) 여론보다 크게 앞서며 야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대구·경북(TK)과 60·70세 이상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도 정권 연장과 정권교체 여론이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의힘으로선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 의견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9.9%,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1.0%포인트 하락한 34.3%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5.6%포인트로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5.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역별 대부분의 권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호남권(정권 연장 21.7% vs 정권교체 75.7%)에서 가장 우세했다.

이어 서울(33.9% vs 61.6%), 인천/경기(33.8% vs 60.2%), 충청권(33.2% vs 60.2%), PK (36.3% vs 57.3%) 순이었다. TK(49.5% vs 42.9%)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 연장 22.3% vs 정권교체 74.2%), 50대(22.0% vs 74.0%), 30대(35.6% vs 59.7%), 20대(37.2% vs 54.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48.0% vs 41.8%)과 60대(44.8% vs 50.0%)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0.3%가 정권 연장론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6.9%는 정권 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25.4%)보다 정권 교체(47.0%) 의견이 많이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 내에서의 68.7%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내에서의 93.0%는 정권 교체를 기대했고,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연장(27.4%)보다 정권교체(68.7%) 쪽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한동훈 > 김문수 > 안철수  
25% 의견 유보 표심 변수**



국힘 21대 대통령 후보를 3차 경선을 통해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동훈·김문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본선에서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여, 응답자 정치 성향별 다른 표심도 드러냈다.

24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날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은 홍준표 후보 23%, 한동훈 후보 22%, 김문수 후보 19%, 안철수 6%를 각각 선택했다.

다만, '없다'(21%)와 '모름·무응답'(4%)이 25%로 4명 중 1명이 의견을 유보해, 향후 이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연결

대별로 살펴보면 홍 후보가 20세 이하(42%), 30대(31%), 40대(26%)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50대에서는 한 후보가 27%, 김 후보가 26%로 비슷했고, 홍 후보는 19%로 집계됐다. 60대에서는 한 후보가 30%, 김 후보는 28%, 70대 이상에서는 35%로 동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 후보가 29%, 홍 후보가 27%, 한 후보가 25%, 안 후보는 5%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8%, 기타는 6%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한 후보와 홍 후보가 17%로 같았고, 안 후보 7%, 김 후보 5%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한 후보가 17%였고 홍 후보(12%), 안 후보(9%), 김 후보(7%)가 뒤를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은 당내 경선 이후 본선 경쟁력에서 중도 확장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24%, 홍 후보 23%, 한 후보 19%로 나타나, 중도층의 민심과 보수층의 민심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16%, 홍 후보가 15%, 김 후보가 12%로 오차범위 내 3파전을 벌였고 안 후보는 7%로 집계됐다. 다만 없다는 42%, 모름·무응답은 3%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6.1%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응답률 20%,표본오차 ±3.1),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느냐'는 질문엔,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후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의견 유보'(없다+모름/무응답)가 49%로 가장 높았다.

국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순으로, 김 후보가 가장 높았다. 보수층(n=311)에서도 김문수(26%)가 1위를 기록했고, 중도층(n=331)에서는 홍준표(14%)가 가장 높았고, 한동훈·안철수(각각 12%)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태기자

(17.6\*17.9)cm

▲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25일자 1면

## 보도내용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한동훈>김문수>안철수

25% 의견 유보 표심 변수

국힘 21대 대통령 후보를 3차 경선을 통해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동

훈·김문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본선에서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여, 응답자 정치 성향별 다른 표심도 드러냈다.

24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날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은 홍준표 후보 23%, 한동훈 후보 22%, 김문수 후보 19%, 안철수 6%를 각각 선택했다.

다만, '없다'(21%)와 '모름·무응답'(4%)이 25%로 4명 중 1명이 의견을 유보해, 향후 이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홍 후보가 20세 이하(42%), 30대(31%), 40대(26%)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50대에서는 한 후보가 27%, 김 후보가 26%로 비슷했고, 홍 후보는 19%로 집계됐다. 60대에서는 한 후보가 30%, 김 후보는 28%, 70대 이상에서는 35%로 동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 후보가 29%, 홍 후보가 27%, 한 후보가 25%, 안 후보는 5%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8%, 기타는 6%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한 후보와 홍 후보가 17%로 같았고, 안 후보 7%, 김 후보 5%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한 후보가 17%였고 홍 후보(12%), 안 후보(9%), 김 후보(7%)가 뒤를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은 당내 경선 이후 본선 경쟁력에서 중도 확장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24%, 홍 후보 23%, 한 후보 19%로 나타나, 중도층의 민심과 보수층의 민심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16%, 홍 후보가 15%, 김 후보가 12%로 오차범위 내 3파전을 벌였고 안 후보는 7%로 집계됐다. 다만 없다는 42%, 모름·무응답은 3%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6.1%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응답률 20%, 표본오차  $\pm 3.1$ ),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느냐'는 질문엔,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후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의견 유보'(없다+모름/무응답)가 49%로 가장 높았다.

국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순으로, 김 후보가 가장 높았다. 보수층(n=311)에서도 김문수(26%)가 1위를 기록했고, 중도층(n=331)에서는 홍준표(14%)가 가장 높았고, 한동훈·안철수(각각 12%) 순으로 나타났다.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2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이투데이(이투데이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18일자 8면 「시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제하의 기사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들의 AI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였으며,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2항 제2호,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AI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 민주당 후보 3인 평가

**이재명 "전국민 AI 활용"**  
AI 단과대학·GPU 5만개 확보  
실현 가능성 있지만 재원 물음표

**김경수 "민관 AI 투자"**  
세금 더 걷고 50조원 기금 마련  
자금 조달 확실하지만 국민 부담

**김동연 "AI 인프라 확충"**  
GPU 100만개 비축 비현실적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념 부합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을 분석한 후 이재명, 김경수 예비후보의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17일 본지가 생성형 AI '퍼플렉시티'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AI 공약을 정리해 분석 및 평가를 맡긴 결과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이념 부합성 3가지로 설정했고, AI에 종합 평가

**AI가 평가한 민주당 AI 공약**

\* 출처: 퍼플렉시티

- 전 국민 AI 활용
- AI 단과대 설립
- GPU 5만개 확보

- 5대 첨단기술 육성
- 50조 기금 조성
- 조세부담을 22%로 늘려 재원 마련

- AI 인프라 확충
- 100만 GPU 확보
- 해외 인재 유치



**이재명 후보**

|        |      |
|--------|------|
| 경제적 효과 | ★★★★ |
| 실현 가능성 | ★★★★ |
| 종합 평가  | ★★★★ |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생태계 전략



**김경수 후보**

|        |      |
|--------|------|
| 경제적 효과 | ★★★★ |
| 실현 가능성 | ★★★★ |
| 종합 평가  | ★★★★ |

실현 가능한 재원 계획 중심 정책



**김동연 후보**

|        |      |
|--------|------|
| 경제적 효과 | ★★★★ |
| 실현 가능성 | ★★★  |
| 종합 평가  | ★★★★ |

과감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음

및 별점을 매길 것을 주문했다. AI는 세 후보 공약의 공통점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AI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세 후보 모두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약의 중반에선 세 후보가 비슷했지만, 각론인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AI는 평가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만큼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념 부합성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와 김경수 후보의 정부 주도 혁신이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별로 보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선 김동연 후보가 별 5개로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를 앞섰다. AI는 김동연

후보의 김경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 △혁신적 인재 유치 전략 △선제적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재 유치, 안전망 구축을 통해 AI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과 전 국민 AI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기술 분야 육성 및 정부 주도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

대한다고 봤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정부 주도 AI 서비스의 민간 경쟁력 저해 우려, 김경수 후보에 대해선 중세를 통한 경제적 부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후보는 별 3개, 김동연 후보는 별 2개를 기록했다. AI는 김경수 후보에 대해 조세부담을 인상(17%→22%)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기금을 조성하는 등 경제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GPU 5만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등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점진적 확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100만 GPU는 현재 전

세계 GPU 생산량의 10%를 점유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이고,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며 국내 인재 양성 체계가 약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었다고 봤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도 꼽았다.

종합 평가는 이재명,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별 3개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육성 계획, 김경수 후보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김동연 후보는 혁신적인 인재 유치 및 안전망 구축 방안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정성욱 기자 saikoku@

345 × 224 mm

▲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18일자 8면

### 보도내용

## AI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 민주당 후보 3인 평가

**이재명 "전국민 AI 활용"**  
AI 단과대학·GPU 5만개 확보  
실현 가능성 있지만 재원 물음표

**김경수 "민관 AI 투자"**  
세금 더 걷고 50조원 기금 마련  
자금 조달 확실하지만 국민 부담

## 김동연 "AI 인프라 확충" GPU 100만개 비축 비현실적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념 부합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을 분석한 후 이재명, 김경수 예비후보의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17일 본지가 생성형 AI ‘퍼플렉시티’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AI 공약을 정리해 분석 및 평가를 맡긴 결과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이념 부합성 3가지로 설정했고, AI에 종합 평가 및 별점을 매길 것을 주문했다.

AI는 세 후보의 공약 공통점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AI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세 후보 모두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약의 총론에선 세 후보가 비슷했지만, 각론인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AI는 평가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만큼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념 부합성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와 김경수 후보의 정부 주도 혁신이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별로 보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선 김동연 후보가 별 5개로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를 앞섰다. AI는 김동연 후보의 강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 △혁신적 인재 유치 전략 △선제적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재 유치, 안전망 구축을 통해 AI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과 전

국민 AI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기술 분야 육성과 정부의 혁신 위험 부담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봤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정부 주도 AI 서비스의 민간 경쟁력 저해 우려, 김경수 후보에 대해선 증세를 통한 경제적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후보는 별 3개, 김동연 후보는 별 2개를 기록했다. AI는 김경수 후보에 대해 조세부담률 인상(17%→22%)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기금을 조성하는 등 증세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접근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GPU 5만 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등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점진적 확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100만 GPU는 현재 전 세계 GPU 생산량의 10%를 점유해야 달성가능한 수치이고,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며 국내 인재 양성 체계가 약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자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도 짚었다.

종합 평가는 이재명,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별 3개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육성 계획, 김경수 후보는 현실적인 자원 마련 방안, 김동연 후보는 혁신적인 인재 유치 및 안전망 구축 방안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4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일보사(광주일보)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25년 4월 14일자 17면 하단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州日報

2025년 4월 14일 17면 (하단)

깨·능·통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

대한민국 대통령  
짚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유정복 1차

출생아 수 증가율(%)  
(2024.1.-12.기준)

| 지역 | 출생아 수 증가율(%) |
|----|--------------|
| 전국 | 3.6          |
| 인천 | 11.0         |
| 대구 | 7.5          |
| 서울 | 5.3          |
| 부산 | 5.1          |
| 충청 | 5.0          |
| 충남 | 4.5          |
| 울산 | 4.0          |
| 경기 | 3.6          |

실질경제성장률(%)  
(2024년 동기청 공표자료)

| 지역 | 실질경제성장률(%) |
|----|------------|
| 전국 | 1.4        |
| 인천 | 4.0        |
| 대전 | 3.6        |
| 울산 | 3.2        |
| 경북 | 3.2        |
| 제주 | 3.0        |
| 강원 | 2.7        |
| 경남 | 2.2        |
| 광주 | 1.4        |

DH미디어  
도서관문의 02-2272-9731

159-18.02m

▲ 광주일보 2025년 4월 14일자 17면

제1부

심의를결사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7   |
| <b>언론사</b>    | 국민일보 주식회사(국민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국민일보 2025년 4월 18일자 29면 하단 광고<br>2. 국민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1면 하단 광고<br>3. 국민일보 2025년 4월 22일자 28면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br>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일보
2025년 4월 18일  
29면 (오리니언)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본설실장

값 22,000원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양자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31.4\*16.4)cm

▲ 국민일보 2025년 4월 18일자 29면

국민일보 2025년 4월 21일 11면 (종합)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난세의 영웅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약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값 22,000원

행복에너지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31.4.16.40cm)

▲ 국민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1면

국민일보 2025년 4월 22일 28면 (종합)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난세의 영웅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약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값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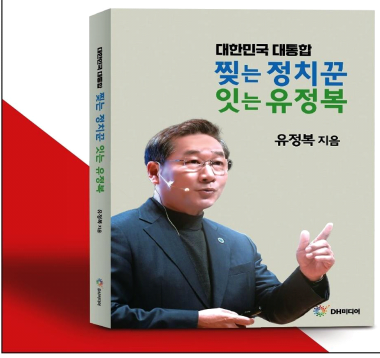
행복에너지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31.4.16.40cm)

▲ 국민일보 2025년 4월 22일자 28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8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경기신문사(경기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1.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br>2.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하단 광고   |
| <b>주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기신문 2025년 04월 21일  
월요일 (종합)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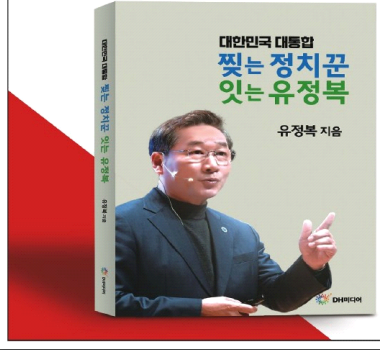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S.9-13.0cm)

▲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

경기신문 2025년 04월 21일 (월)  
종합 01A면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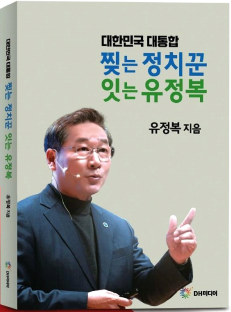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57 X 138 mm

▲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9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경기일보(경기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하단 광고<br>2.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7면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  
04:28 (수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 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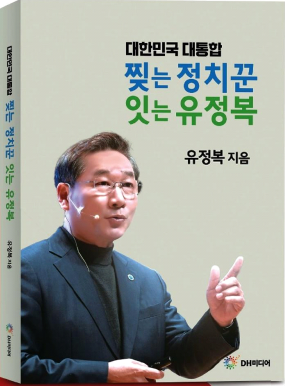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5.9-13.30cm

▲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  
07:28 (수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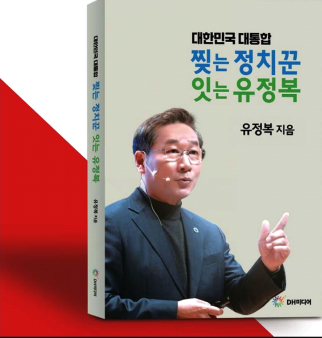
05.9-16.60cm

▲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7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0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경인일보(경인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하단 광고<br>2.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  
이론(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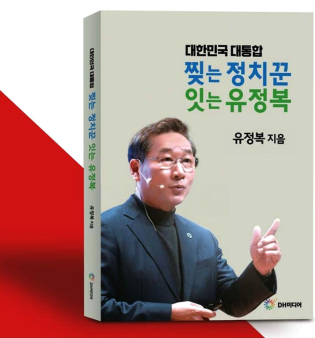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369-13.83cm

▲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  
이론(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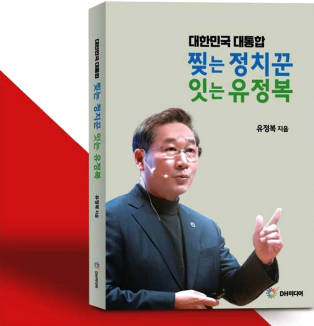
0370-14.33cm

▲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1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기호일보(기호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하단 광고<br>2.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  
1면 (1802)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59-13.00cm

▲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기호일보

2025년 04월 21일 (월)  
종합 01A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55 X 129 mm

▲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2   |
| <b>언론사</b>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대전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대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하단 광고  |
| <b>주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대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3   |
| <b>언론사</b>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매일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매일신문 2025년 4월 21일자 9면 하단 광고  |
| <b>주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每日新聞
2025년 04월 21일  
9면(하단)

###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관문의 (02-2272-9731)  
(05.2-18.30cm)

▲ 매일신문 2025년 4월 21일자 9면

제1부  
심의·의결 사례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4   |
| <b>언론사</b>    | 주식회사 문화일보(문화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문화일보 2025년 4월 21일자 31면 하단 광고   |
| <b>주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문화일보
2025년 4월 21일  
31면 (오르디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값 22,000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행복에너지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bddata@hanmail.net ☎ 010-3993-6277

(33.9\*14.5)cm

▲ 문화일보 2025년 4월 21일자 31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5   |
| <b>언론사</b>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브릿지경제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브릿지경제신문 2025년 4월 23일자 18면 하단 광고  |
| <b>주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브릿지경제
2025년 04월 23일 18면 (인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용복 지음

값 22,000원

# 난세의 영웅 김문수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회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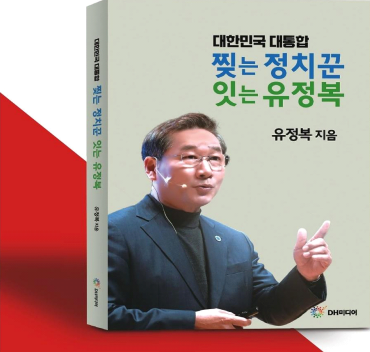
(18.3\*16.0)cm

▲ 브릿지경제신문 2025년 4월 23일자 18면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6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인천일보(인천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br>2.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경기판)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  
화요일 (음력 3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꾼  
찢는 유정복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청(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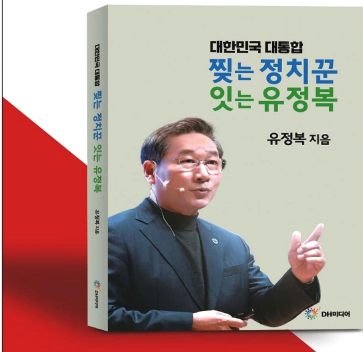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9)9-13.5cm

▲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  
화요일 (음력 3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꾼  
찢는 유정복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청(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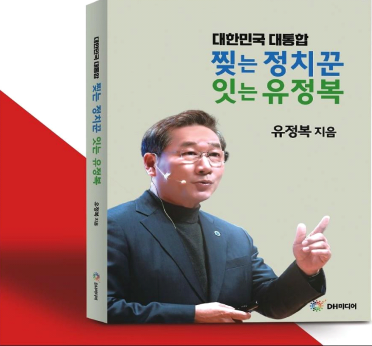
(9)9-14.13cm

▲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경기관)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7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중부일보(중부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1.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br>2.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중부일보

2025년 04월 21일  
1면 (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위임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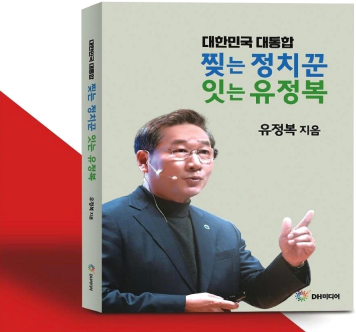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6.4×13.1)cm

▲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중부일보

2025년 04월 21일  
1면 (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위임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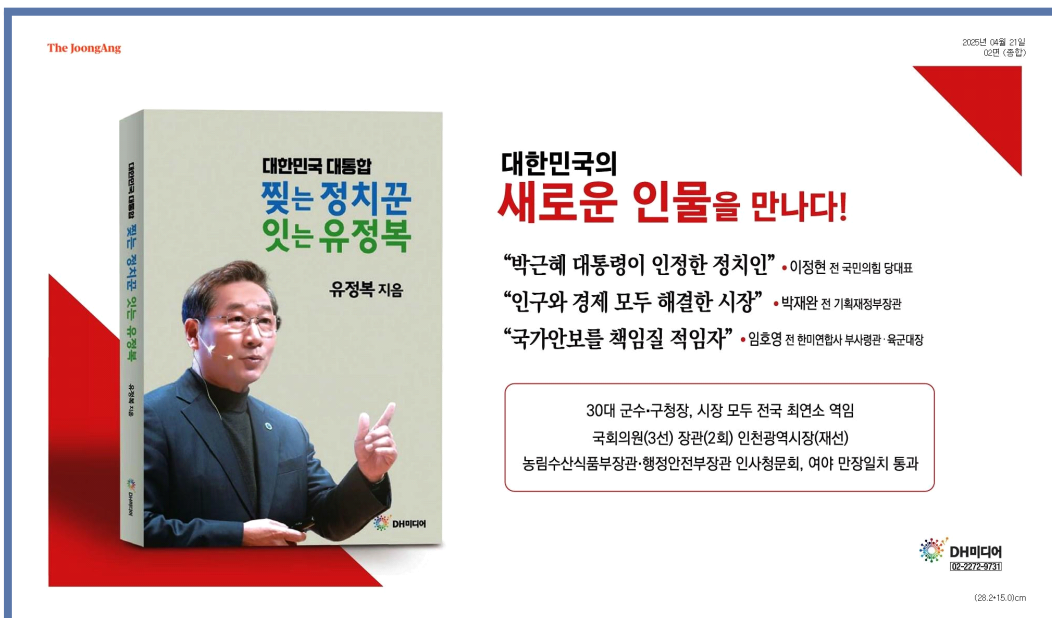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6.2×13.0)cm

▲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8   |
| <b>언론사</b>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b>심의대상기사</b> | 중앙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중앙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 4. 권고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19   |
| <b>언론사</b>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경향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경향신문 2025년 4월 25일자 26면 하단 광고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향신문
2025년 4월 25일자  
26면 (오르디너)

**이재명의서재**  
이재명 대통령의 100권의 책들

'소년공' 이재명은 어떤 책들을 읽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는가?

— 이재명을 만든 100권의 책들 —

## 이재명의서재

'이재명 서재'에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본 이재명 제대로 읽기!

이 책은 단순한 정치인의 독서 일지가 아니다.  
그의 책장은 백 권의 책이 아닌,  
백 개의 인생이다.

▶ 세계는 지금 트럼프를 비롯한 스트롱맨 시대!

**트럼프 2.0 시대와 스트롱맨들**  
트럼프·푸틴·사진핑·모디·에르도란의 시대

슈퍼맨이 된 스트롱맨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재명 서재 | Tel 02-322-3333 / Fax 02-333-5678

이재은 저음 | 신국판 | 400쪽 | 2도 인쇄 | 값 2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트럼프 저음 | 신국판 | 25도 인쇄 | 392쪽 | 값 22,000원

(05.9-18.50cm)

▲ 경향신문 2025년 4월 25일자 26면

## 5. 안내문 송부

|               |  |
|---------------|--|
| <b>의결번호</b>   | 제21대 대선-자심22   |
| <b>언론사</b>    | 주식회사 이투데이(이투데이신문)  |
| <b>심의대상기사</b>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25일자 6면 「불리한 질문엔… 말흐리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제하의 기사</li><li>2.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16일자 4면 「李 ‘안정적 리더’ … 金 ‘기득권 탈피’ … 李 ‘젊은 전문가」 제하의 기사</li><li>3.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20일자 6면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제하의 기사</li><li>4.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23일자 6면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제하의 기사</li></ol>   |
| <b>주 문</b>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안내문 송부 조치한다.  |
| <b>이 유</b>    | <p>위 언론사는 인공지능(생성형 AI)을 활용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어휘와 표현, 몸짓과 표정, 복장, 연설 방식, 무대 구성, 발언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보도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였다.</p> <p>심의대상기사는 주목도 높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공약 외에도 후보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독창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다만, 심의대상기사에서 다룬 요소들은 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석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 해당 평가에 사용된 구체적인 지표, 기준, 질문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심의대상기사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거나, 그로 인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본 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p> <p>그러나 선거보도는 경미한 내용이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노력과 책임이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론 보도 기법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갖춘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한다.</p> |

# 불리한 질문에... 말하려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 왕이 될 상인가

### 국힘 4인 말-제스처 AI 분석

김문수 '빠져나갈 여지' 남기고  
안철수 5초간 열린 미소로 끄덕  
한동훈 공격받은 영웅 서사 조성  
홍준표 격양된 내용 느긋하게 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공격적 질문'을 받았을 때 '인 4석'의 각기 다른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본지가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g3'을 통해 후보 4인(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가나다순)이 곤란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구사한 어휘나 표현, 몸짓과 표정 등을 분석해봤다. AI는 각 후보가 '구체성 희석'(김문수), '회제 전환'(안철수), '재해석'(한동훈), '역질문'(홍준표)이란 각기 다른 방식의 방어 전략을 구사했

다고 평가했다. 전날(23일)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질문과 그에 따른 각 후보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표하느냐는 앞으로 좀 보겠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의향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I가 분석한 김문수 후보의 방어 전략은 '구체성 희석'이다. 김 후보는 '대국민 사과'란 명확한 요구를 '무엇'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했다. AI는 "(김 후보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100% 열어두어서 검증은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화법은 "듣는 쪽에선 '뭔든 해준다니 좋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먼저 느끼게 하지만, 정적 검증 가능한

국민의힘 경선후보 4인 방어 전략 \* 28일 미디어데이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 사본식

|     | 김문수 후보 '모호'   | 안철수 후보 '회제전환'   | 한동훈 후보 '재해석'   | 홍준표 후보 '역질문'  |
|-----|---|---|--|---|
| 질문  |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의향 있느냐?"  | "정당 옮기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 "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 "현대수치지 세력을 어떻게 보나?"   |
| 대답  | "국민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 "제가 노력해서 여당 됐다. 고마워해 달라."   | "유력하다는 방증이다."  |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어나?"   |
| 분석  | 모호한 단어로 답하며 압박 완화   |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전환  |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 질문자를 역공해 논쟁 축소  |
|     |  |  |  |  |
| 제스처 | 특징적인 제스처 없음   |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임  | 특징적인 제스처 없음  | 대화의 속도와 톤이 일정   |
| 분석  | -   | 긍정적인 인상 주며 불쾌감 완화   | -  | 신뢰성과 안정감 확보 전략  |

약속이 없어 (김 후보 입장에선) 빠져나갈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AI는 평가했다.

"제가 노력 (후보 단일화) 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예비후보에선 '이 정당, 저 정당을 옮겨다녔다'는 지적이 남아들었다. 과거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당적 변경이 잦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맞섰다.

AI는 안 후보의 답변에 '회제 전환' 전략이 녹아 있다고 봤다. AI는 "(안 후보가) 대화의 논점을 '당 이동여부'에서 '나의 성과'로 이동시켰다"며 "단일화를 통한 여당 창출'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자기 효능을 부각했고, 반대로 '당적 변경'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답변 말미 5

초 동안 열린 미소를 보였고, 미세하지만 고개도 수차례 끄덕였다. AI는 이를 두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스스로의 논리를 강화했고 미소를 지어보며 '내 말이 맞지?'와 같은 자기확신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공격적이고 친화적인 제스처로 '불쾌감을 완화했다'는 게 AI의 평가다.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TV 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받았다'는 질문에 한동훈 예비후보가 한 대답이다. AI는 한 후보의 '재해석 능력'에 주목했다. AI는 한 후보가 '이런까 상상' (상대 후보들의 집중된 견제)을 '훈장' (유력한 대선 후보)으로 재해석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가 "내가 공격받는 것은 능력·영향력·정당성이 크니까

말'이라는 논리를 펼쳐 빠르게 질문의 의도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공격 강도를 낮추고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이러한 방어 전략은 특히 '팬덤과 열성 지지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AI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받은 영웅'이라는 서사를 제시하면 팬덤은 단결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부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 되려고 모임을 결성했을까? 회장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홍준표 예비후보는 '현대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세력(모임)'이 없다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질문의 의도가 홍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홍 후보의 선택은 '반문' 전략이었다고 AI는 분석했

다. AI는 홍 후보가 되레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이어 던져 논쟁 공간을 좁혔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론 민주당의 패망'이라는 본인의 암묵적 결론을 주입하고 있어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봤다.

AI는 홍 후보의 '느릿한 말 속도'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봤다. AI는 홍 후보가 평균 대화 속도(약 180 wpm, 분당 단어 수)보다 10~15% 느리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질문을 통해) 격양된 내용을 말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는 침착하다'는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속·저음 발화는 '지식'이 많다, '경험이 있다'는 인상을 뒤 싹득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기자 silverash@  
04-9-28-7300

## ▲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25일자 6면

**불리한 질문엔... 말하려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왕이 될 상인가]**

**국힘 4인 말·제스처 AI 분석**

김문수 ‘빠져나갈 여지’ 남기고  
안철수 5초간 열린 미소로 끄덕  
한동훈 공격받는 영웅 서사 조성  
홍준표 격양된 내용 느긋하게 특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공격적 질문’을 받았을 때 ‘4인 4색’의 각기 다른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본지가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를 통해 후보 4인(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가나다순)이 곤란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구사한 어휘나 표현, 몸짓과 표정 등을 분석해봤다. AI는 각 후보가 ‘구체성 희석’(김문수), ‘화제 전환’(안철수), ‘재해석’(한동훈), ‘역질문’(홍준표)이란 각기 다른 방식의 방어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전날(23일)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질문과 그에 따른 각 후보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표하느냐는 앞으로 좀 보겠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I가 분석한 김문수 후보의 방어 전략은 ‘구체성 희석’이다. 김 후보는 ‘대국민 사과’란 명확한 요구를 ‘무엇’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했다. 구체적 사과 시점과 형식도 못 박지 않았다. AI는 “(김 후보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100% 열어둠으로써 검증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화법은 “듣는 쪽에선 ‘뭐든 해준다니 좋다’는 긍정적 정서를 먼저 느끼게 하지만, 정작 검증 가능한 약속이 없어 (김 후보 입장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AI는 평가했다.

“제가 노력(후보 단일화)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예비후보에겐 ‘이 정당, 저 정당을 옮겨다녔다’는 지적이 날아들었다. 과거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 당적 변경이 잦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맞섰다.

AI는 안 후보의 답변에 ‘화제 전환’ 전략이 녹아 있다고 봤다. AI는 “(안 후보가) 대화의 논점을 ‘당 이동 여부’에서 ‘나의 성과’로 이동시켰다”며 “‘단일화를 통한 여당 창출’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자기효능을 부각했고, 반대로 ‘당적 변경’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답변 말미 5초 동안 열린 미소를 보였고, 미세하지만 고개도 수차례 끄덕였다. AI는 이를 두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스스로의 논리를 강화했고 미소를 지어보여 ‘내 말이 맞지?’와 같은 자기확신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제스처로 “불쾌감을 완충했다”는 게 AI의 평가다.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TV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받았다”는 질문에 한동훈 예비후보가 한 대답이다. AI는 한 후보의 ‘재해석 능력’에 주목했다. AI는 한 후보가 “이른바 ‘상처’(상대 후보들의 집중된 견제)를 ‘훈장’(유력한 대선 후보)으로 재해석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가 “‘내가 공격받는 것은 능력·영향력·정당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쳐 빠르게 질문의 의도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공격 강도를 낮추고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이러한 방어 전략은 특히 ‘팬덤과 열성 지지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AI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받는 영웅’이라는 서사를 제시하면 팬덤은 단결을 강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부 민주당 사람들 아니던가?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 되라고 모임을 결성 했을까? 휘방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홍준표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 하는 세력(모임)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질문의 의도가 홍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홍

후보의 선택은 ‘반문’ 전략이었다고 AI는 분석했다. AI는 홍 후보가 되레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이어 던져 논쟁 공간을 좁혔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로 ‘민주당의 휘방’이라는 본인의 암묵적 결론을 주입하고 있어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봤다.

AI는 홍 후보의 ‘느릿한 말 속도’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봤다. AI는 홍 후보가 평균 대화 속도(약 180wpm, 분당 단어 수)보다 10~15% 느리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질문을 통해) 격앙된 내용을 말하면서도 말의 속도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는 침착하다’는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속·저음 발화는 ‘지식이 많다, 경험이 있다’는 인상을 쥐 설득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 李 '안정적 리더'... 金 '기득권 탈피'... 李 '젊은 전문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 3인 유세북·무대 분석해보니



| 유세북 유형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 어떻게 읽었나?       | <b>활동성 있는 비범함이 점퍼, 운동화 + 방탄복</b><br>(상의) 배색 없이 파란색 단색 (신발) 빨강·하양·파랑 조합, 파란색 신발끈으로 눈앞을 | <b>캐주얼한 야구 유니폼</b><br>흰 바탕에 소매에만 빨강 색상 배치                     | <b>와이셔츠, 정장 바지</b><br>하얀 상의  |
| 핵심 효과 (사 분석)   | - 정당 색 전반에 배치해 지지층에 안정적 이미지<br>- 비범함을 '복을 끌고 뛰는 사람'이란 연대감 형성, 지지층 결집 효과               | - 정당 색 최소화, '당 기득권과 선 곳'기<br>- 스포츠복 계열 입어 권위주의와 보수 엘리트 이미지 탈피 | - 정당 색 완전히 배제, 걸치레보다 정제 등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진정성 호소<br>- 단정함 상징 차림으로 전문성·책임감 부각 |
| 무대 구성 및 연출 포인트 | <b>적당한 거리 유지, 최단선 등 활용, 후보 및 시민 안전 확보</b>   | <b>'자랑' 들을 무대로 나와 연출, 지지자들과 악수 스킨십</b>                        | <b>시민들끼리 '반딧불 켜기'</b>  |
| 핵심 효과 (사 분석)   | - '대규모 군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인상 부여<br>- 다만 물리적·시각적 장벽이 심리적 간격 확대                      | - 시간·신체 집중을 가능하게 해 심리적 장벽 최소화<br>- '활동적이고 실감나는' 이미지 부각        | - '젊고 다짐된 친척, 생방송 스톱 가능한 인물'로 각인<br>- 동료나 친구 같은 수평적 관계 강조                |

## ▲ 왕이 될 상인가

### 후보 3인 유세북·무대 시 분석

대선주자들의 옷차림은 단순 패션이 넘어 '메시지 전달 도구'로 여겨진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 주요 후보들의 유세 복장, 연출 방식, 무대 구성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다.

15일 본지가 오픈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을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 순)의 옷차림과 유세 방식에 녹여있는 메시지·전략을 분석했다. AI는 후보 3인의 유세북에 '안정적 리더' (이재명), '기득권 탈피' (김문수), '젊은 전문가' (이준석)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란 운동화, 하얀 야구복, 정장 셔츠... 대선 후보의 유세북이 '정치적 정체성', '유권자 설득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AI는 봤다. 특히 '색조합'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밝은 배색 없는 파란(민주당 상징색) 바림락이 점퍼를 유세복으로 택했다. '동장 뿔장'을 뜻하는 붉은 계열이 일부 섞이긴 했지만, 운동화 역시 옅고와 신발끈을 파란색으로 '깔맞춤'하는 정성도 보였다. AI는 "정권 교체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후보가 파란색을 넓게 배치한 것은 기존 권력과 차별화하려 한다는 시각적 선긋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 '정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지층에 안정적 이미지로 다가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도층의 경우 '정당 색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면 타협보다는 '당 명령'을 우선할 거란 고정관념이 생겨 후보의 유연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세 첫날 이재명 후보가 '흰 방탄복'을 입은 모습은 한 차례 화제가 됐다. AI는 "복을 끌고 뛰는 사람"이라는 감정적 연대를 형성해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딱'은 하얀 야구 유니폼이었다. 흰색 바탕에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소매 부분에 배치됐다. AI는 '핵심 지지층이 바로 알아볼 수

**이재명, 파란색 바림락이 점퍼 흰 방탄복, 감정적 연대 효과 노려 '기존 권력과 달라' 시각적 선긋기**

**김문수, 하얀 야구 유니폼 택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젊음 어필 권위적·보수 엘리트 이미지 변화**

**이준석, 흰색 셔츠에 정장 바지 당 상징 주황색 과감히 벗어던져 걸치레보다 정책 등 책임감 부각**

있을 만큼의 색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립을 상징하는 색(흰색)으로 바꿔달라"며 "시각적으로 나는 기존 당 기득권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70대에도 캐주얼한 야구 유니폼을 입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권위주의와 보수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황색' (당

상징색) 유세복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는 유세 무대에 오를 때 주로 하얀색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즐겨입었다. AI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오히려 단정함 정장 형식의 복장을 유지해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덧입혔다"고 평가했다. 가벼운 걸치레보다 정책 등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했다는 분석이다.

유세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AI는 '무대 구성', '퍼포먼스'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색적인 '반딧불이 켜기'가 큰 역할을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이준석 후보는 서늘한 정계장에서 시민들을 배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야간 유세였던 만큼 시민들은 다 같이 휴대전 플레시 기능을 켜 주변을 밝혔는데, AI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후보를 둘러싼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휴대전 플레시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젊고 디지털 친화적이며 생생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공동체적 경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참어머님"이라고

대가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시가 주목한 건 '거리감'이었다. 경호 및 안전성 이유로 그의 무대엔 후보-지지자 간 차단선이 가끔 설치되곤 했다. 또 연설문 낭독은 미리 설치된 연설대 위에서 이뤄졌다. AI는 "지지자 및 시민들과의 거리 유지는 '대규모 군중'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물리적·시각적 장벽이 심리적 간격을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후보로부터 '친근한 인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자랑" 들을 무대로 이용해 지지자들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들쭉날 구간 쪽으로 걸어나와 연설을 하거나, 야간 바로 앞에 자리잡은 지지자의 손을 잡아주는 등 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AI는 "시간·신체 집중을 가능하게 해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평가했다. 또 "신박·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지지층 결속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각보다 활동적이고 상가운 인물'라는 이미지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김문석 기자 silverash@

추 '안정적 리더' ... 김 '기득권 탈피' ... 추 '젊은 전문가'

[왕이 될 상인가]

후보 3인 유세복·무대 시 분석

이재명,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

흰 방탄복, 감정적 연대 효과 노려  
'기존 권력과 달라' 시각적 선긋기

김문수, 하얀 야구 유니폼 택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젊음 어필  
권위적·보수 엘리트 이미지 변화

이준석, 흰색 셔츠에 정장 바지

당 상징 주황색 과감히 벗어던져  
겉치레보다 정책 등 책임감 부각

대선주자들의 옷차림은 단순 패션을 넘어 '메시지 전달 도구'로 여겨진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 주요 후보들의 유세 복장, 연설 방식, 무대 구성에는 구석구석 의미가 드러나 있다.

15일 본지가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의 옷차림과 유세 방식에 녹아있는 메시지·전략을 분석했다. AI는 후보 3인의 유세복에 '안정적 리더'(이재명), '기득권 탈피'(김문수), '젊은 전문가'(이준석) 이미지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또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란 운동화, 하얀 야구복, 정장 셔츠... 대선 후보의 유세복에 '정치적 정체성', '유권자 설득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AI는 짚었다. 특히 '색조합'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별다른 배색 없는 파란(민주당 상징색) 바람막이 점퍼를 유세복으로 택했다. '중도 확장'을 뜻하는 붉은 계열이 일부 섞이긴 했지만, 운동화 역시 앞코와 신발끈을 파란색으로 '깔맞춤'하는 정성도 보였다. AI는 "정권 교체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후보가 파란색을 넓게 배치한 것은 '기존 권력과 명백히 다르다'는 시각적 선 긋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지층에 안정적 이미지로 다가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도층의 경우 "정당 색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면 타협보다는 '당 명령'을 우선할 거란 고정관념이 생겨 후보의 유연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세 첫날 이재명 후보가 '흰 방탄복'을 입은 모습은 한차례 화제가 됐다. AI는 "묵숨 걸고 뛰는 사람"이라는 감정적 연대를 형성해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픽'은 하얀 야구 유니폼이었다. 흰색 바탕에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소매 부분에만 배치됐다. AI는 "핵심

지지층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색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립을 상징하는 색 (흰색)으로 비워냈다”며 “시각적으로 ‘나는 기존 당 기득권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70대임에도 캐주얼한 야구 유니폼을 입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권위주의와 보수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황색’(당 상징색) 유세복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는 유세 무대에 오를 때 주로 하얀색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즐겨입었다. AI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오히려 단정한 정장 형식의 복장을 유지해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덧입혔다”고 평가했다. 가벼운 걸치레보다 정책 등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했다는 분석이다.

유세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AI는 ‘무대 구성’, ‘퍼포먼스’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유권자들에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색적인 ‘반딧불이 셀카’가 큰 역할을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이준석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야간 유세였던 만큼 시민들은 다 같이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켜 주변을 밝혔는데, AI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후보를 동료나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휴대폰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젊고 디지털 친화적이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공동체 경험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참여·흥미·연대감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AI가 주목한 건 ‘거리감’이었다. 경호 및 안전상 이유로 그의 무대엔 후보-지지자 간 차단선이 가끔 설치되곤 했다. 또 연설문 낭독은 미리 설치된 연설대 뒤에서 이뤄졌다. AI는 “지지자 및 시민들과의 거리 유지는 ‘대규모 군중’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물리적·시각적 장벽이 심리적 간격을 확대한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후보로부터 ‘친근한 인간미’를 느낄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T자형’ 돌출 무대를 이용해 지지자들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돌출된 구간 쪽으로 걸어나와 연설을 하거나, 무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지지자의 손을 잡아주는 등 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AI는 “시각·신체 접촉을 가능하게 해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신뢰·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지지층 결속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각보다 활동적이고 살가운 원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 TV토론 발언 패턴과 전략 의도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상 유세, TV 토론회 등은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가장 많이 생중계되는 드문 기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본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전수 분석한 내용을 전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번이면 의도’라는 관점에서 주자들의 말 속에 담긴 정치경제적 세계관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코너를 마련했다.

대선 주자들의 단어 빈도수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포섭”,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결집”,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 접근 차별화”, 권영국 후보는 “인보 가치 표현”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간 첫 TV토론 결과에 대해 AI는 토론의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안정적 토론으로 중도층 포섭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집포기’ 인 기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 접근과 상대 논리 비판으로 타 후보들과 차별화했다고 봤다. 권영국 후보는 진보적 가치 표현에 주력, 제한적 지지층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19일 본지가 생성형 AI를 통해 각 후보로 전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각 후보가 사용한 단어의 빈도와 토론 수행 평가를 살펴본 발언 패턴과 전략적 의도를 분석한 결과,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단어와 프레임은 통해 각 후보의 정치적 방향과 선거 전략을 파악해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경제성장”을 12회, “국익”을 8회, “한미동맹”을 7회, “중국”을 6회 언급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실리주의적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재생에너지”, “첨단산업·AI”, “문화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 전문성 이미지를 내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AI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국익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봤다. 다만

대선후보별 TV토론 단어 언급 빈도수 및 종합 평가 \* 출처: 19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첫 TV토론 후보자별 발언 생중계 분석 결과 본지 정리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     |         |    |         |
|-----|---------|----|---------|
| 12회 | 경제·경제성장 | 8회 | 국익·국익중심 |
| 8회  | 한미동맹    | 7회 | 상장      |
| 6회  | 중국      | 6회 | 중상·동상협상 |

**종합 평가**  
- 균형 외교·포용 경제정책 제시 - 방어적 태도  
- 정책 실행보다 ‘국단적 프레임’에 치중

**국민의힘 김문수**

|    |      |    |         |
|----|------|----|---------|
| 9회 | 일자리  | 8회 | 기업      |
| 6회 | 한미동맹 | 7회 | 규제      |
| 5회 | 트럼프  | 5회 | 신약·초상권인 |

**종합 평가**  
- 기업 친화 정책, 일자리 창출 메시지  
- 내린 관련 유야담 - 트럼프 관계 심조한 현실적 통상 접근

**개혁신당 이준석**

|    |    |    |      |
|----|----|----|------|
| 8회 | 중국 | 7회 | 성장   |
| 5회 | 경제 | 4회 | 미국   |
| 4회 | 경제 | 4회 | 과제기술 |

**종합 평가**  
- 비판·논박 강행, 경제·외교 날카로운 분석  
- 정책 비판 설명 부족 - 전문성·논리 확보에 치중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     |
|----|-----|----|-----|
| 7회 | 불명등 | 6회 | 트럼프 |
| 5회 | 한국  | 5회 | 미국  |
| 5회 | 중상  | 4회 | 노동자 |

**종합 평가**  
- 노동자 권리·불명등 해소 메시지  
- 진보층에 강한 메시지 - 성장 의제 구체성 부족

- **경제·국익 균형적 시각**
- **AI 등 신성장산업 육성 비전 제시**
- **실리외교·중도 실용 구축 주력**
- **중·초기업 활동 촉진 강조**
- **한미동맹 강화로 보수 결집 노력**
-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
- **이준석, 세대교체 이미지 어필**
- **권영국 ‘진보적 의제’ 중점**
- **중·부상 경제계·이재명 정책 비판**
- **불명등 해소 문제 등 제시 명확**
- **예리한 공략 토론 스타일 선보여**
- **경제성장 구체적 해법 없어 한계**

토론 과정에서 “국단화시키지 말라”는 등 ‘국단적·국단화’ 표현을 8회 언급하며 방어적 태도로 구체적 반박에 소극적이었던 것 평가했다. 강점으로 경제·국익에 대한 균형적 시각과 분배·성장을 함께 강조하는 포용적 경제정책 등이 꼽혔다. 약점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호털 경제학’ 비판에 다소 방어적 대응, 대학 사업의혹 해명 미흡, 재원 마련 방안 구체성 부족 등이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9회), ‘기업’(8회), ‘규제’(7회)를 자주 언급하며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미동맹’(6회), ‘트럼프’(5회), ‘신약’(5회)도 강조하며 강한 한미동맹 등 전통적 보수 가치를 강조했다. ‘초상권인’(4회), ‘금융자랑’(2회) 등을 언급하며 중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패턴은 중소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하며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와의 ‘신뢰’ 관계를 부각시키며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는 대응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봤다. 김 후보의 강점으로 명확한 중소기업 정책과 보수 가치의 일관성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내린 사태 관련 공격 대응 부족, 경기도지사 상과 부각 미흡, 중도층 설득력 등이 언급됐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8회), ‘성장’(7회), ‘과학기술’(4회), ‘생산성’(4회) 등을 핵심으로 활용하며 실력 중심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을

8회나 언급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고, ‘정책발전’(3회), ‘데이터센터’(3회), ‘에너지저장장치(ESS)’(2회)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AI는 이준석 후보가 논리적이고 상대의 약점을 예리하게 공략하는 토론 스타일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젊은 후보로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기반 접근법을 강조하며 세대교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호털 경제학’과 풍악발전 정책을 지적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논리적 접근과 전문성 과시는 강점으로 일 부 비판 지점과 자신의 정책 비전 설명 부족 등은 약점으로 꼽혔다.

권영국 후보는 ‘불명등’(7회), ‘노동자’(6회), ‘트럼프’(6회), ‘차별’(4회), ‘내란’(4회) 등의 단어를 통해 사회 정의와 불명등 해소 등 진보적 의제를 최우선 가치로 선포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그는 ‘노동자’(6회), ‘최저임금’(2회)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씨’(7회), ‘내란’(4회) 언급을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트럼프’(6회), ‘관세’(5회), ‘맞시다·싸우다’(2회) 등을 통해 대미 중속적 관계를 비판했다.

AI는 권 후보가 불명등 해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실질적 현상 전 막은 모호하다고 봤다. 권 후보가 내린 불명등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낸 점은 강점으로 경제 성장의 구체적 해법 부재와 부정적 이미지로 중도층 설득에 제한적인 점은 약점이라고 봤다. 정성욱 기자 sajjokuk@

(38·95·13cm)

## 보도내용

###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 [킹스피치 해례본]

#### TV토론 발언 패턴과 전략 의도

##### 李, 경제·국익 균형적 시각

AI 등 신성장산업 육성 비전 제시

실리외교·중도 실용 구축 주력

##### 金, 친기업 활동 촉진 강조

한미동맹 강화로 보수 결집 노력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

##### 이준석, 세대교체 이미지 어필

中 부상 경계심·이재명 정책 비판

예리한 공략 토론 스타일 선보여

##### 권영국 ‘진보적 의제’ 중점

불평등 해소 문제 등 제시 명확

경제성장 구체적 해법 없어 한계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가감 없이 생중계되는 드문 기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본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전수 분석한 내용을 전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번이면 의도’라는 관점에서 주자들의 말 속에 담긴

정치경제적 세계관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코너를 마련했다.

대선 주자들의 단어 빈도수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포섭’,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결집’,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 접근 차별화’, 권영국 후보는 ‘진보 가치 표현’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간 첫 TV토론 결과에 대해 AI는 토론회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안정적 토론으로 중도층에 대한 포섭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인 기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 접근과 상대 논리 비판으로 타 후보들과 차별화됐다고 봤다. 권영국 후보는 진보적 가치 표현에 주력, 제한적 지지층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19일 본지가 생성형 AI 클로드를 기반으로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각 후보가 사용한 단어의 빈도와 토론 수행 평가를 실시해 발언 패턴과 전략적 의도를 분석한 결과다.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단어와 프레임을 통해 각 후보의 정치적 지향점과 선거 전략을 파악해봤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경제성장’을 12회, ‘국익’을 8회, ‘한미동맹’을 7회, ‘중국’을 6회 언급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실리주의적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재생에너지’, ‘첨단산업·AI’, ‘문화 산

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 전문성 이미지를 내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AI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국익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봤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극단화시키지 말라”는 등 ‘극단적·극단화’ 표현을 8회 언급하며 방어적 태도로 구체적 반박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점으로는 경제·국익에 대한 균형적 시각과 분배·성장을 함께 강조하는 포용적 경제정책 등이 꼽혔다. 약점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호텔 경제학’ 비판에 다소 방어적 대응, 대북 사업 의혹 해명 미흡, 재원 마련 방안 구체성 부족 등이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9회), ‘기업’(8회), ‘규제’(7회)를 자주 언급하며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한미동맹’(6회), ‘트럼프’(5회), ‘신뢰’(5회)도 강조하며 강한 한미동맹 등 전통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했다. ‘소상공인’(4회), ‘금융지원’(2회)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패턴은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하며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와의 ‘신뢰’ 관계를 부각시키며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는 대응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봤다. 김 후보의 강점으로는 명확한 친기업 정책과 보수 가치의 일관성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내란 사태 관련 공격 대응 부족, 경기도지사 성과 부각 미흡, 중도층 설득력 등이 언급됐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8회), ‘성장’(7회), ‘과학

기술’(4회), ‘생산성’(4회) 등을 핵심어로 활용하며 실력 중심 접근법을 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을 8회나 언급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고, ‘풍력발전’(3회), ‘데이터센터’(3회), ‘에너지저장장치(ESS)’(2회)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AI는 이준석 후보가 논리적이고 상대의 약점을 예리하게 공략하는 토론 스타일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젊은 후보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기반 접근법을 강조하며 세대교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평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과 풍력발전 정책을 지적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논리적 접근과 전문성 과시는 강점으로, 일부 비판 치중과 자신의 정책 비전 설명 부족 등은 약점으로 꼽혔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7회), ‘노동자’(6회), ‘트럼프’(6회), ‘차별’(4회), ‘내란’(4회) 등의 단어를 통해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적 의제를 최우선 가치로 선명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그는 ‘노동자’(6회), ‘최저임금’(2회)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씨’(7회), ‘내란’(4회) 언급을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트럼프’(6회), ‘관세’(5회), ‘맞서다·싸우다’(2회) 등을 통해 대미 종속적 관계를 비판했다.

AI는 권 후보가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실질적 협상 전략은 모호하다고 봤다. 권 후보가 내란·불평등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낸 점은 강점으로, 경제 성장의 구체적 해법 부재와 투쟁적 이미지로 중도층 설득에 제한적인 점은 약점이라고 봤다.

#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 AI가 될 상인가

### 포섭·설득 능력 AI 분석

빅데이터와 단일화 문제기 대선 막판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후보의 '포용력'이 시합대에 올랐다. 후보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포섭·설득 능력을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22일 본지는 오픈AI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o3'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이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분석했다. 상대편을 설득할 때의 표정과 제스처, 화법, 대화장 소 선택 등을 분석 요소로 삼았다.

시는 각 후보를 '무대 힘으로 편에 세우는 사람'(이재명), '칭찬으로 끌어들이는 사람'(김문수),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준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퍼포먼스형, 교감은 짧은 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용력이 대중에게 가장 명확히 각인됐던 순간은 유세지판에 올랐을 때였다. 이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서 어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발단한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 자신의 통합 행보가 무르익고 있음을 대중에 알렸다.

AI는 이재명 이 후보가 보수진영 인물 영입을 공식화하는 장소로 유세자를 선택한 점에 대해 "군중 앞 환영 퍼포먼스로 의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일반 대중이 자라한 열린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 지층에 '상대'를 당당히 품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게 AI 분석이다. 첫 대안의 순간도 주목했다. 이 후보는 무대 위로 올라온 김 의원의 손을 끌어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잡겠어"라고 격려했는데, 이에 대해 AI는 "스킨십으로 심리적 거리를 급속히 좁혔다"며 긍정적으로 보았다.

다만 직후 이 후보가 김 의원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도 시선과 몸의 방향은 정중을 향해 있었던 점 등에서 "형식적 환영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며 "시선은 주로 정중을 뒤 상대와의 직접 교감을 줬다"

AI가 분석한 후보별 포섭 포인트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b>이재명</b>   | 국민의힘 <b>김문수</b>   | 개혁신당 <b>이준석</b>  |
| <b>상황</b> 반대 진영 소속이었던 인물을 영으로 영입  | <b>상황</b> 한번 거절당한 상대에게 단입과 리브를  | <b>상황</b> 자신을 설득하러 온 자를 잘 타이르기   |
| <b>장소</b> 유세지판 위  | <b>장소</b> 공적 행사장  | <b>장소</b> 대학 캠퍼스 내 야외 테일룸  |
| <b>효과</b> 군중 앞에서 외면 확장  | <b>효과</b> 연문·행사 관계자 있는 자리인 만큼 상대편에 심리적 압박   | <b>효과</b> 자연관 아레나서 '화해' 분위기 조성   |
| <b>표정·제스처</b> 적극적 포옹, 시선은 군중에   | <b>표정·제스처</b> 적극적인 손짓   | <b>표정·제스처</b> 상대편에 기본 울, 미소 유지   |
| <b>효과</b> 스킨십으로 심리적 거리 축소, 시선 처리로 인해 직접 교감은 들쭉날쭉                                  | <b>효과</b> '숨기는 게 없다'는 메시지로 진정성 부각   | <b>효과</b> 수용적 태도 강조  |
| <b>화법</b> "기분 스피치 한번 하세요"   | <b>화법</b> "MVP는 이준석"  | <b>화법</b> "하심찬의 편에게 말하자"   |
| <b>효과</b> 지지층 호소로 병행  | <b>효과</b> 연속된 칭찬으로 감정적 호소   | <b>효과</b> 민관합 요구를 편한 대화로 프래임 전환  |

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기분 스피치 한번 하세요"라고 권유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에게 김 의원을 소개했다"는 대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와의 직접 교감이 들쭉날쭉하다"고 보았다.

◇김문수: 칭찬 화법, 공개적 압박 = 보수 진영에선 '단입화 공방'의 두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대립하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단 앞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단입화 리브를'을 거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재차 공개 구애를 보냈다. 토론화장은 이 후보만 애, 좌측 화법과 행사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었다.

AI는 김 후보가 "공개석과 현장 열기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상대방 입장에선 거듭 거절하면 '협박 화법' 이미지를 감수해야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이재명, 퍼포먼스로 외연 넓혀 상대와의 직접 교감은 들쭉날쭉

김문수, 감정적 호소로 친화전파 '단입화 리브를' 공개적으로 압박

이준석, 상대 발언 수용태도 보여 '햇빛 아래 화해' 대담함 강조도

것"이라고 보았다. AI가 특히 주목한 건 발언 내용이었다. 김 후보가 "과잉 칭찬"이란 설득 화법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회 MVP는 이준석", "고생 끝 대 성공을 터트렸다"와 같은 발언으로 이 후보를 추켜세웠는데, "논리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집중하는 친화 전략을 썼다"는 게 AI의 분석이다. 오른쪽 손을 꼭 퍼 붙인 내내 적극적인 몸짓을 한 점은 "내가 숨기는 게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진정성을 부각했다"고 보았다.

◇이준석: 미소 유지, 대담함 강조 = 이준석 후보는 한때 '양측' 관계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마주 보고 앉았다. '단입화 시월단'을 지지한 안 의원이 이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21일 직접 그의 유세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 후보 입장에선 최근 겨우 개선된 상대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포섭과 설득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AI는 이 후보의 '경청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처음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서 착석할 때 상대를 상대편 쪽으로 많이 기울였는데, 이를 두고 AI는

"상대 발언을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까운 거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아이컨택을 지속한 점, 대화 내내 미소를 유지한 점 등에도 높은 점수를 평점을 부여했다. 두 사람은 가천대 캠퍼스 내 야외 테일룸에서 마주 보고 대화했다. AI는 "자연관 아레나에서 '화해' 분위기 조성"을 뜻하는 상징적 무대라며 "과거 양측이 미소를 '햇빛 아래 화해'라는 서사로 전환하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정 후보의 당사자나 캠프 사무실이 아닌, 관점에서 '합계' 대등성을 암시했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3년 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서 안 의원과)는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AI는 "단입화'로 민관합 요구를 같은 편(안)의 편한 대화'로 프래임 전환해 새틀게 편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괴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왕이 될 상인개]**

**'포섭·설득 능력' AI 분석**

이재명, 퍼포먼스로 외연 넓혀  
상대와의 직접 교감은 들쭉날쭉

김문수, 감정적 호소로 친화전략  
'단일화 러브콜' 공개적으로 압박

이준석, 상대 발언 수용태도 보여  
'햇빛 아래 화해' 대등함 강조도

빅텐트와 단일화 문제가 대선 막판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후보의 '포용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후보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포섭·설득 능력을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22일 본지는 오픈AI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o3'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이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야 할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분석해봤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의 표정과 제스처, 화법, 대화 장소 선택 등을 분석 요소로 삼았다.

AI는 각 후보를 '무대 힘으로 편에 세우는 사람'(이재명), '칭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

(김문수),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준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퍼포먼스형, 교감은 짧은 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용력이 대중에게 가장 명확히 각인됐던 순간은 유세차량에 올랐을 때였다. 이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올려 자신의 통합 행보가 무르익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렸다.

AI는 이처럼 이 후보가 보수진영 인물 영입을 공식화하는 장소로 유세차를 선택한 점에 대해 "군중 앞 환영 퍼포먼스로 외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일반 대중들이 자리한 열린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지층에 '상대를 당당히 품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게 AI 분석이다. 첫 대면의 순간도 주목했다. 이 후보는 무대 위로 올라온 김 의원의 손을 끌어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잘했어"라고 격려했는데, 이에 대해 AI는 "스킨십으로 심리적 거리를 급속히 좁혔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직후 이 후보가 김 의원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도 시선과 몸의 방향은 청중을 향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형식적 환영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며 "시선은 주로 청중에 뒤 상대와의 직접 교감은 짧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게 "1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라고 권유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에게 김 의원을 소개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와의

직접 교감이 들쭉날쭉하다”고 봤다.

◇김문수: 칭찬 화법, 공개적 압박 =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공방’의 두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딱하니 대면하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단 앞에 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단일화 러브콜’을 거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재차 공개 구애를 보였다. 토론 회장엔 이 후보뿐 아니라 취재진과 행사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었다.

AI는 김 후보가 “공개성과 현장 열기를 극대화 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상대방 입장에서선 거듭 거절하면 ‘협력 회피’ 이미지를 감수해야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AI가 특히 주목한 건 발언 내용이었다. 김 후보가 “과잉 칭찬”이란 설득 화법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회 MVP는 이준석”, “고생 끝 대성공을 터트렸다”와 같은 발언으로 이 후보를 추켜세웠는데, “논리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집중하는 친화 전략을 썼다”는 게 AI의 분석이다. 오른쪽 손을 짝 펴 발언 내내 적극적인 몸짓을 한 점은 “내가 숨기는 게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진정성을 부각했다”고 봤다.

◇이준석: 미소 유지, 대등함 강조 = 이준석 후보는 한때 ‘양숙’ 관계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마주보고 앉았다. ‘단일화 사절단’을 자처한 안 의원이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21일 직접 그의 유세 현장을 찾은 것

이다. 이 후보 입장에서선 최근 겨우 개선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포섭과 설득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AI는 이 후보의 ‘경청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처음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착석할 때 상체를 상대방 쪽으로 많이 기울였는데, 이를 두고 AI는 “상대 발언을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가까운 거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아이컨택을 지속한 점, 대화 내내 미소를 유지한 점 등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두 사람은 가천대 캠퍼스 내 야외 테이블에서 마주 보고 대화했다. AI는 “자연광이 드는 장소는 ‘새 출발’과 ‘화해’를 뜻하는 상징적 무대”라며 “과거 양숙 이미지를 ‘햇빛 아래 화해’라는 서사로 전환하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봤다. 특정 후보의 당사나 캠프 사무실이 아니란 점에서 “관계의 대등성을 암시했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3년 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과는)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AI는 “‘단일화’란 민감한 요구를 ‘같은 편끼리의 편한 대화’로 프레임 전환해 새롭게 판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 부록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4. 10. 3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신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의고려사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에 따른 영향력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 제 2 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4.10.30.>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24.10.30.>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5. 삭제 <2024.10.30.>

**제6조(정치적 중립성)**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주장·공약 등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우
2. 삭제 <2024.10.30.>

### 제 3 장 세 부 심 의 기 준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 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0. 삭제 <2024.10.30.>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개정 2024.10.30.>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삭제 <2024.10.30.>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인터뷰 또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이나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 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왜곡 또는 변형하여 게재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2. 선거와 관련한 견해나 반응,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옹호 또는 비하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삭제 <2024.10.30.>

**제10조(사진게재)**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 #### 4. 삭제 <2024.10.30.>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칼럼 등을 게재한 경우
- #### 4. 삭제 <2024.10.30.>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 4. 삭제 <2024.10.30.>

## 제 4 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7.2.13.>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개정 2024. 5. 24. 규칙 제2024-5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4.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5.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안건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

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선거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에 선거법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로 인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이미 위촉된 심의위원은 해당 선거를 위한 심의위원으로도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 순위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위원장

2.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선거법 제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2.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 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와 관련한 의견진술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원심 결정의 효력은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지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⑨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회부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청구회부인인 경우)
4. 반론보도청구대상 기사 전문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회부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5.>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 부 칙 〈규칙 제2024-5호〉

이 규칙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비고 |
|----|------|----|----|
|    |      |    |    |

첨 부 : 본인승낙서 및 비당원확인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 본인승낙서 및 비당원확인서

|    |    |  |      |        |    |  |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직업 |  |
|    | 한자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      | e-mail |    |  |
| 학력 |    |  |      |        |    |  |
| 경력 |    |  |      |        |    |  |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정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 3. 7.>

② 삭제 <2004. 3. 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예비후보자”는“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 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 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 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순위헌, 2023헌바78,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사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첨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 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의대상 매체 목록

### ■ 총 420개 매체

- 일간지 165개(중앙 31, 지역 및 기타 134)
- 주간지 232개(중앙 26, 지역 206)
- 월간지 10개(중앙 8, 지역 2)
- 뉴스통신 13개

#### 1) 일간지 165개

|                               |           |  |
|-------------------------------|-----------|--|
| 중앙<br>일간지<br>(31)             | 종합일간지(13)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키이데일리, 자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                               | 경제지(11)   | 뉴스토마토, 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브릿지경제신문, 서울경제,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                               | 스포츠지(7)   | 데일리스포츠한국,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한국스포츠경제   |
| 지역<br>및<br>기타<br>일간지<br>(134) | 서울(20)    | 내외일보, 매일일보, 산경일보, 새한일보, 서울매일, 서울일보, 선경일보, 세계타임즈, 시민일보, 시사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신문, 일간투데이, 천지일보, 한성일보             |
|                               | 경기/인천(21) | FACE WORLD,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대한투데이, 도민일보, 문화매일신문,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대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신문, 중부일보, 현대일보 |
|                               | 충북(6)     |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
|                               | 대전/충남(9)  |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투데이충남  |
|                               | 강원(2)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
|                               | 대구/경북(18) |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신문, 경북연합일보, 경북일보, 경북일일신문, 경상매일신문, 경상투데이, 경안일보, 대경일보, 대구경북일보, 대구광역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세명일보, 영남일보, 일간경북신문                    |
|                               | 경남(8)     |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양산신문, 창원일보   |
|                               | 부산/울산(8)  |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파이낸셜뉴스, 경상일보, 울산광역시매일,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
|                               | 전북(15)    | 새만금일보, 새전북신문, 전라매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중앙신문, 전북타임즈, 전주매일, 전주일보, 호남제일신문, 전북금강일보                                      |
|                               | 광주/전남(17) | The대한일보, 광남일보, 광전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남도일보, 드림투데이, 무등일보, 전광투데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남저널,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
|                               | 제주(5)     | 삼다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일보, 한라일보   |
|                               | 기타 (5)    | 농민신문, 디지털타임스, 메트로, 전자신문, 환경일보  |

## 2) 주간지 232개

|                    |              |  |
|--------------------|--------------|--|
| 중앙<br>주간지<br>(26)  | 잡지(14)       | 매경이코노미, 미래한국, 시사IN, 시사뉴스, 시사오늘, 시사저널, 위클리뉴시스,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리뷰,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
|                    | 타블로이드(7)     | 뉴스포스트, 스페셜경제,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 현대, 중앙선데이   |
|                    | 기타주간지(5)     |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시사경제신문, 여성신문, 이뉴스투데이   |
| 지역<br>주간지<br>(206) | 서울(32)       |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뉴스, 광진투데이, 구로오늘신문, 구로 타임즈신문, 금천신문, 마포타임즈, 마을신문 금천in, 노원신문, 동작신문, 서대문사람들, 서울강북신문, 서울송파신문, 성동신문, 시사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시대, 영등포신문, 영등포 투데이, 은평시민신문, 일요주간, 종로저널, 중구자치신문,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
|                    | 인천/경기(29)    | 가평타임즈, 강화투데이, 경기북부시민신문, 경기헤럴드, 김포신문, 군포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새수원신문, 시흥자치신문, 안산뉴스,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여주신문, 용인시민신문, 연수신문, 자치안성신문, 주간 고양신문, 주간 민안신문, 파주에서, 파주저널, 파주타임즈,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하남신문   |
|                    | 대전/세종/충남(18) | 계룡일보, 공주신문, 금산소식, 논평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당진신문, 당진투데이, 보령신문, 서산타임즈, 서천신문, 세종매일, 아산미래신문, 주간 태안신문, 청양신문, 충남신문, 홍성신문, 홍주신문  |
|                    | 충북(8)        | 괴산타임즈,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옥천신문, 옥천향수신문, 중부광역신문, 중부포커스, 충청리뷰  |
|                    | 강원(13)       |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종합복지신문, 영월신문, 원주신문, 원주투데이, 정선신문, 주간 설악신문, 철원신문사, 한결신문, 홍천신문, 횡성신문, 횡성희망신문  |
|                    | 대구/경북(27)    | 경북 중부신문, 경북문화신문, 경산신문, 경주신문, 고령군민신문, 고령신문, 군위신문, 김천 내일신문, 김천인터넷신문, 대구매거진, 봉화일보, 새김천신문, 서라벌신문, 성주신문, 안동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울진신문, 의성군민신문, 주간 고향신문, 주간 경산자치신문, 주간 김천신문, 주간 문경, 주간 예천신문, 주간 청도신문, 청도일보, 칠곡신문   |
|                    | 경남(25)       | 거제신문, 거창한들신문, 경남연합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시사신문, 고성신문, 남해미래신문, 남해시대, 남해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서부경남신문, 의령신문, 주간 한산신문, 주간함양,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안신문, 함양군민신문, 함양신문, 합천신문, THE함안신문  |
|                    | 부산/울산(5)     | 기장일보,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울산시민신문, 울산저널   |
|                    | 전북(16)       |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 신문, 무주신문, 부안서림신문, 새군산신문, 순창신문, 열린순창, 익산신문, 익산열린신문, 주간 군산신문, 주간 김제신문, 주간 완주전주신문,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
|                    | 광주/전남(32)    | 강진신문, 강진일보, 곡성일보, 광양만신문, 광양시민신문, 광양신문, 광양경제, 구례일보, 나주토픽, 담양곡성타임즈, 담양군민신문, 담양뉴스, 담양매일신문, 담양자치신문, 무안신문, 무안신안뉴스, 무안타임즈, 목포시민신문, 여수신문, 여수투데이, 영암군민일보, 영암군민신문, 우리군민신문, 완도신문, 예향진도신문, 장강신문, 주간장성신문, 함평군민신문, 함평신문,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JINDO TODAY                        |
|                    | 제주(1)        | 서귀포신문  |

### 3) 월간지 10개

|                  |        |  |
|------------------|--------|--|
| 중앙<br>월간지<br>(8) | 종합지(8) | 더 리더(the Leader), 시사뉴스피플,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지방시대, 플리피플 |
| 지역 월간지 (2)       |        | 영등포포커스, 시사전북   |

### 4) 뉴스통신 13개

|          |  |
|----------|--|
| 뉴스통신(13) | 국제뉴스, 내외뉴스통신, 뉴스1코리아, 뉴스웍스, 뉴스핌통신,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연합뉴스, NSP뉴스통신, KNS뉴스통신, KPI뉴스통신, 서울뉴스통신, 열린뉴스통신 |
|----------|--|

## 5. 색인

### 1) 결정유형별

| 구분           | 결정유형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면수  |
|--------------|--------------|--------------|---------|-----|
| 자체심의         | 경고결정문 게재     | 제21대 대선-자심21 | 전라매일    | 62  |
|              |              | 제21대 대선-자심23 | 내외뉴스통신  | 86  |
|              |              | 제21대 대선-자심26 | 경북연합일보  | 111 |
|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3  | 전라매일    | 114 |
|              |              | 제21대 대선-자심5  | 조선일보    | 121 |
|              |              | 제21대 대선-자심6  | 동아일보    | 123 |
|              |              | 제21대 대선-자심20 | 조선일보    | 125 |
|              |              | 제21대 대선-자심24 | 경북연합일보  | 126 |
|              |              | 제21대 대선-자심25 | 자유일보    | 133 |
|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  | 일간경북신문  | 134 |
|              |              | 제21대 대선-자심2  | 이투데이신문  | 142 |
|              |              | 제21대 대선-자심4  | 광주일보    | 145 |
|              |              | 제21대 대선-자심7  | 국민일보    | 146 |
|              |              | 제21대 대선-자심8  | 경기신문    | 148 |
|              |              | 제21대 대선-자심9  | 경기일보    | 150 |
|              |              | 제21대 대선-자심10 | 경인일보    | 152 |
|              |              | 제21대 대선-자심11 | 기호일보    | 154 |
|              |              | 제21대 대선-자심12 | 대전일보    | 156 |
|              |              | 제21대 대선-자심13 | 매일신문    | 157 |
|              |              | 제21대 대선-자심14 | 문화일보    | 158 |
|              |              | 제21대 대선-자심15 | 브릿지경제신문 | 159 |
|              |              | 제21대 대선-자심16 | 인천일보    | 160 |
| 제21대 대선-자심17 |              | 충부일보         | 162     |     |
| 제21대 대선-자심18 | 중앙일보         | 164          |         |     |
| 권고           | 제21대 대선-자심19 | 경향신문         | 165     |     |
| 안내문 송부       | 제21대 대선-자심22 | 이투데이신문       | 166     |     |

## 2) 언론사별

| 구분   | 언론사명    | 결정유형         | 의결번호         | 면수  |
|------|---------|--------------|--------------|-----|
| 자체심의 | 경기신문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8  | 148 |
|      | 경기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9  | 150 |
|      | 경북연합일보  | 경고결정문 게재     | 제21대 대선-자심26 | 111 |
|      |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24 | 126 |
|      | 경인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0 | 152 |
|      | 경향신문    | 권고           | 제21대 대선-자심19 | 165 |
|      | 광주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4  | 145 |
|      | 국민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7  | 146 |
|      | 기호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1 | 154 |
|      | 내외뉴스통신  | 경고결정문 게재     | 제21대 대선-자심23 | 86  |
|      | 대전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2 | 156 |
|      | 동아일보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6  | 123 |
|      | 매일신문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3 | 157 |
|      | 문화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4 | 158 |
|      | 브릿지경제신문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5 | 159 |
|      | 이투데이신문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2  | 142 |
|      |         | 안내문 송부       | 제21대 대선-자심22 | 166 |
|      | 인천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6 | 160 |
|      | 일간경북신문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  | 134 |
|      | 자유일보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25 | 133 |
|      | 전라매일    | 경고결정문 게재     | 제21대 대선-자심21 | 62  |
|      |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3  | 114 |
|      | 조선일보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5  | 121 |
|      |         | 경고           | 제21대 대선-자심20 | 125 |
| 중부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7 | 162          |     |
| 중앙일보 | 주의      | 제21대 대선-자심18 | 164          |     |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안내

|                      |   |
|----------------------|---|
| 서울사무처 및<br>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br>대표전화 : 02) 397 - 3114<br><b>선거기사심의 관련 문의 : 02) 397 - 3151~3</b><br>언론분쟁상담 : 02) 397 - 3000, 3010, 3100, 3110, 3111 |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br>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  |
|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br>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   |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br>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  |
| 대전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MBC 8층<br>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  |
| 경기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9층<br>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  |
| 강원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1층<br>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  |
| 충북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404호<br>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   |
| 전북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405호<br>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  |
| 경남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3호<br>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   |
| 제주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다모양빌딩 3층<br>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   |



---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

**발행일** 2025년 8월 29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선거기사심의팀(02-397-3151~3)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작** (주)계문사(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